

2016 통일외식조사

전환기 통일 · 대북정책 방향은?

일시 2016.9.29(목) 13:30~18:00

장소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목련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토론회 진행순서

13:30~13:40 개회사 정근식 통일평화연구원장

제1회의 [조사결과 발표] 2016 통일의식 조사결과

13:40~15:40 사 회 전재성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장)

• 통일과 대북 인식

송영훈 (강원대),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대북정책과 주변국 인식

장용석, 최규빈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이념, 당파성, 그리고 통일의식

정동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남북관계악화 책임에 대한 인식: 북한, 한국 그리고 강대국

김병조 (국방대)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과 사회통합

황정미 (고려대)

제2회의 [패널토론] 전환기 통일·대북정책 방향은?

16:00~18:00 사 회 박명규 (서울대, 전 통일평화연구원장)

패 널 김수암 (통일연구원)

김천식 (우석대, 전 통일부차관)

이상철 (성신여대, 전 국방부 군비검증단장)

조동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부원장)

목 차

조사연구 개요	009
발표 1 : 통일에 대한 인식	015
송영훈 (강원대)	
발표 2 : 대북인식	027
대북인식 (요약)	042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발표 3 : 대북정책 인식	047
대북정책 인식 (요약)	091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발표 4 : 주변국 관계 인식	097
주변국 관계 인식 (요약)	109
최규빈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발표 5 : 이념, 당파성, 그리고 통일의식	121
이념, 당파성, 그리고 통일의식 (요약)	130
정동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발표 6 :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인식: 북한, 한국 그리고 강대국	139
김병조 (국방대)	
발표 7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변화와 다문화 수용성	161
황정미 (고려대)	

2016 통일의식조사

전환기 통일 · 대북정책 방향은?

조사연구 개요

통일의식의 분화와 역동성

: 2016 통일의식조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6년 9월 29일 금요일, 호암교수회관

1. 조사 주관기관과 대행기관



IPUS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2. 조사방법 및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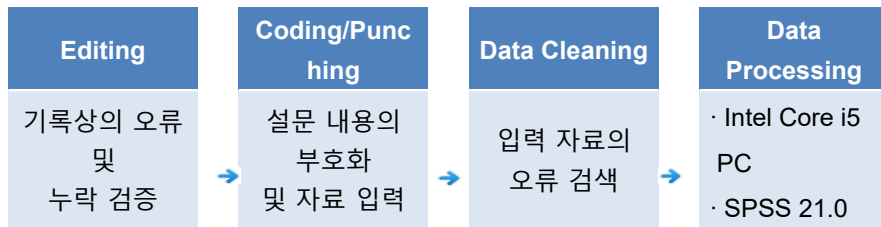
구 분	내 용
조사방법	전문 면접원에 의한 1:1 개별면접조사(Face-to-Face Interview)
자료수집도구	구조화된 질문지 (Structured Questionnaire)
조사기간	2016년 7월 1일 ~ 7월 22일 (22일간)

3. 표본설계

구 분	내 용
모 집 단	전국 16개시도 만 19세 이상 74세 이하 성인 남녀
표 본 크 기	1,200명 (유효표본)
표본추출방법	다단계 층화 계통 추출법 (Multi-Stage Stratified Systematic Sampling)
표 본 오 차	± 2.8% (95% 신뢰수준)

4. 자료처리

수집된 자료(Raw Data)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프로그램으로 전산처리를 하였음



가중치(Weight): 조사결과는 시/도별(16개 수준), 성별(2개 수준), 연령별(6개 수준)로 모집단(2016년 6월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 행정안전부) 분포를 반영하여 모집단과 표본의 특성이 일치하도록 보정하는 가중치 작업 후 처리

5. 응답자 특성

구분		조사	
		사례수	%
전체		(1,200)	100.0
▣ 성별 ▣	남자	(609)	50.6
	여자	(591)	49.4
▣ 연령별 ▣	19 ~ 29 세	(205)	17.4
	30 대	(237)	19.7
	40 대	(274)	22.9
	50 대 이상	(263)	21.8
▣ 교육수준별 ▣	중졸 이하	(136)	10.8
	고졸	(585)	49.9
	대재 이상	(477)	39.2
	무응답	(2)	0.1
▣ 직업별 ▣	농 / 수 / 축 산 업	(25)	1.7
	자 영 업	(254)	21.7
	블 루 칼 라	(339)	28.4
	화 이 트 칼 라	(230)	19.2
	전 업 주 부	(222)	18.5
	학 생 / 무 직 / 기 타	(130)	10.6

5. 응답자 특성

구 분		조사 표본	
		사례수	%
전 체		(1,200)	100.0
▣ 가구소득수준 ▣	2 0 0 만 원 미 만	(147)	11.2
	2 0 0 ~ 2 9 9 만 원	(209)	17.0
	3 0 0 ~ 3 9 9 만 원	(356)	30.1
	4 0 0 만 원 이 상	(487)	41.7
	무 응 답	(1)	0.1
▣ 지 역 별 ▣	수 도 권	(501)	50.2
	충 청 권	(151)	10.2
	호 남 권	(146)	9.8
	영 남 권	(326)	25.7
	강 원	(46)	3.0
	제 주	(30)	1.2
▣ 정치적 성향 ▣	진 보 적	(310)	25.7
	중 도	(610)	51.4
	보 수 적	(280)	22.9

2016 통일의식조사

전환기 통일 · 대북정책 방향은?

발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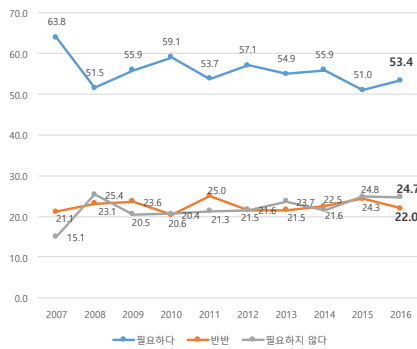
통일에 대한 인식

송영훈 (강원대)

통일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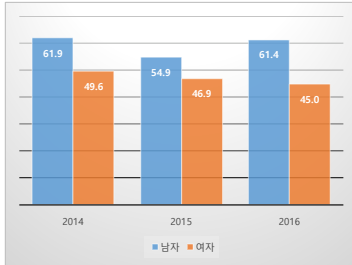
송영훈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통일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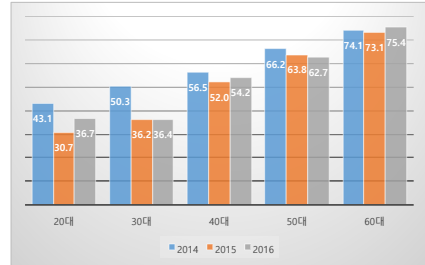


- 매우 필요 19.5, 약간 필요 33.9 → 53.4
-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은 2007년 34.4%였는데 계속 감소하고 있음.
- 통일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큰 변화 없으며, 2015년과 2008년 다음으로 낮은 결과
-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2009년부터 계속 아주 조금씩 증가하여, 24.7%임.

통일의 필요성 (2)



-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지속적으로 관찰됨
- 20대와 30대, 50대와 60대 사이의 인식의 격차 점차 확고해지고 있는 것일 수 있음.
- 지역간 편차는 해마다 달리 나타나고 있음:
- 수도권 44.7→54.5, 충청권과 영남권이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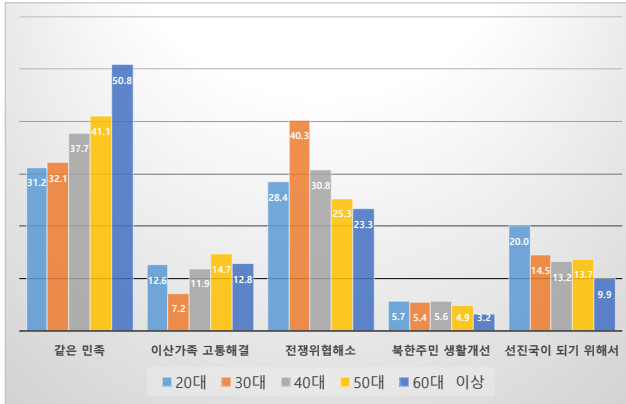
- 심층과제:
- 통일정책은 통일의 필요성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북한의 도발 등은 통일의 필요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통일의 이유

연도	같은 민족이니까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	남북간에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해	북한 주민도 잘 살도록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기타	합계
2007	50.7	8.9	19.2	1.8	18.7	0.7	1197
2008	58.7	6.6	14.5	2.9	17.2	0.1	1206
2009	44.3	8.5	23.5	4.2	18.7	0.8	1195
2010	43.3	7.0	24.2	4.0	20.8	0.6	1193
2011	41.9	7.2	27.3	4.8	17.7	1.1	1197
2012	46.0	9.1	25.3	4.4	14.5	0.8	1199
2013	40.4	8.3	30.8	5.5	14.2	0.8	1198
2014	42.1	9.1	27.0	3.9	17.6	0.3	1200
2015	40.7	12.3	26.3	6.3	14.0	0.4	1198
2016	38.6	11.8	29.8	5.0	14.2	0.7	1200

- '같은 민족이니까'라는 응답이 점차 감소하여 **38.6%**임.
- 남북간의 전쟁위협 해소를 위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
- 이산가족의 고통 해결 및 북한주민도 잘살 수 있도록 통일을 해야한다는 인식은 큰 변동이 없음.
- 군사적 긴장의 해소를 바라는 인식의 반영?
- "현실주의적 통일관"이라고 할 수 있는가?

통일의 이유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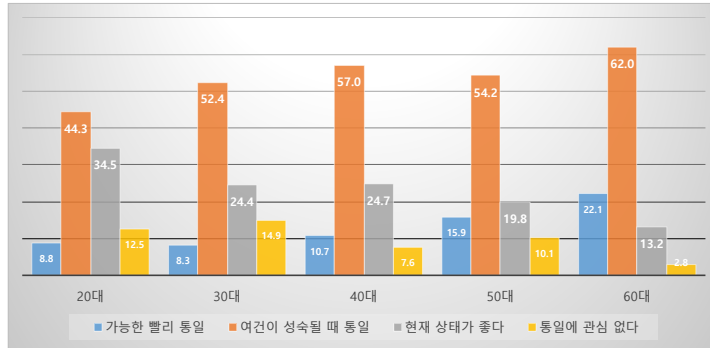
- 20대의 통일 이유 인식
 - 전쟁위협해소 28.4% + 선진국 20.0% = 48.4%
- 30대의 통일 이유 인식
 - 전쟁위협해소 40.3% + 선진국 14.5% = 54.8%
- 젊은 세대가 분단비용을 고려할 때 남북관계의 안정과 국내정치사회적 발전의 측면을 더 중용하게 여기기 때문인가?
- 장기적으로 통일정책은 현재 한국사회의 문제들을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 있음.

통일 추진 방식

연도	통일지상주의	점진적 통일	남북공존	통일무관심	합계	인구
2007	10.6	70.6	11.8	7.0	1,200	
2008	9.6	64.8	17.1	8.5	1,213	
2009	8.6	68.3	15.6	7.5	1,203	
2010	10.0	67.0	16.1	6.9	1,200	
2011	9.7	67.0	15.2	8.2	1,201	
2012	9.6	65.1	18.3	7.0	1,200	
2013	11.3	61.8	18.9	8.0	1,199	
2014	12.1	61.3	19.6	7.0	1,200	
2015	11.8	57.5	21.8	8.9	1,200	
2016	13.1	54.1	23.2	9.6	1,201	

- 가능한 빠른 시일에 통일하는 것이 좋다는 인식은 10% 내외를 기록함
-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점진적인 통일을 선호하는 국민들이 가장 많지만 그 비율이 줄어들고 있음.
- 반면, 남북공존을 선호하는 비율이 2007년 11.8%에서 2016년 23.2%로 증가하고 있음.
- 두 체제의 완전한 통일뿐만 아니라 경제공동체 운영, 자유롭고 안전한 왕래가 보장되는 낮은 수준의 통일을 이루기 위한 정책도 필요한가?
- 통일비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남북공존을 선호하고 있는 것인가?

통일 추진 방식 (2)



- 20대 응답자들이 "현재 상태가 좋다"는 비율이 다른 연령대 응답자들보다 월등히 많음.

통일 추진 방식 (3)

	가능한 빨리 통일	여건이 성숙될 때 통일	현재 상태가 좋다	통일에 관심없다
통일이 필요하다	12.4	37.1	3.3	0.5
반반/그저그렇다	0.7	11.0	7.7	2.6
통일이 필요없다	0.0	6.0	12.0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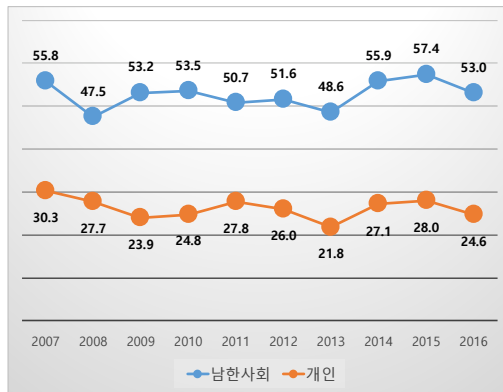
-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추진 방식에 대한 상관성이 높음.
-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5수준으로 나눴을 때 Pearson's R=.641, Spearman Correlations=.650.
-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들은 점진적 통일을, 통일이 필요가 없다는 응답자들은 남북공존을 가장 많이 선호함.

통일 가능 시기

	5년 이내	10년 이내	20년 이내	30년 이내	30년 이상	불가능하다	합계
2007	3.7	23.5	30.9	14.7	13.9	13.4	1,198
2008	2.3	13.4	22.3	14.8	25.1	22.1	1,213
2009	2.7	17.0	27.7	16.3	16.5	19.8	1,202
2010	3.4	17.8	24.1	13.4	20.8	20.6	1,200
2011	2.5	16.3	26.1	14.0	19.7	21.4	1,201
2012	2.9	14.5	25.9	17.8	19.8	19.2	1,200
2013	3.7	13.3	25.3	13.7	18.3	25.8	1,200
2014	2.2	13.7	22.8	18.2	19.7	23.5	1,200
2015	3.5	17.8	25.5	13.9	19.6	19.7	1,199
2016	3.5	14.0	25.1	15.2	17.9	24.4	1,201

- 전통적으로 통일이 단기간에 이뤄질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는 국민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음
- 통일을 위한 장기적 정책과 단기 전략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
- 정부간 통일전략의 변화를 있을 수밖에 없지만 통일정책의 기초를 쉽게 바꾸는 것에 대한 세심한 성찰이 필요함.

통일 편익 기대감: 남한사회와 개인



- 남한사회 전체에 통일이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응답이 53%인 반면, 개인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응답은 24.6%임.
- 2015년도 조사와 비교하여 두 범주 모두 줄어들었음.
- 2007년 이후 집단적 이익에 대한 기대감과 개인적 이익에 대한 기대감의 차이는 평균 26.5%p임.
- 2015년과 2016년 격차는 각각 29.4%p와 28.4%p 임.
- 2012년 이후 두 범주간 격차는 커지고 있음.

사회문제 개선 기대감



- 전반적으로 통일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의견이 많지 않음
- 실업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지만 4명중 1명에 그치고 있음.
- 통일의 필요성과 이유 등에서도 나타나지만 통일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통일정책 및 담론은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려울 수 있음.
- 통일은 한국전쟁과 분단이라는 역사적 문제를 해결이라는 **역사성**, 그리고 한국사회의 문제 해결과 국제적 환경에 대응이라는 **현재성**,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미래지향성**이라는 세 측면을 고려해야함.

남한의 민주주의와 통일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통일이 되어야 남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	19.9	20.0	19.3	18.1	19.7	23.6	23.6	27.0	23.0	23.8
남한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	31.3	23.5	31.2	29.8	25.1	24.8	26.1	23.2	29.1	26.1
통일과 민주주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48.7	56.6	49.5	51.9	55.3	51.7	50.3	49.8	48.0	50.1

- 통일과 민주주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응답이 50%가 넘는다는 것은 국내의 민주주의의 실현과 통일을 이뤄가는 것이 서로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임.
- 통일에 의해서 왜곡될 수 있는 민주주의의 가치와 현상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통일을 이루어 왜곡의 가능성을 줄이려 주장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 내부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고려할 때 한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동시에 병행되어야 할 것임.

북한의 민주주의와 통일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통일이 되어야 북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	28.7	34.3	37.6	38.7	34.7	39.9	38.2	28.7
북한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	27.8	33.5	29.4	32.0	33.0	27.0	33.3	27.8
통일과 민주주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43.6	32.2	33.0	29.3	32.3	33.1	28.5	43.6

- 통일과 북한의 민주주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응답이 전년 대비 15.1%p 증가함.
- 북한 내부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통일이 가능하다는 의견과 통일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거의 비슷함.
- 북한체제의 비민주성에 대해서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으나 통일이 반드시 북한의 민주화를 초래하는 전략이어야 한다는 것에는 30%미만의 응답자들이 동의하고 있음.

희망하는 통일 한국의 체제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남한의 현체제 유지	43.6	44.4	48.9	44.2	43.6	44.9	48.1	47.3
남북한체제의 절충	39.1	38.8	35.6	37.7	35.4	37.9	33.5	34.5
남북한 두 체제의 유지	13.3	12.6	12.3	15.1	16.9	13.2	13.6	14.4
어떤 체제도 무방	4.0	4.2	3.2	3.0	4.1	4.1	4.8	4.0

- 조사 기간 등의 항목별 응답 비율이 거의 변화가 없음
- 한국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선호하고 있음.
- 남북한체제를 절충하자는 의견은 약 35%임.
- 남북한 공존하는 응답자들은 대체적으로 남북한체제의 절충과 남북한 두체제의 유지를 비슷한 비율로 선호함.

논의 및 시사점

• 통일의식조사 10년,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 여론과 대중의 인식이 통일정책 결정과정에 제한된 영향력을 가짐
-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의식조사는 10년 동안 통일의식을 조사하였음.
- 정기조사의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평가할 필요가 있음.

• 국민들에게 통일은 무엇인가?

- 통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일관성과 지향성을 보여주는 인식의 지도가 있음.
- 통일은 더 이상 당위의 문제가 아님을 조사 결과는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 통일의 과정에서 현재 한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통일을 이루기도 어렵고 통일이 되어도 통합을 이루는 것이 쉽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음.

논의 및 시사점 (2)

• 이념적 인식의 차이가 세대간 인식의 차이로 바뀌고 있는가?

- 통일의식조사에서는 분명하게 세대간 인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통일에 관해서만 그런 것인가? 또는 사회 전반의 대부분의 이슈에 대하여 이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인가?
- 20대가 통일과 관련 현실적 이유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물역사적인 것이라고나 보수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 그동안 “20대의 보수화” 또는 “현실주의적 통일관” 등이라는 개념화를 시도하였는데, 이러한 개념화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가?
- 오히려 다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사회의 노력이 없는 현실과 유리된 통일정책은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논의 및 시사점 (3)

• 통일정책과 대북정책은 구분되는 것인가? 상보적인 것인가?

- 통일대박론, 통일준비위원회 활동 등으로 인해 국민적으로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도 하였으나(2015), 2016년은 다시 이전의 경향성을 보임.
- 북핵실험과 대북제재로 이어지는 대북정책이 가치지향적 통일정책과는 배치되기도 함.
- 통일정책과 대북정책, 외교정책을 동시에 고려하는 통일거버넌스의 운영이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 조건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성과위주의 통일정책, 통일준비보다 장기적 프레임에서 토대를 마련하는 통일정책, 통일준비가 필요한 시점일 수 있음.

2016 통일의식조사

전환기 통일 · 대북정책 방향은?

발표 2

대북인식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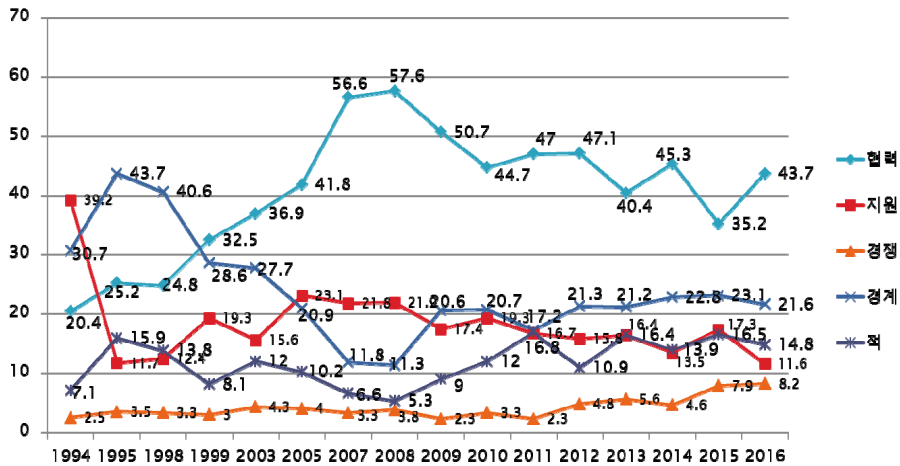
대북인식

김병로
서울대 IPUS

대북인식 평가 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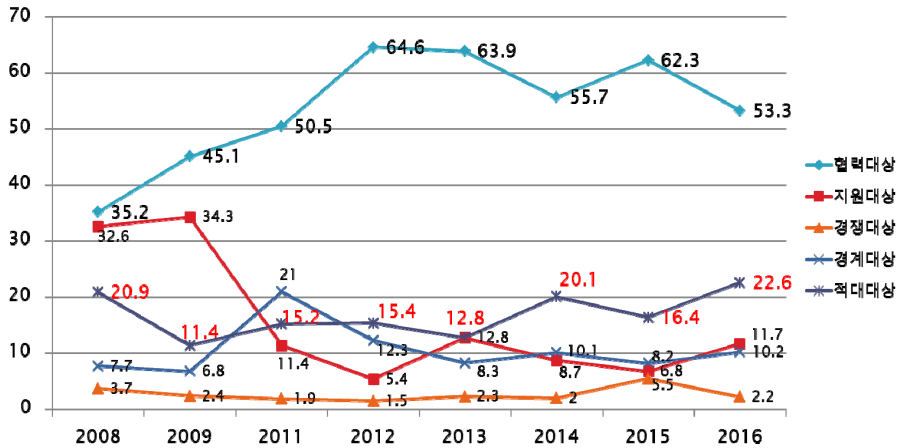
1. **남북한관계:**
 - 협력, 지원, 경쟁, 경계, 적대
2. **북한변화와 안정성:**
 - 북한의 변화, 정권안정성
3. **대북신뢰도:**
 - (1)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도
 - (2) 북한의 핵무기 포기 여부
4. **북한위협인식: 안보불안인식**
 - (1) 북한 핵무기 보유 위협인식
 - (2)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5. **대북인지도와 이질성**

1. 남북한관계 인식



- ▶ 대북 '협력대상' 인식 35.2% → 43.7% 로 8.5% 포인트 상승
- ▶ 대북 '적대대상' 인식 16.5% → 14.3% 로 2.2% 포인트 하락
- ▶ 4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작년 8월 극적으로 타결된 남북간 '8.25합의'가 국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기 때문으로 판단
- ▶ 또는 북한발 위기가 반복되는데 따른 '대북압박정책'에 대한 피로감이 작용하기 때문일 가능성

비교: 남한은 어떤 대상? (북한주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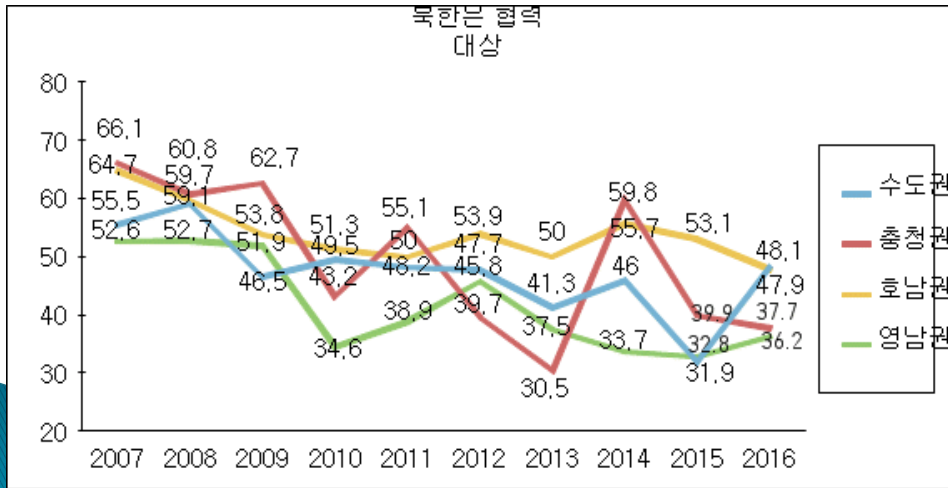
- ▶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역, 종교, 연령, 소득, 계층, 도시화 수준, 정치성향, 지지정당에 따른 분화 뚜렷

변수 구분	협력·지원·경제·적대 등 대북인식	
지역	$\chi^2=55.399$	p=0.0000
종교	$\chi^2=46.028$	p=0.000
연령	r=-0.077	p=0.007
가구소득	$\chi^2=31.050$	p=0.013
가구소득계층	$\chi^2=45.485$	p=0.000
사회계층(상/중/하)	$\chi^2=36.298$	p=0.014
도시화(대도시/중소도시/읍면)	$\chi^2=29.844$	p=0.0000
정치성향	$\chi^2=30.858$	p=0.014
지지정당	$\chi^2=27.806$	p=0.033

북한 '협력대상' 인식의 지역별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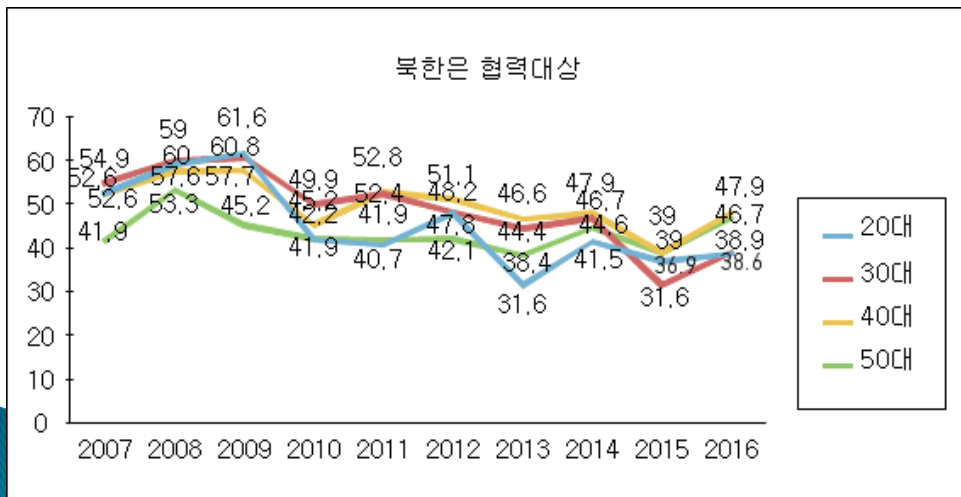
▶ 수도권외의 상승

- 31.9%→48.1%로 16.2%p 상승
- 수도권/호남권 vs. 충청권/영남권 구도
 - 대북경계의식 17.2%/19.2% vs. 25.8%/3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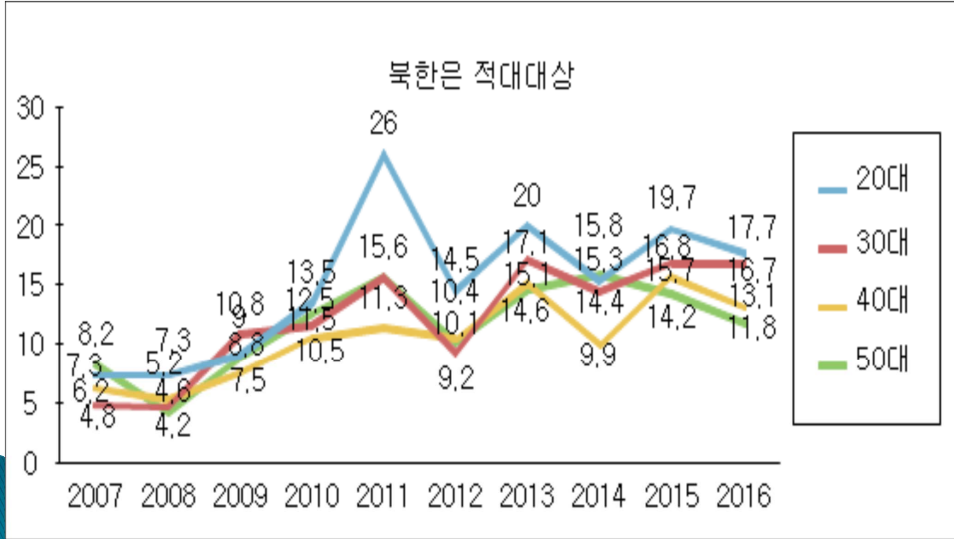
연령별 북한 '협력대상' 인식

- ▶ 20/30대 vs. 40/50/60대의 구도
- ▶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협력의식 상승



연령별 북한 '적대대상' 인식

- 20대(17.7%) > 30대(16.7%) > 60대(15.9%) > 40대(13.1%) > 50대(11.8%)



▶ '협력대상' 인식의 종교별 차이

- 불교(49.8%) 기독교(48.9%) > 천주교(37.1%) 무종교(40.0%)

▶ 정치성향별 차이

- 협력대상: 보수(49.9%) > 진보(46.0%) > 중도(39.9%)
- 적대대상: 보수(18.8%) > 진보(14.7%) > 중도(13.3%)

2. 북한변화와 정권안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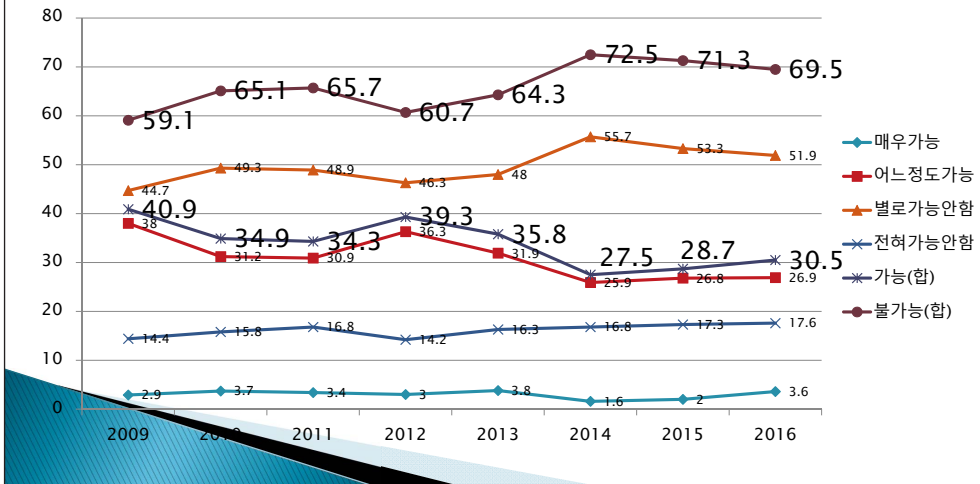
- ▶ “변하지 않고 있다” 61.7→62.9%로 대북 비판의 식 변화 미미
- ▶ 지역($\chi^2=47.715$, $p=0.000$)
- ▶ 교육 ($\chi^2=23.892$, $p=0.004$)
- ▶ 종교 ($\chi^2=35.740$, $p=0.000$),
- ▶ 소득($\chi^2=28.002$, $p=0.006$)
- ▶ 도시화 ($\chi^2=17.754$, $p=0.007$) 변수와 통계적 상관성
- ▶ ‘변하고 있다’는 충청권(50.3%)의 긍정평가 높음
수도권 37.7%, 호남권 32.2%, 영남권 33.1%

- ▶ 북한정권이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응답 60.0%로 안정될 것(9.7%)이라는 응답의 6배
 - 작년 대비 불안정 59.9%→60.0%, 안정 14.4%→9.7%
- ▶ ‘정권안정화’는 지역($\chi^2=67.866$, $p=0.000$), 종교($\chi^2=30.861$, $p=0.014$), 지지정당($\chi^2=31.888$, $p=0.010$)과 통계적 상관성
 - ‘불안정’ 호남권(72.6%) > 수도권(61.4%) > 충청권(55.9%) > 영남권(51.8%)
 - ‘안정화’ 호남권 15.5%→11.7%→6.3%, 수도권 17.9%→9.7% 큰 폭으로 낮아짐. 반면 영남권 9.9%→13.3%로 높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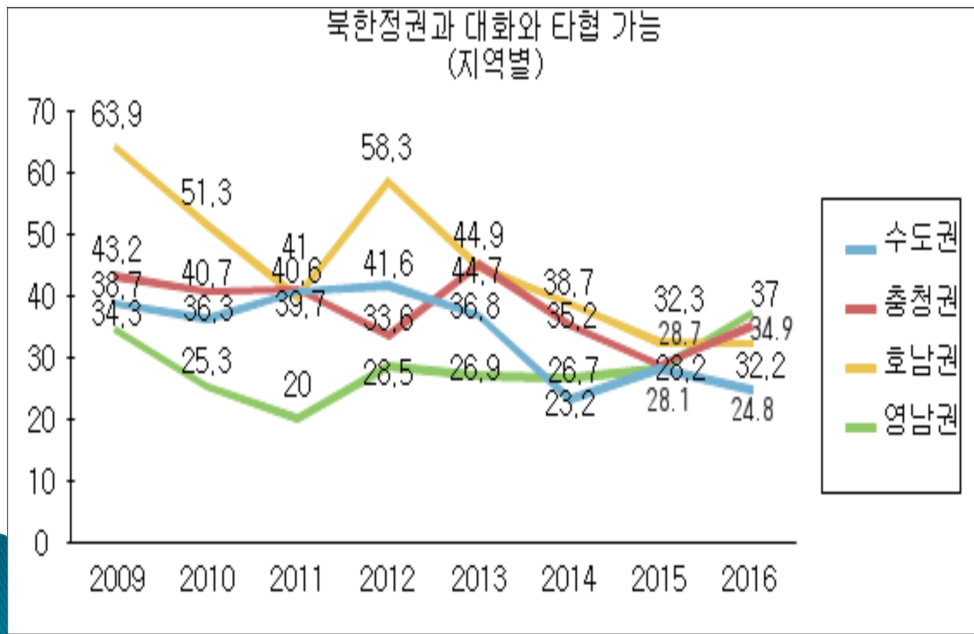
3. 대북 신뢰도:

(1) 정권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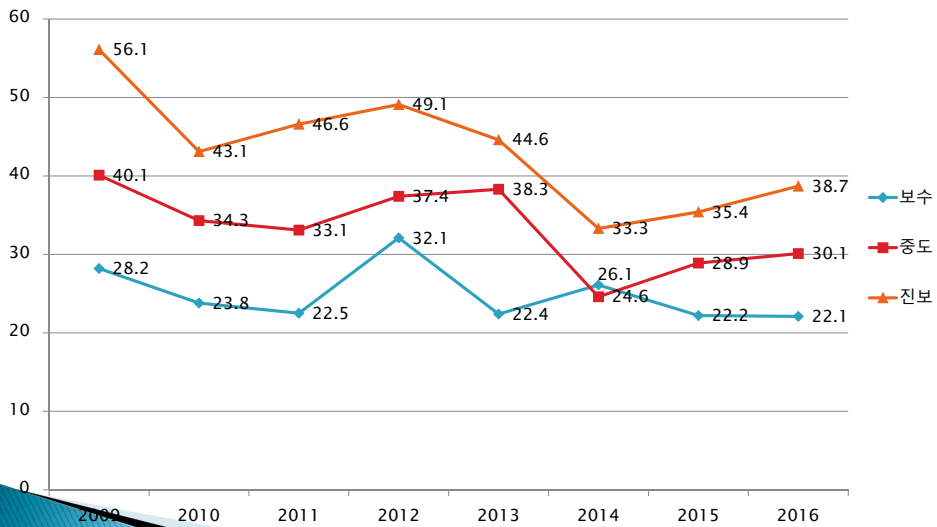
▶ “통일을 함께 논의할 상대로 북한정권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라고 생각하는가?”



지역별 북한정권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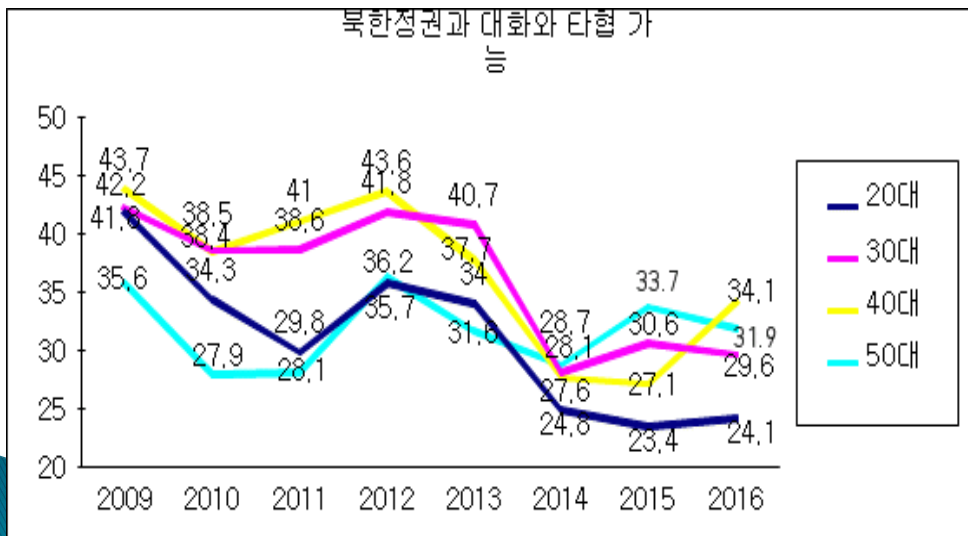


정치성향별 북한정권 신뢰도



세대별 북한정권 신뢰도

- ▶ $r = -0.065, p = 0.025$
- ▶ 60대 31.6%



- ▶ 대화와 타협 불가능 69.5%, 가능 30.5%
- ▶ 지역간 차이 재분화
- ▶ 정치적 성향은 재작년 '중도의 보수화' 경향이 일시적으로 형성되었으나 작년과 올해 다시 이념 간 대북신뢰도 차이가 나타남
 - '대북신뢰도' 항목은 보수-중도-진보를 가르는 가장 유력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재차 증명
 - 북한위험 완화로 이념성향 표출
- ▶ 작년과 올해 연령별 차이는 재분화
 - 40대의 대북신뢰도 27.1%→34.1%로 급상승

3. 대북신뢰도:

(2) 북한의 핵무기 포기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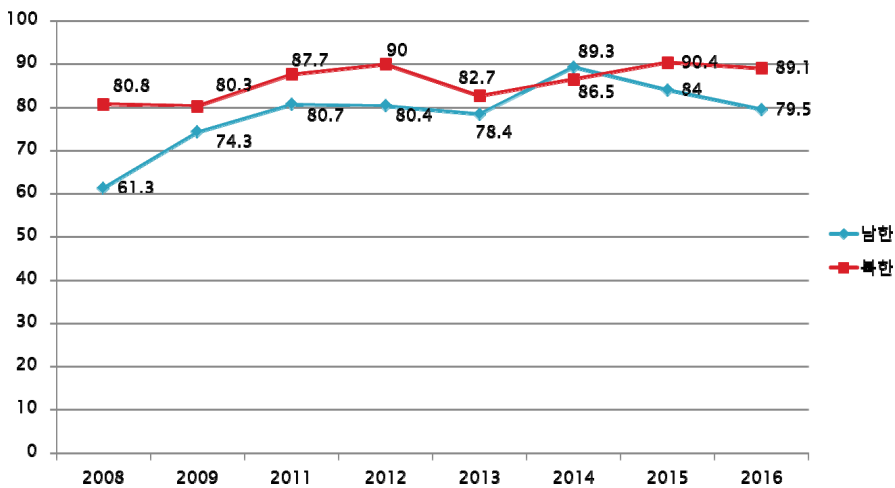
- ▶ 71.7%(08년) → 83.7%(09년) → 82.8%(10년) → 83.2%(11년) → 85.4%(12년) → 84.6%(13년) → 88.0%(14년) → 86.3%(15년) → 83.8%(16년)
- ▶ 북핵 포기에 대한 비관적 견해 높은 수준

4. 북한위협인식:

(1) 북한 핵무기 위협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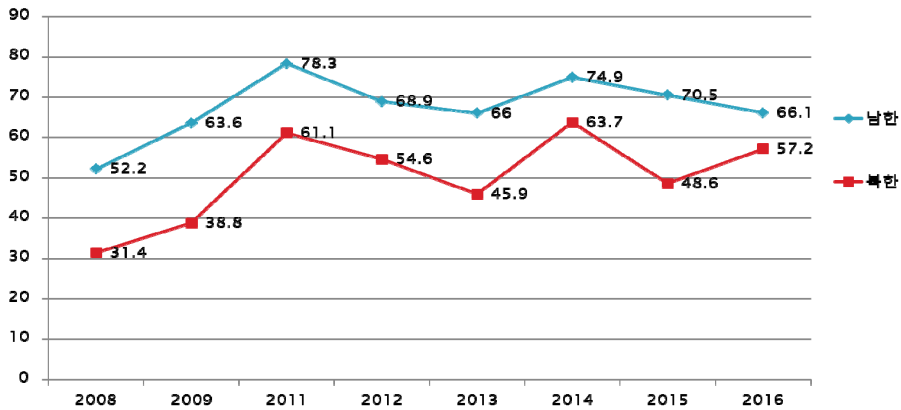
- ▶ 61.3%(08년)→74.3%(09년) → 73.8%(10년)→80.7%(11년)→80.4%(12년)→78.4%(13년)→89.3%(14년)→84.0%(15년) →79.5%(16년)
- ▶ 북핵 위협인식 5.3%,4.5% 포인트 감소, 안보불안인식 완화
- ▶ 4차핵실험 불구, 핵무기위협인식 감소. 핵실험 반복되면서 위협인식 반감
 - 5차핵실험도 안보불안인식에 큰 영향 미치지 않을것
- ▶ 영남권(85.1%),충청권(84.1%)에서 높고, 진보(83.7%),보수(80.3%) > 중도(77.0%)보다 높음.
- ▶ “한국도 핵무기 가져야 한다” 55.8%→52.9%로 소폭 하락

북핵무기 위협(남북비교)



4. 북한위협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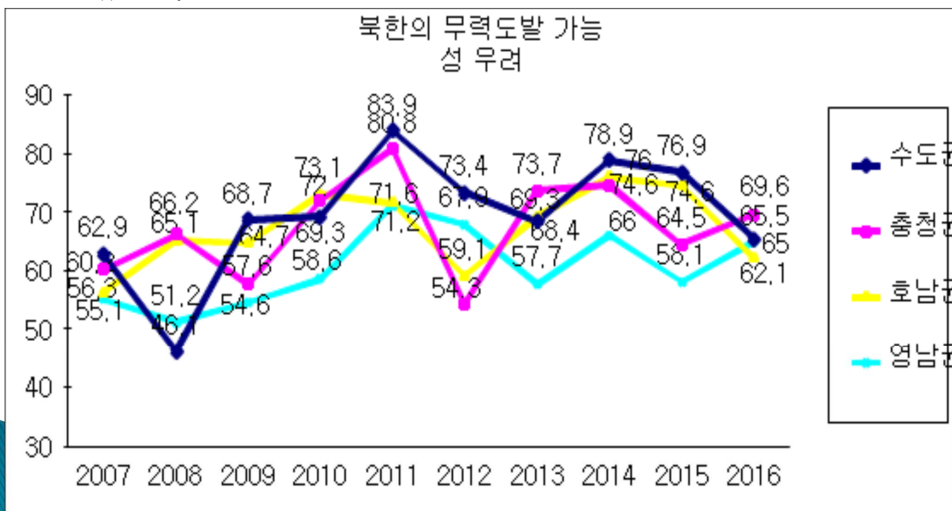
(2)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 ▶ 1차 핵실험 효과 16.7%p, 2차 핵실험 11.4%p, 3차 핵실험 효과 0 혹은 -, 4차 핵실험, 5차 핵실험 효과

지역별 북한무력도발가능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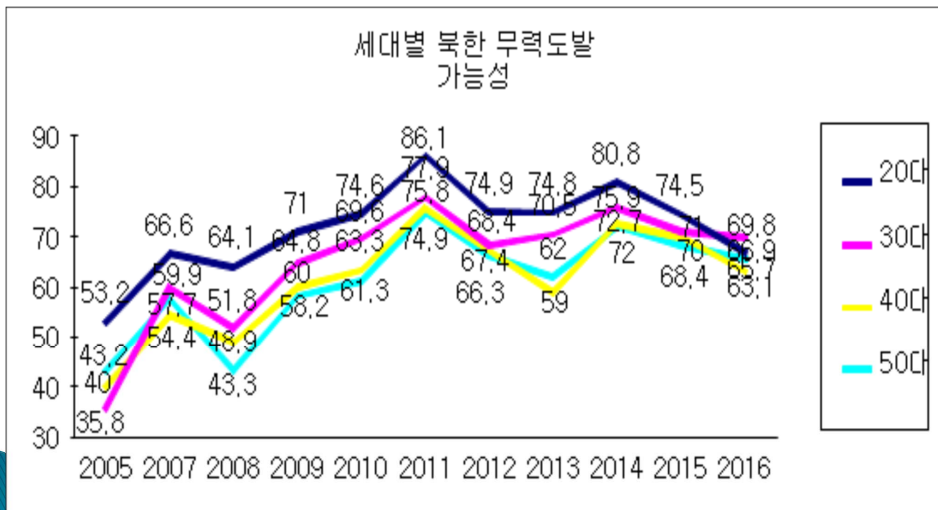
- ▶ 영남권과 충청권 vs. 수도권과 호남권
 - 영남권, 충청권 북한무력도발가능성 58.1%~65.0%, 64.5%~69.6%로 각각 6.5%p, 5.1%p 높아진 반면, 수도권과 호남권은 76.9%~65.5%, 74.6%~62.1%로 각각 11.4%p, 12.5%p 낮아짐
- ▶ 영남/충청권 북한에 대한 책임 더 물었거나 혹은 실제적 위협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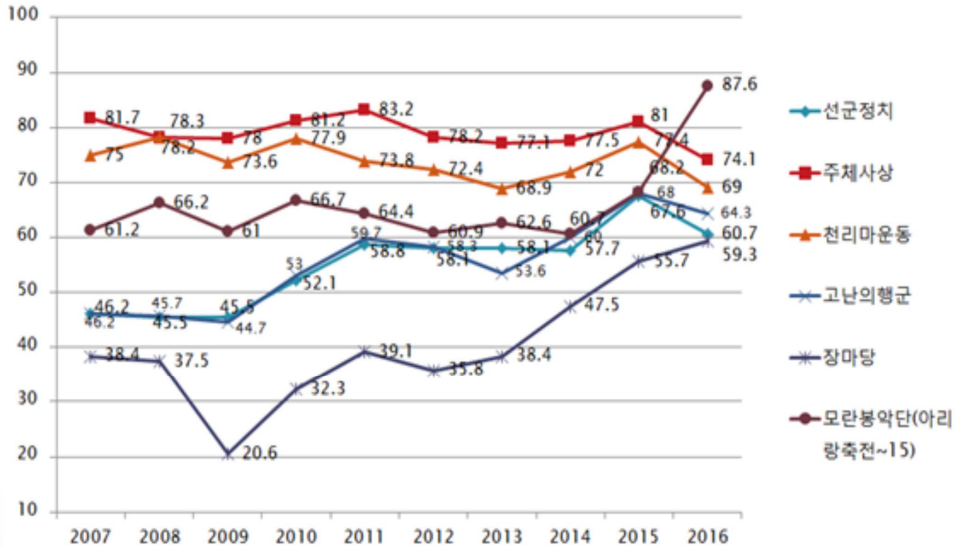
정치성향별 북한무력도발인식

- ▶ 북한무력도발의식과 정치성향과의 관계는 $\chi^2=31.340$, $p=0.002$ 로 통계적 유의미
 - 중도(66.8%) = 진보(66.5%) > 보수(64.3%)
- ▶ 위기의식 완화되면 정치적 성향에 따른 해석 표면화
 - 즉 진보는 자기가 지지하지 않은 보수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이 자칫 북한의 무력도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불안해 한 반면,
 - 보수는 자기들이 지지한 보수정부의 안보정책을 신뢰하기 때문에 북한이
- ▶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예측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 만족도와 높은 상관관계($\chi^2=52.310$, $p=0.000$)가 있고, 대북정책 만족도는 지역과 높은 상관관계($\chi^2=72.876$, $p=0.000$)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발 안보불안인식은 정권에 대한 지지와 높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 작년까지 연령에 따른 차이 존재, 올해는 20대가 30대 아래로 내려오면서 차이 없어짐



5. 대북 인지도와 이질성



남북 간 이질성 인식

	남한	북한
선거방식	92.4	94.2
사회복지(생활수준-북)	94.9	96.4
역사인식	-	94.9
언어사용	81.3	93.5
생활풍습	77.8	89.1
가족중시(가치관-북)	64.6	90.6
평균	82.2	93.1

- ▶ 북한의 4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북한발 안보불안과 대북 신뢰도, 북핵위협이 소폭 하락. 북한과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한다는 ‘협력대상’ 인식은 상승
 - 안보불안의식 74.9%→70.5%→66.1%
 - 대북신뢰도 28.7%→30.5% 소폭 상승
 - 대북협력의식 8.5%p 상승, 적대의식 소폭(1.7%p)하락

- ▶ 안보위기, 대북불신 완화로 세대, 지역, 계층, 이념 등에 따른 의식분화 진행
 - 세대별로는 20/30 vs. 40/50
 - 지역별로는 수도권/호남권 vs. 충청/영남권
 - 정치성향별로는 진보-중도-보수 패턴 유지

- ▶ 4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대북인식의 긍정적 변화가 진행된 것이 작년 8월 극적으로 타결된 ‘8.25합의’가 미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핵실험이 거듭되면서 북한발 위기가 반복되는데 따른 ‘대북압박정책’에 대한 피로감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음

- ▶ 이러한 추세로 본다면 SLBM, 5차핵실험 등 북한의 지속되는 도발적 행동이 ‘안보피로감’을 다시 압도하여 대북의식의 수렴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2017년 대선을 앞둔 향후 1년 간 세대/지역/이념 간 의식분화는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김병로
- ▶ philo@snu.ac.kr
- ▶ 02-880-9042

대북인식 (요약)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1. 북한의 4차 핵실험(2016.1.6.)에도 불구하고, 북한발 안보불안과 북한정권에 대한 불신 및 북핵위협은 소폭 하락·완화, 북한과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한다는 '협력대상' 인식은 상승

-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최근 3년 74.9%→70.5%→66.1%로 감소
- 북한정권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다고 보는 '대북신뢰도' 28.7%→30.5%로 소폭 증가
- 북한 핵에 대한 위협의식 최근, 3년 89.3%→84.0%→79.5%로 하락
- 대북 '협력대상' 인식, 35.2%→43.7%로 8.5%p 상승, '적대대상' 인식은 16.5%→14.8%로 소폭(1.7%p) 하락

2. 안보위기와 대북불신이 완화됨으로써 세대, 지역, 계층, 정치성향, 도시화 등의 변수에 따른 인식의 분화 진행

- 세대별로는 20대와 30대가 한 묶음으로 묶이고 40대와 50대가 다른 한 묶음으로, 그리고 60대 이상이 그 사이에 위치하는 경향 발견
 - 40대(47.9%)는 50대(46.7%)와 함께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높게 인식하는 반면, 20대(17.7%)와 30대(16.7%)는 북한을 '적대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높으며 60대 이상은 그 중간에 위치
 - 40대(34.1%)는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고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63.1%)을 가장 낮게 보는 반면, 20대는 북한정권을 가장 불신하며, 30대는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69.8%)을 가장 높게 우려

- 지역별로는 수도권/호남권이 한 묶음으로 비슷하고, 충청권/영남권이 비슷한 의식지형 형성
 - 대북 '협력대상' 인식에서 수도권(48.1%)과 호남권(47.9%)이 비슷하게 높고, 충청권(37.7%)과 영남권(36.2%)은 낮으며,
 - 지난 1년 동안 수도권과 호남권의 북한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이 큰 폭으로 낮아진 반면, 충청권과 영남권은 높아짐
 - 북한정권을 대화와 타협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신뢰도에서도 수도권이 작년에 인식을 같이 했던 영남권·충청권으로부터 '이탈'

- 대북인식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확연하게 달라지는 현상은 올해에도 진행, 특히 “북한 정권과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정권신뢰도’는 전형적인 정치성향의 패턴 유지
 - 재작년 ‘중도의 보수화’가 예외적으로 진행되었으나, 작년에 이어 올해 보수-중도
 - 진보가 일정한 간격을 유지

3. 북한의 4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북인식의 긍정적 변화가 진행된 것은 작년 8월 극적으로 타결된 ‘8.25합의’가 미친 영향이 매우 컸던 때문으로 판단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핵실험이 거듭되면서 북한발 위기가 반복되는데 따른 ‘대북압박정책’에 대한 ‘피로감’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음

- 1차 핵실험(2006.10)은 안보불안의식을 16~17%p 끌어 올렸고 2차 핵실험(2009.5)에서 10~11%p를 끌어 올렸으나, 3차 핵실험(2013.2) 효과는 미미하였으며 4차 핵실험(2016.1)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
- 이러한 추세로 본다면 SLBM발사(2016. 8.24)와 5차 핵실험(2016.9.9)과 같은 북한의 지속되는 도발적 행동이 ‘안보피로감’을 다시 압도하여 대북의식의 수렴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2017년 대선을 앞둔 향후 1년 간 세대·지역·이념 간 의식분화는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

2016 통일의식조사

전환기 통일 · 대북정책 방향은?

발표 3

대북정책 인식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대북정책 인식

장용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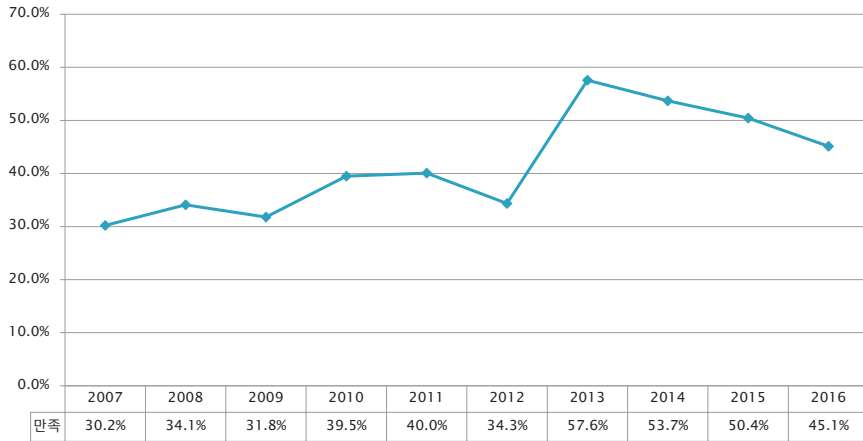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1

1. 대북정책 만족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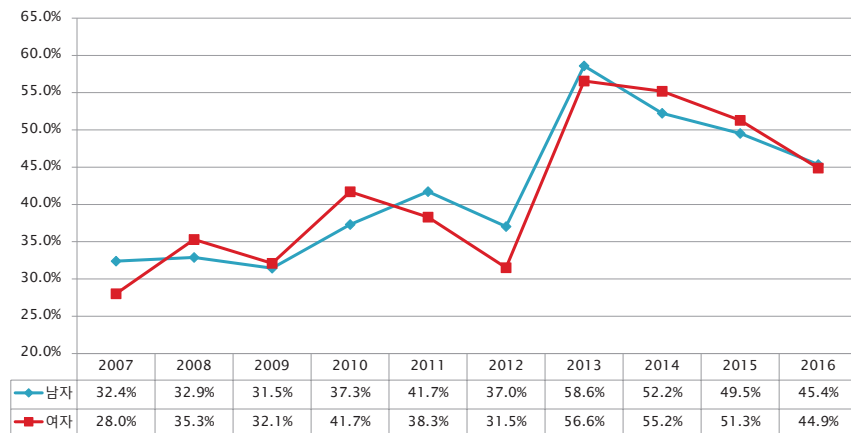
연도별 대북정책 만족 비율



대북정책 만족도가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50% 이하로 하락
만족한다는 응답이 2015년보다 5.3% 하락한 45.1%를 기록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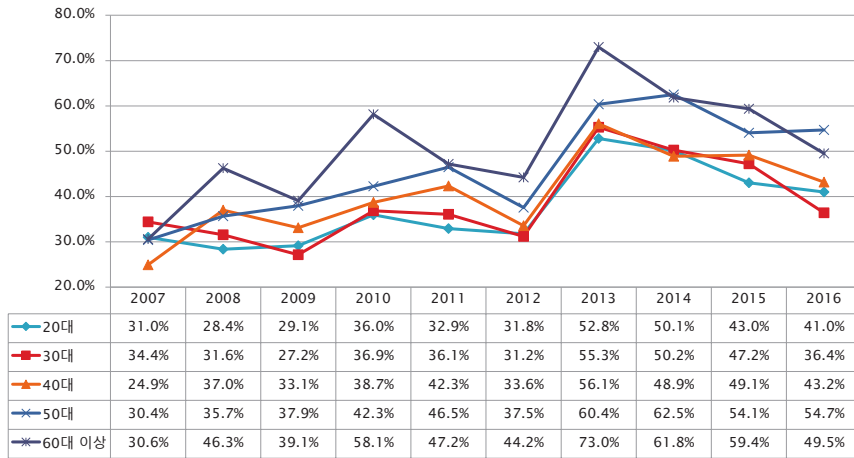
성별 대북정책 만족 비율



성별에 따른 만족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
2012년 5.5%가 가장 큰 격차였으며,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0.5~3.0% 수준의 격차 지속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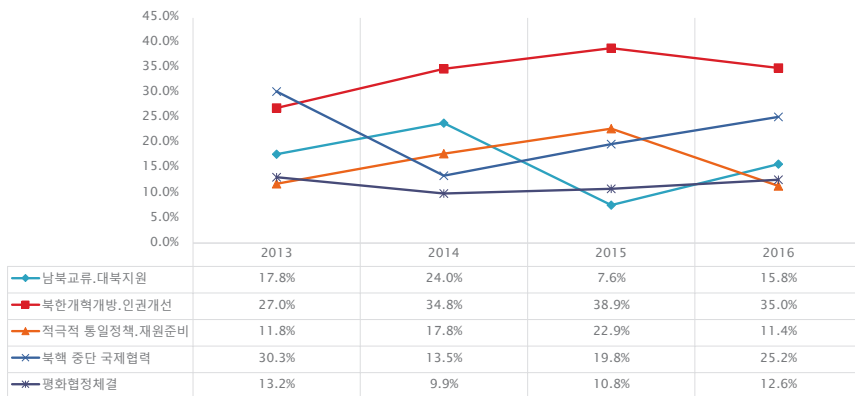
연령대별 대북정책 만족 비율



연령대별로는 2015년에 비해 50대에서 0.6% 상승한 반면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모두 하락
30대 -10.8% > 60대 이상 -9.9% > 40대 -5.9% > 20대 -2.0% 순으로 크게 하락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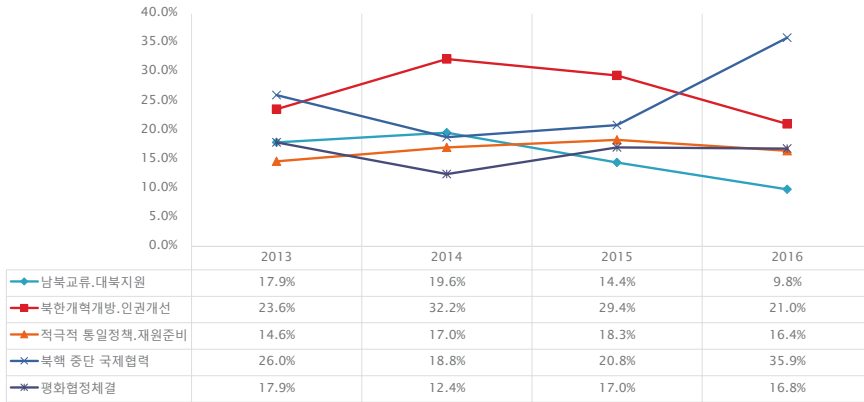
30대 대북정책 만족층 최우선 대북정책 방향 인식



북핵 중단을 위한 국제협력과 남북교류, 대북지원이 각각 5.4%, 8.2% 상승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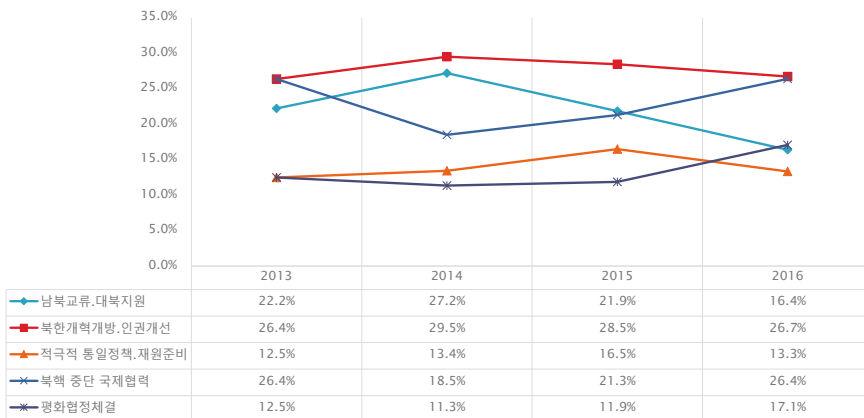
30대 대북정책 불만족층 최우선 대북정책 방향 인식



북핵 중단을 위한 국제협력이 15.1% 상승 / 교류협력은 4.6% 하락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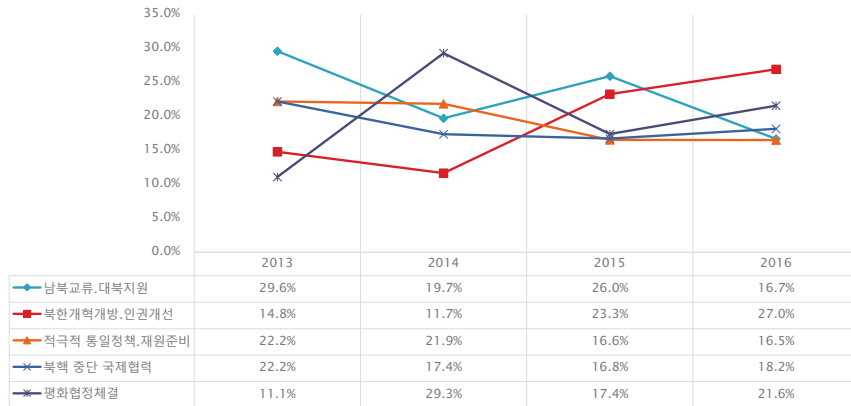
60대 대북정책 만족층 최우선 대북정책 방향 인식



북핵 중단을 위한 국제협력과 평화협정체결이 각각 5.1%, 5.2% 상승 / 교류협력은 5.5% 하락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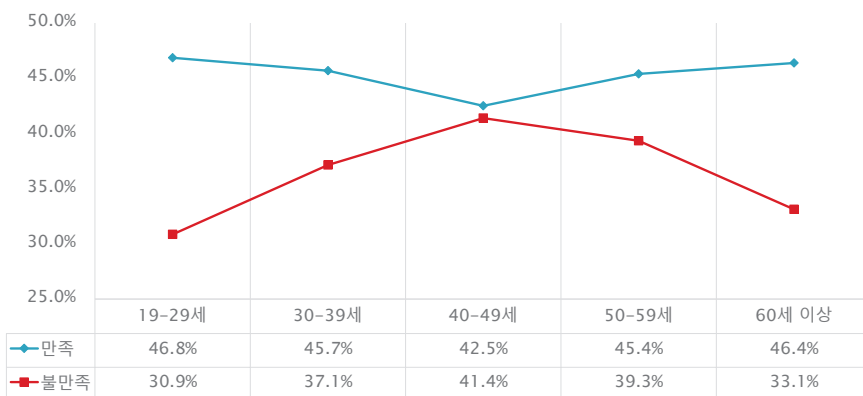
60대 대북정책 불만족층 최우선 대북정책 방향 인식



북핵 중단을 위한 국제협력은 1.4% 상승에 그친 반면
북한 개혁개방과 인권개선은 3.7%, 평화협정체결은 4.2% 상승 / 교류협력은 9.3% 하락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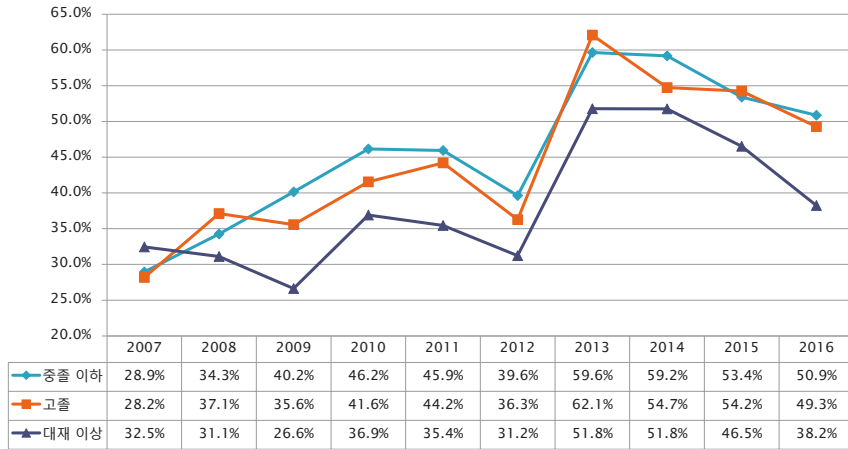
대북정책 만족도-연령대별 북핵 해결 전 교류협력 중단 찬성 비율



20대와 60대에서 대북정책 만족도에 따라 북핵 해결 전 교류협력 중단에 대한 찬성 비율이
가장 큰 격차를 나타냄(찬성 비율 차이가 20대 15.9%, 60대 13.3%)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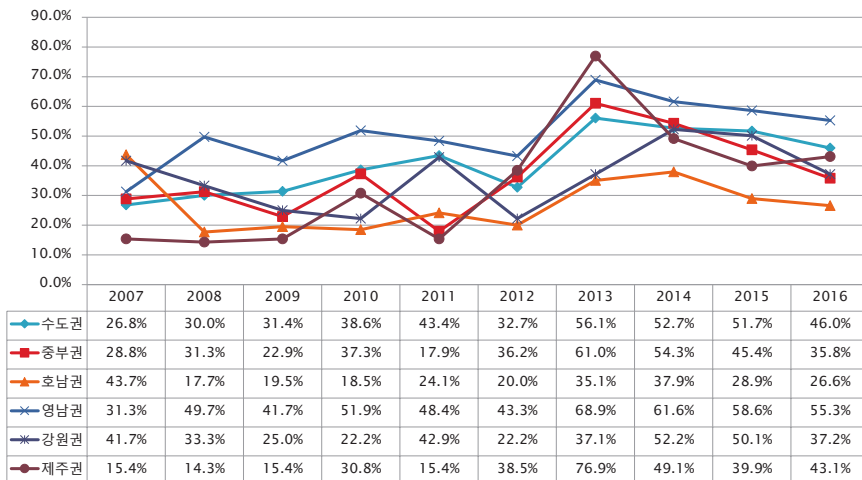
학력수준별 대북정책 만족 비율



대재 이상의 경우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가운데 2015년에 비해 8.3% 하락
고졸이나 중졸 이하의 경우 각각 4.9%와 2.5% 하락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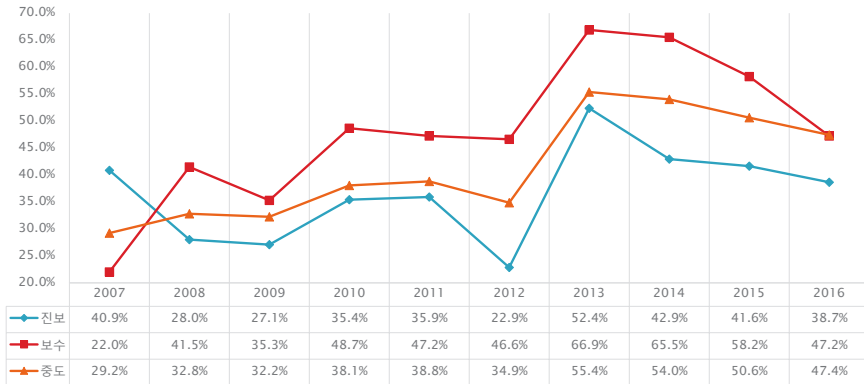
지역별 대북정책 만족 비율



제주권(+3.2%)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하락 / 강원권이 가장 크게 하락(-12.9%)
영남권에서는 여전히 50% 이상의 만족 비율을 보인 반면 호남권은 2015년에 이후 20%대 지속

12

정치성향별 대북정책 만족 비율



보수층의 경우 만족 응답 비율이 2015년에 비해 가장 크게 하락(-11.0%)
 보수-진보-중도 모두 2013년 이후 하락 추세 지속
 정당별 만족 비율은 새누리당 58.4%, 더불어민주당 37.4%, 국민의당 41.5%, 정의당 23.1%

13

정치성향-대북정책 만족도별 최우선 대북정책 인식(2015년 대비)

진보 중 대북정책 만족층

- 북핵중단 국제협력 17.5→33.7%(+16.2%)

보수 중 대북정책 만족층

- 교류협력.대북지원 14.0→18.2%(+4.2%)

중도 중 대북정책 만족층

- 평화협정체결 9.0→17.3%(+8.3%)

진보 중 대북정책 불만족층

- 북핵중단 국제협력 20.0→29.3%(+9.3%)

보수 중 대북정책 불만족층

- 평화협정체결 12.3→25.6%(+13.3%)

중도 중 대북정책 불만족층

- 북핵중단 국제협력 21.1→28.4%(+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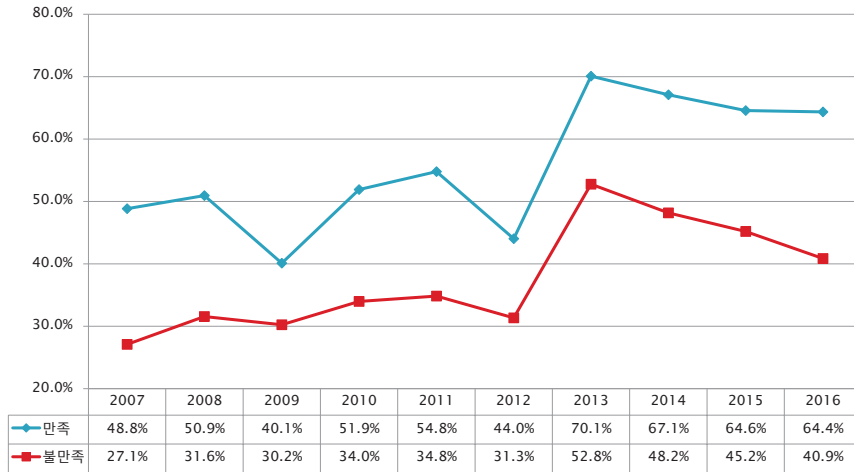
※ 정치성향별 최우선 대북정책 인식 변화

진보: 북핵중단 국제협력 +12.0% / 보수: 평화협정체결 +5.4%

중도: 북핵 중단 국제협력 +5.8%, 평화협정체결 +5.7%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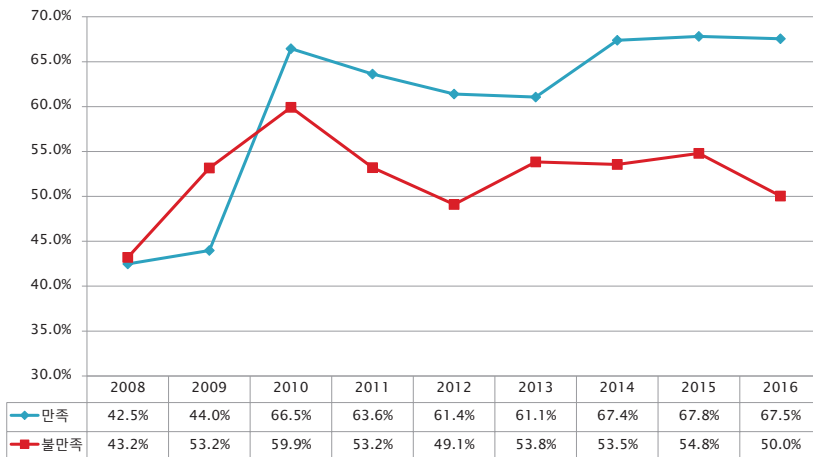
경제상황 만족도별 대북정책 만족 비율



경제상황 만족증과 불만증 간의 인식차가 지속되는 가운데 2013년 이후 격차 확대 추세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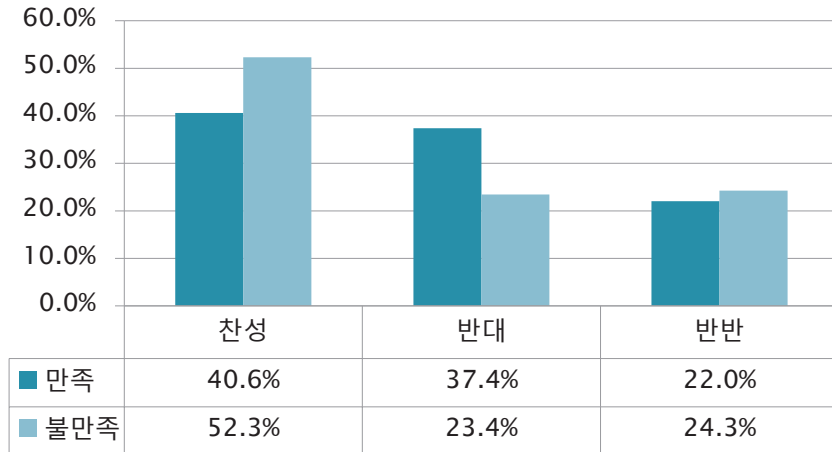
대북정책 만족도별 남북합의계승 동의 비율



대북정책 만족 층에서는 남북합의를 계승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 비율이 67% 수준을 지속
대북정책 불만족 층에서는 남북합의 계승 동의 비율이 2015년에 비해 4.8% 하락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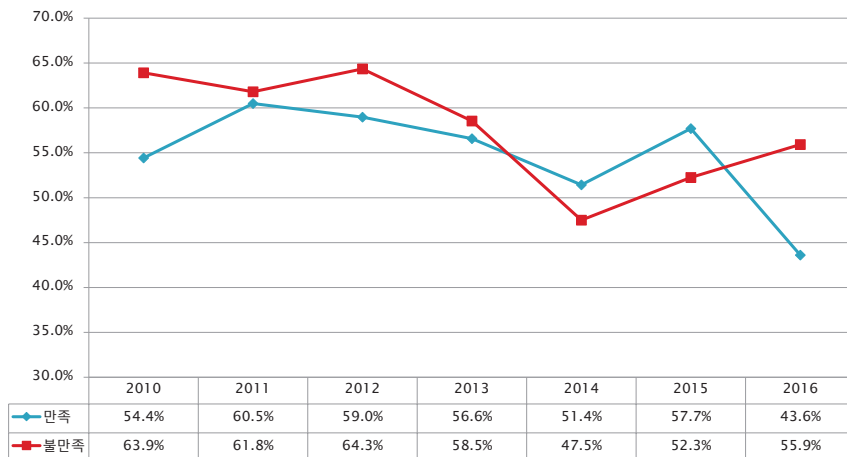
대북정책 만족도별 개성공단 재가동 찬성 비율



2016년 2월 중단된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해
대북정책 불만족층 찬성비율이 만족층보다 11.7% 높음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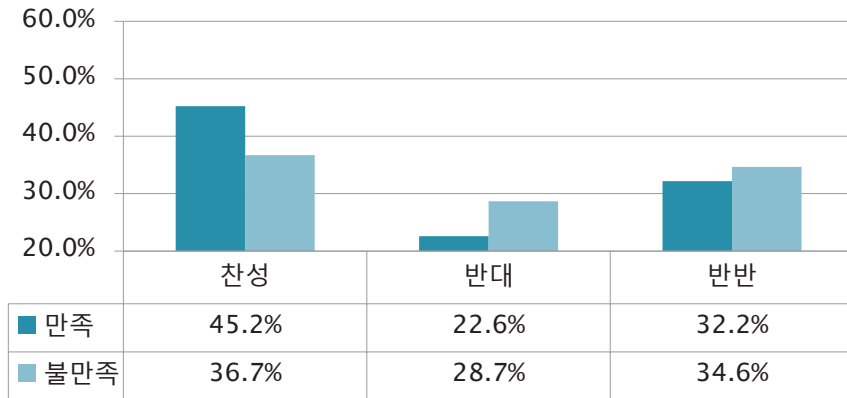
대북정책 만족도별 금강산관광 재개 찬성 비율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해 대북정책 불만족층의 찬성 비율이 만족층보다 12.3% 높음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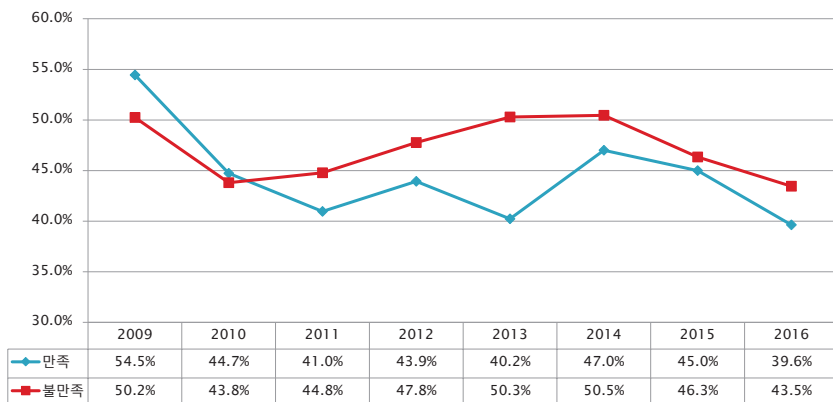
대북정책 만족도별 북핵 해결 전 교류협력 중단 인식



북핵 해결 전 교류협력 중단에 대해 대북정책 만족층의 찬성 비율이 불만족층보다 8.5% 높음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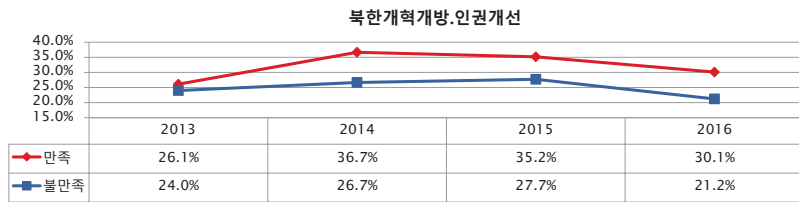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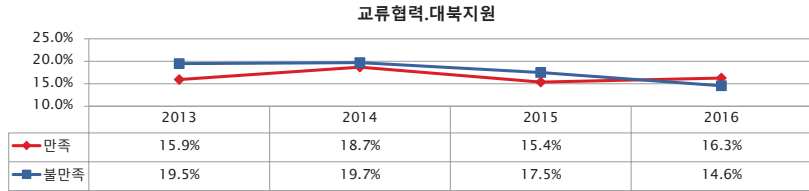
대북정책 만족도별 정부의 대북빠라살포 차단 찬성 비율



정부의 대북빠라살포 차단에 대해 대북정책 만족층과 불만족층의 찬성비율 차이가 3.9%에 불과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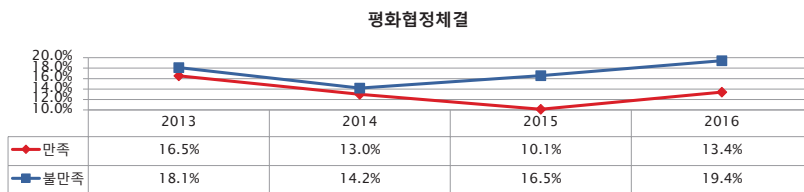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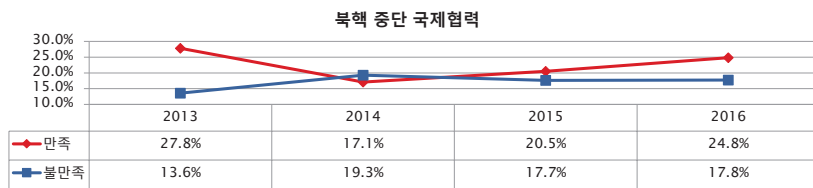
대북정책 만족도별 바람직한 대북정책 인식



대북정책 만족과 불만족층 간에
 최우선 대북정책으로 교류협력.대북지원에 대한 차이는 1.7%에 불과하나
 북한개혁개방.인권개선에 대해서는 만족층이 불만족층보다 8.9% 높음(만족층이 북한변화 선호)

21

대북정책 만족도별 바람직한 대북정책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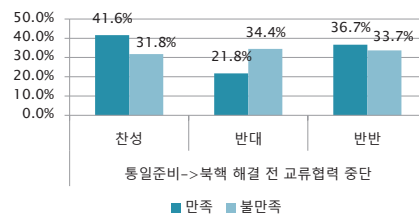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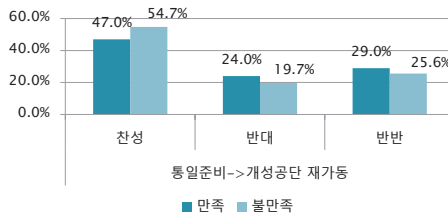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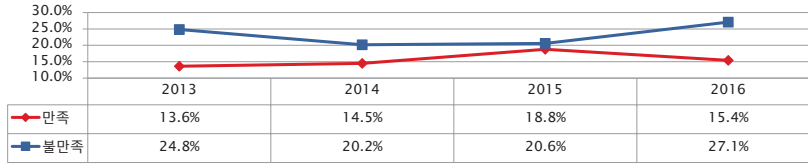


북핵 중단을 위한 국제협력의 경우 만족층이 불만족층보다 7.0% 높은 반면
 평화협정체결의 경우는 불만족층이 만족층보다 6.0% 높은 수준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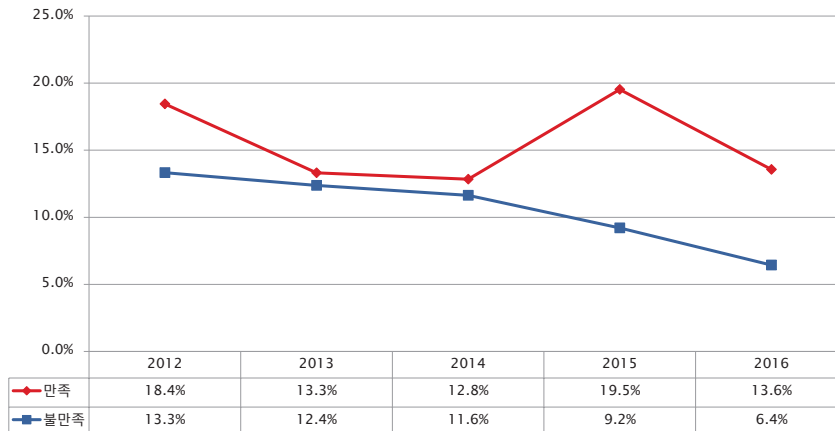
대북정책 만족도별 바람직한 대북정책 인식

적극적 통일정책, 자원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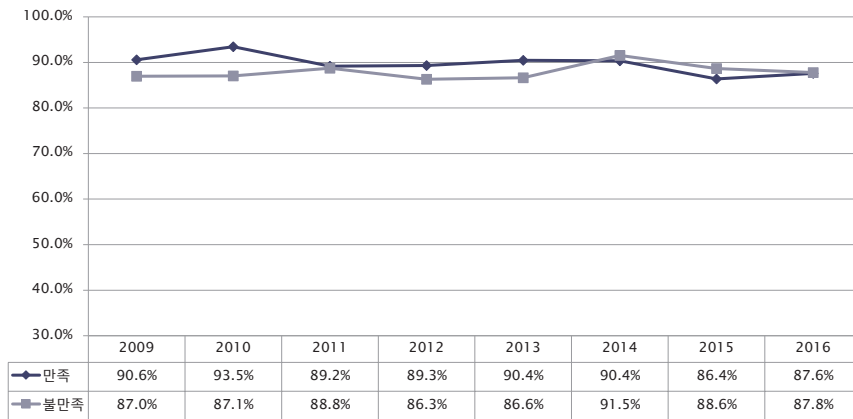
적극적 통일준비의 경우 불만족층이 만족층보다 11.7% 높은 가운데 불만족층의 경우 개성공단 재가동(54.7%), 교류협력 중단 반대(34.4%) 비율이 가장 높음
불만족층이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한 통일준비를 선호할 가능성

대북정책 만족도별 북한정권 안정화 동의 비율



북한정권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대북정책 만족층의 동의비율이 불만족층보다 7.2%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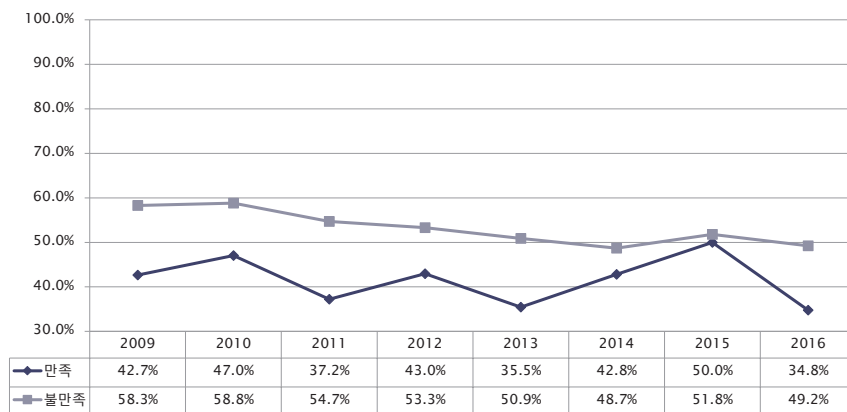
대북정책 만족도별 남북관계 악화 북한 책임(크다) 응답 비율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북한 책임이 크다는 인식은 대북정책 만족과 불만족층 간 동일 수준 북한 책임 문제는 논란거리가 될지 않을 정도의 공통 인식으로 정착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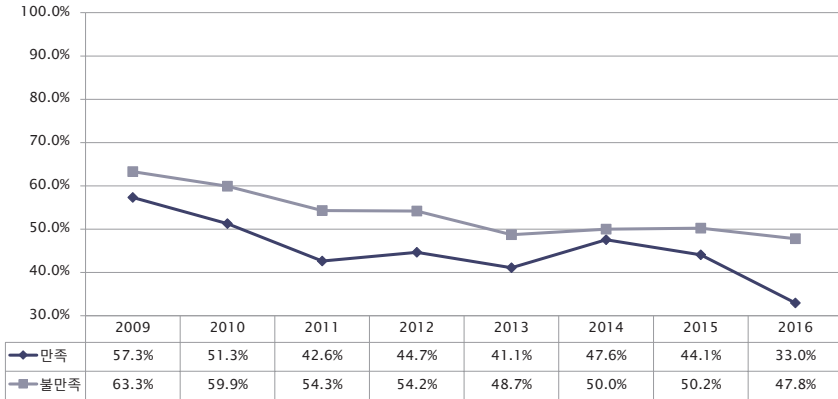
대북정책 만족도별 남북관계 악화 한국 책임(크다) 응답 비율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한국의 책임이 크다는 인식은 2015년 50%대로 수렴되었다가 2016년 만족층은 14.2% 하락하고 불만족층은 2.6% 하락하면서 다시 분산되는 양상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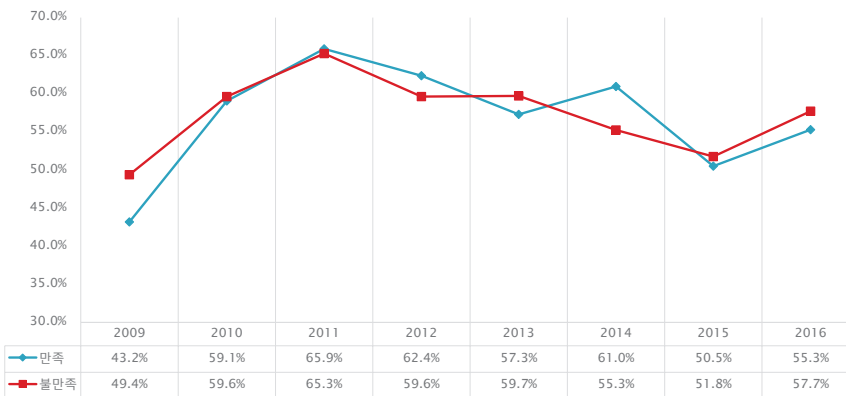
대북정책 만족도별 남북관계 악화 미국 책임(크다) 응답 비율



남북관계 악화에 대해 미국의 책임이 크다는 응답은 대북정책 만족층에서 11.1% 하락한 반면 불만족층에서는 2.4%만 하락, 격차 확대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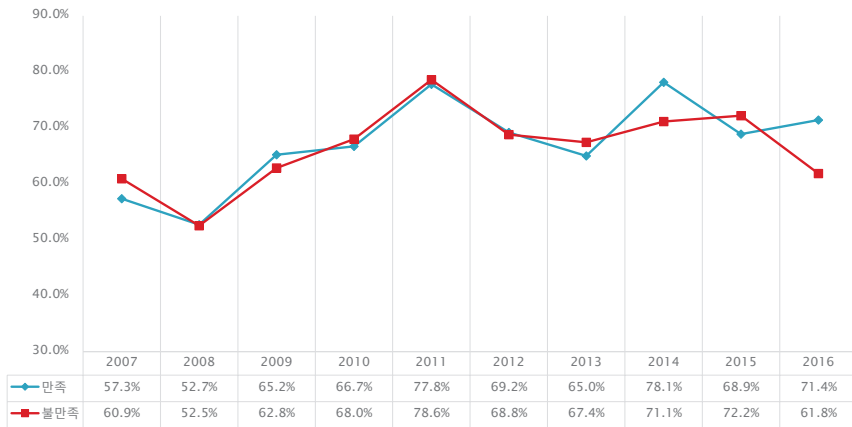
대북정책 만족도별 남북관계 악화 중국 책임(크다) 응답 비율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중국 책임이 크다는 응답은 대북정책 만족층과 불만족층 모두에서 증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냄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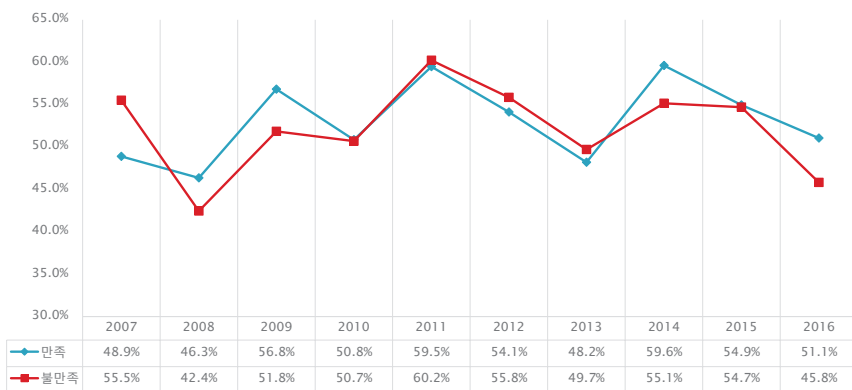
대북정책 만족도별 북한의 무력도발가능성(있다) 응답 비율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2015년에 비해 대북정책 만족층의 경우 2.5% 상승, 불만족층의 경우 10.4% 하락

29

대북정책 만족도별 한반도 전쟁 가능성(있다) 응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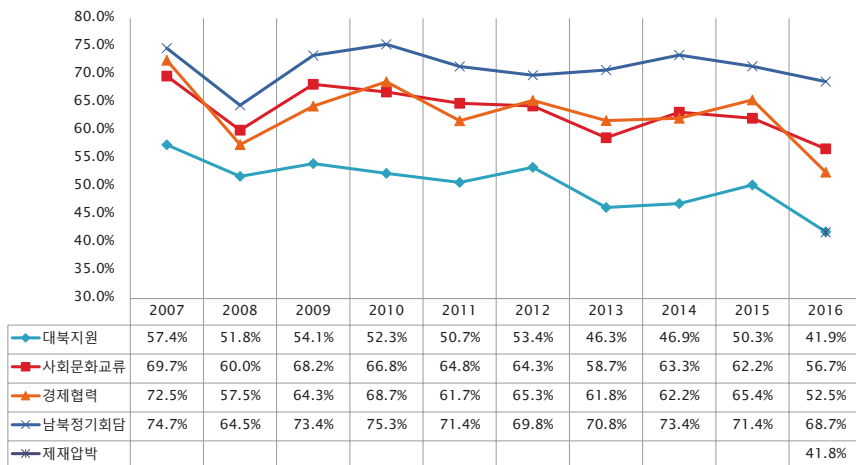
한반도전쟁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은 만족층이든 불만족층이든 2014년 이후 감소 추세
2015년에 비해 대북정책 만족층의 경우 3.8% 하락, 불만족층의 경우 8.9% 하락

30

2. 대북정책 현안.방향 인식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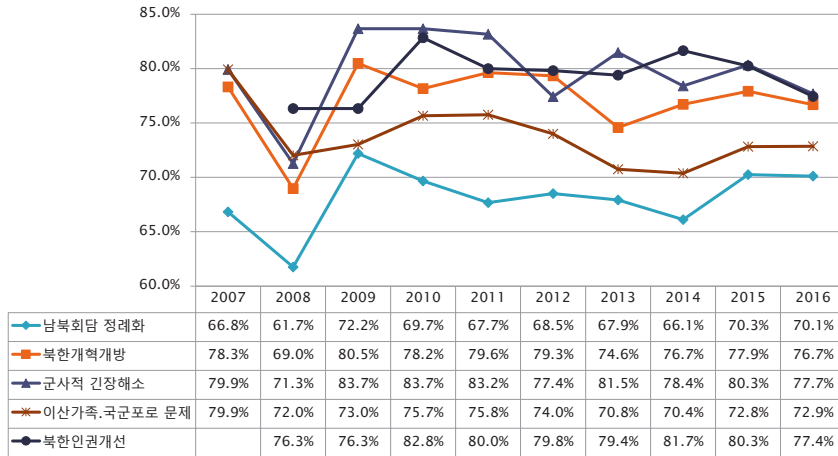
분야별 통일기여(도움됨) 응답 비율



모든 분야에서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하락
 남북정기회담>사회문화교류>경제협력>대북지원>제재 순으로 높음
 특히 올해 처음 조사된 제재의 경우 가장 낮은 수준인 대북지원과 동일한 수준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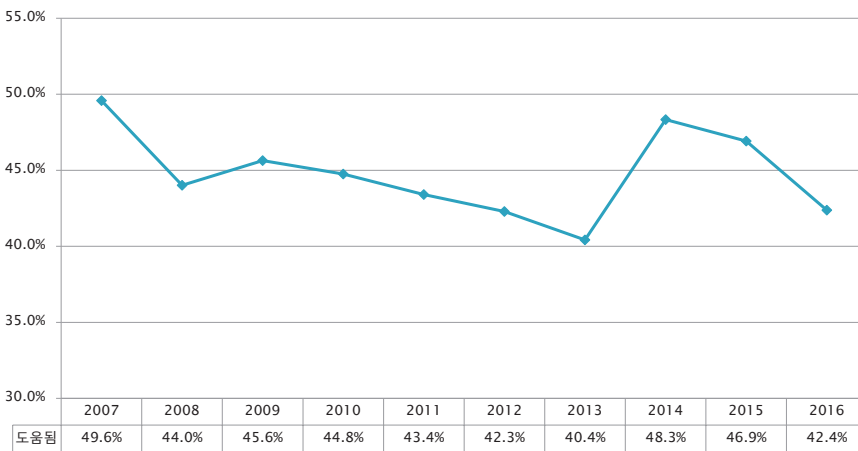
분야별 시급성(시급함) 응답 비율



이산가족.국군포로문제와 남북회담 정례화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군사적 긴장완화와 함께 북한 변화(북한의 인권개선과 개혁개방)가 높은 응답 비율은 차지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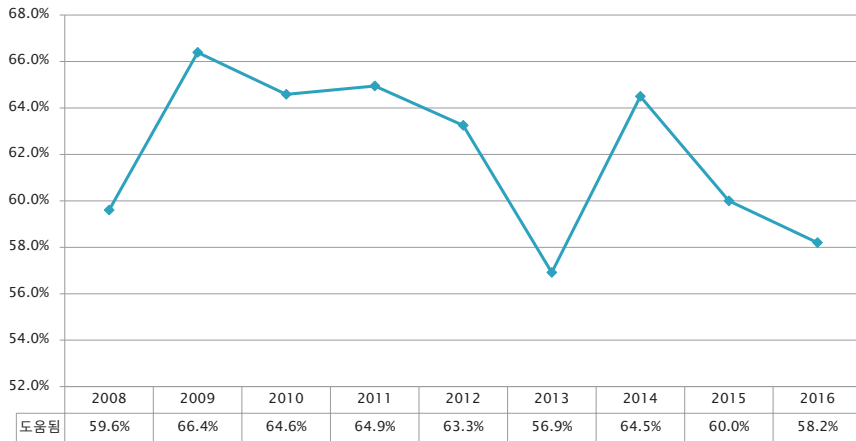
대북지원 북한주민생활 기여(도움됨) 응답 비율



대북지원이 북한주민들의 생활향상에 기여한다는 응답은 2014년 이후 하락세를 지속
대북지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 가능성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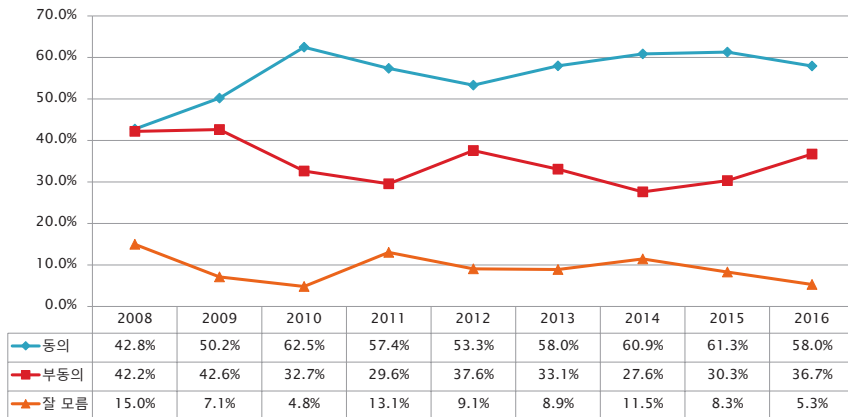
남북경협 북한개혁개방 기여(도움됨) 응답 비율



남북경제협력력이 북한의 개혁개방이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도 2014년 이후 하락세를 지속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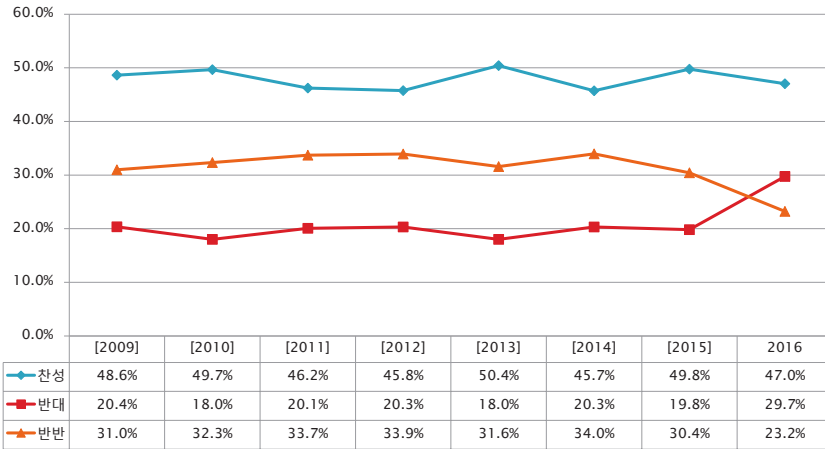
남북합의계승 주장에 대한 인식



2104년 이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증가하는 추세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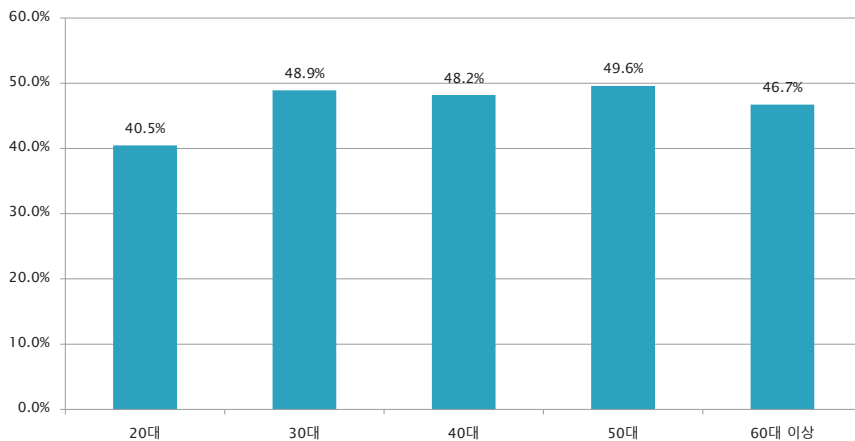
개성공단 재가동 주장에 대한 인식



* [2009~2015] 개성공단 유지 응답 비율 / 2016년 재가동 응답 비율
 2016년 조사인 개성공단 재가동 여부에 대해 47.0%가 찬성/반대는 29.7%
 2015년 유지 반대 응답 비율에 비해 2016년 재가동 반대 응답 비율이 7.3% 증가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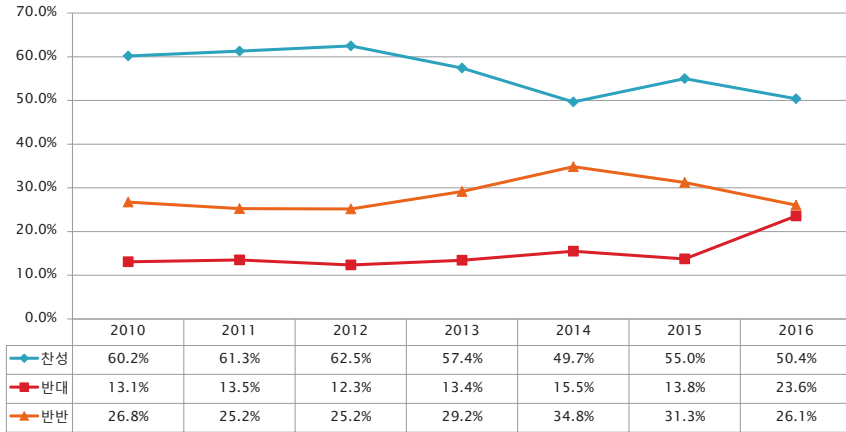
연령대별 개성공단 재가동 찬성 비율



개성공단 재가동 찬성 비율은 20대가 가장 낮고 50대가 가장 높은 수준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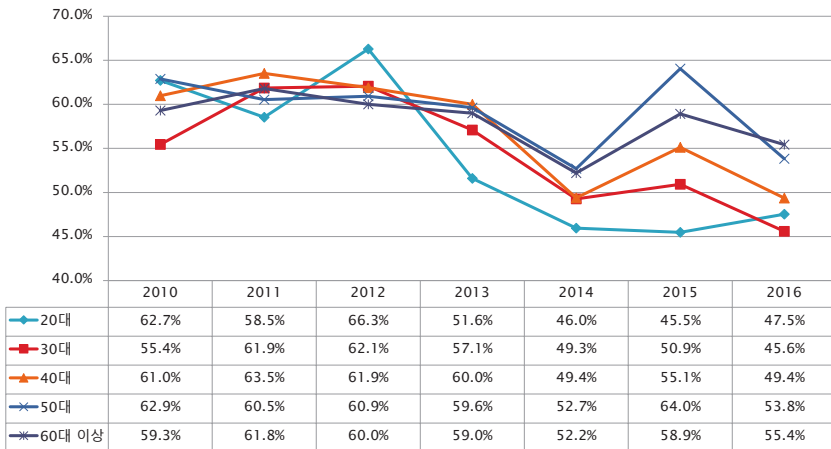
금강산관광 재개 주장에 대한 인식



2015년에 비해 찬성 응답 비율이 4.6% 하락하였으나 50.4%로 절반을 유지
반반이라는 응답이 5.2% 감소하고 반대한다는 응답이 9.8% 증가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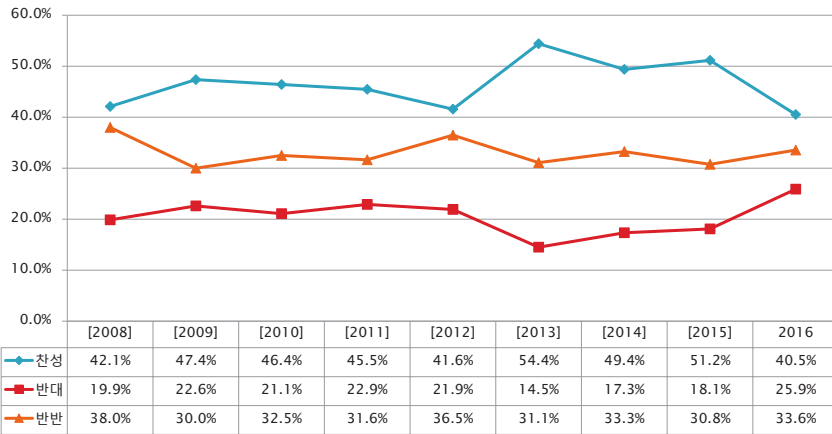
연령대별 금강산관광 재개 찬성 비율



20대에서 찬성 응답이 2.0% 증가한 반면 다른 모든 연령대에서 찬성 응답이 감소
50대 10.2% > 40대 5.7% > 30대 5.3% > 60대 3.5% 순으로 감소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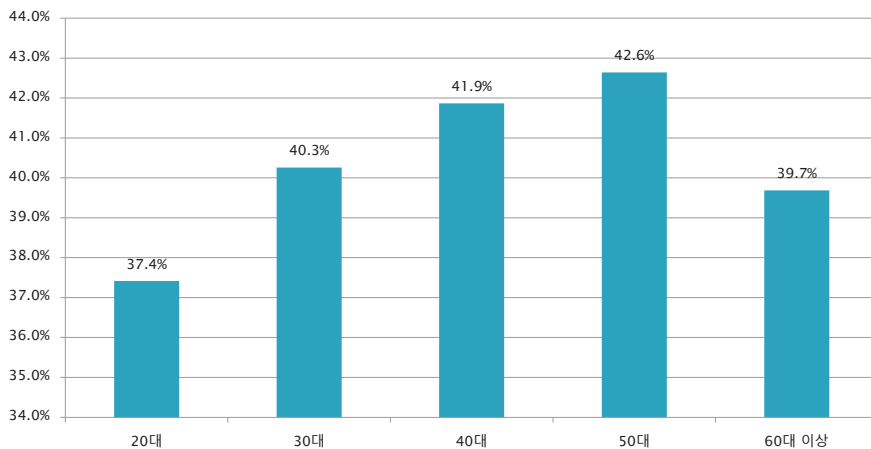
북핵 해결 전 교류협력 중단 주장에 대한 인식



* [2009~2015] 대북지원 중단 / 2016년 교류협력 중단 질문
 교류협력 중단에 찬성하는 비율은 40.5%로 절반 이하 차지/반반-판단유보층도 33.6% 차지
 2015년 대북지원 중단보다 반대응답 7.8%, 반반 응답 2.8% 증가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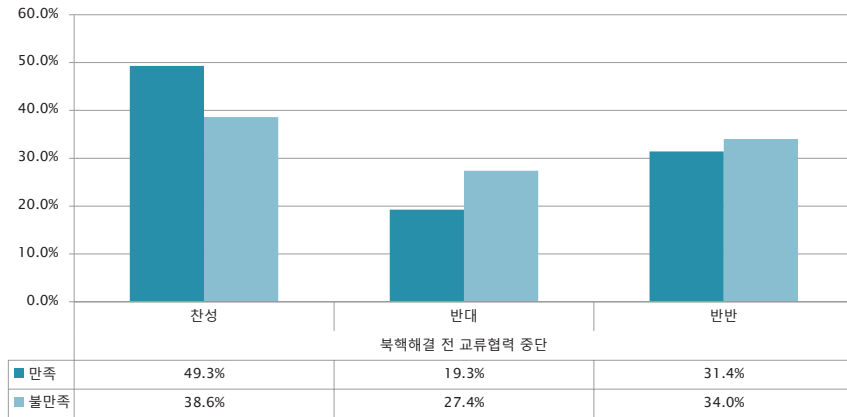
연령대별 북핵 해결 전 교류협력 중단 찬성 비율



50대에서 교류협력 중단 찬성 비율이 가장 높고 20대에서 가장 낮은 가운데
 60대 이상에서도 39.7%로 20대와 비슷하게 낮은 찬성 비율을 나타냄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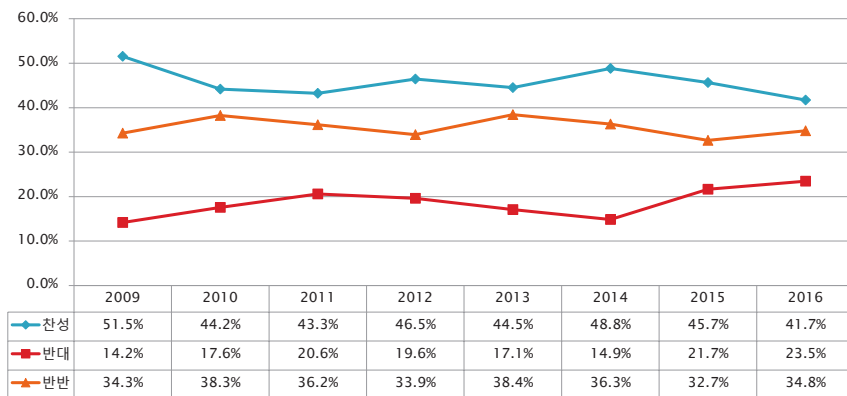
경제상황 만족도별 북핵 해결 전 교류협력 중단 찬성 비율



경제상황 만족층의 교류협력중단 찬성 비율이 불만족층보다 10.7% 높은 수준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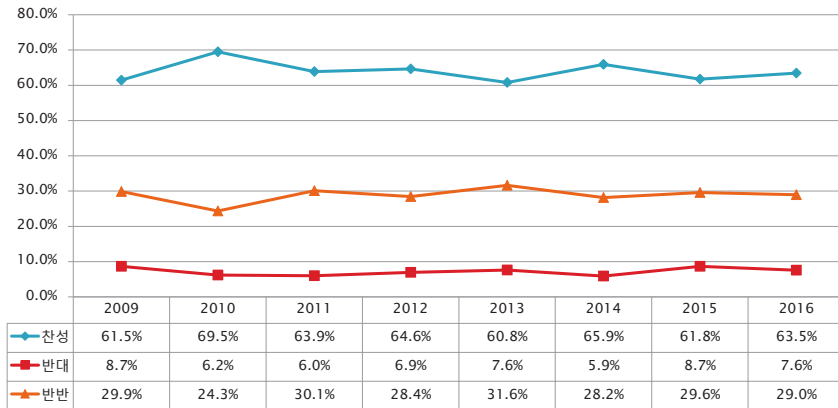
정부가 대북빠라살포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인식



정부의 대북빠라살포 차단에 대해 찬성 응답 비율이 4.0% 감소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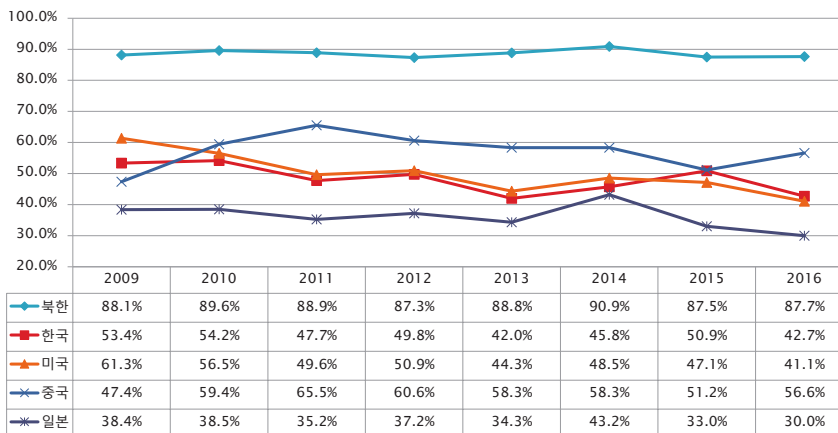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지속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인식



정부의 북한인권 문제 지속제기에 대해 찬성 비율이 1.7% 증가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전년과 사실상 동일한 수준 / 대체로 60% 이상의 찬성 비율이 지속되는 양상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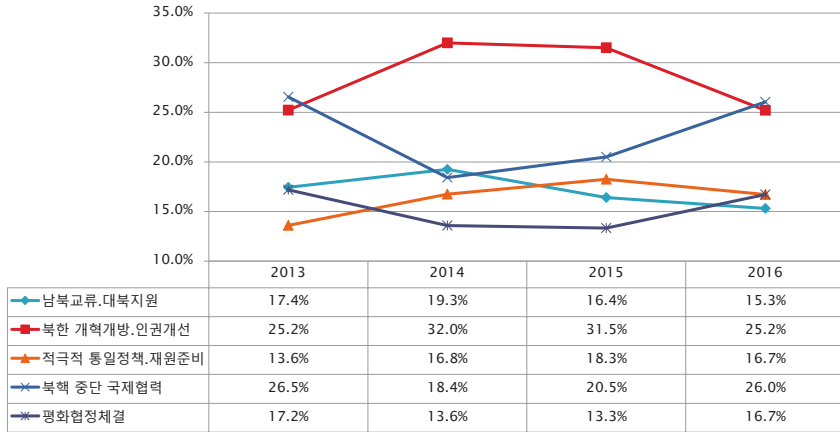
남북관계 악화 책임(크다) 응답 비율



북한 책임이 크다는 응답은 80% 후반대에서 고착된 양상
2015년에 비해 한국과 미국 책임이 크다는 응답은 각각 8.2%와 6.0% 감소
반면 중국 책임 크다는 응답은 5.4% 증가

46

바람직한 최우선 대북정책 인식



북한개혁개방.인권개선이 6.3% 감소하였고

북핵 중단 국제협력과 평화협정체결이 각각 5.5%와 3.4%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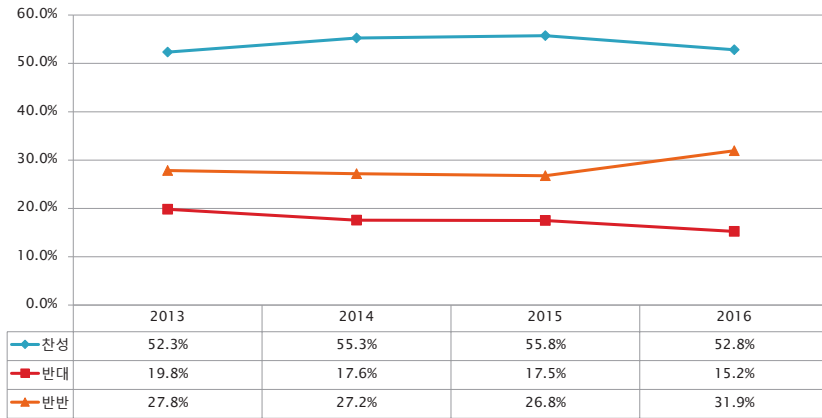
2016년의 경우 북핵 중단 국제협력과 북한개혁개방.인권개선이 가장 높은 비율로 수렴

47

3. 한국의 자체 핵무기 보유 인식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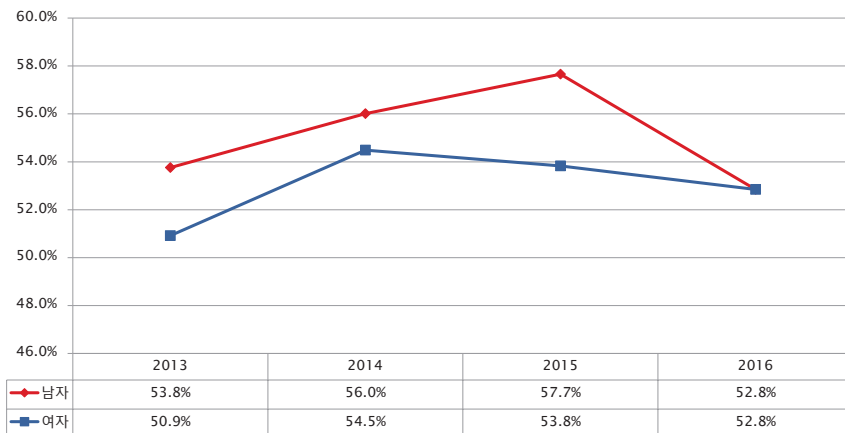
한국의 자체 핵무기 보유에 대한 인식



찬성 응답 비율이 2015년에 비해 3.0% 감소하였으나 전반적으로 50% 초반대 지속
반대 의견도 2.3% 감소한 가운데 반반이라는 판단유보층이 5.1% 증가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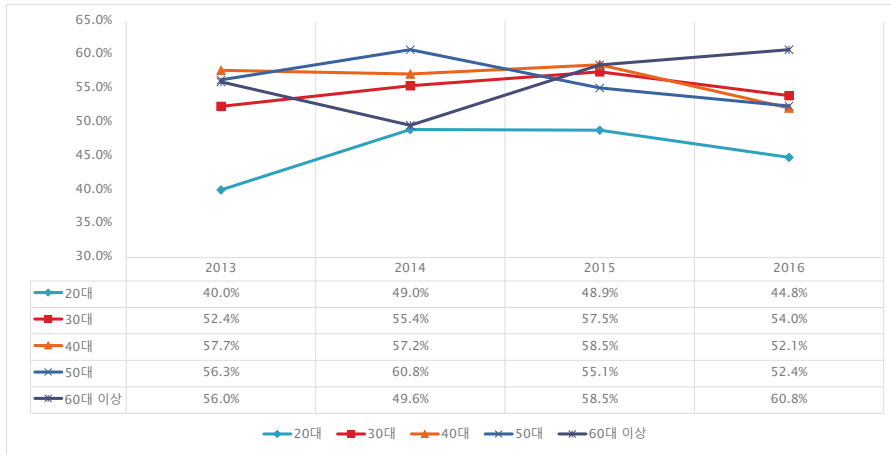
성별 한국의 자체 핵무기 보유 찬성 비율



2015년까지 미미하나마 남성의 찬성 비율이 여성보다 높았으나 올해에는 동일한 수준으로 수렴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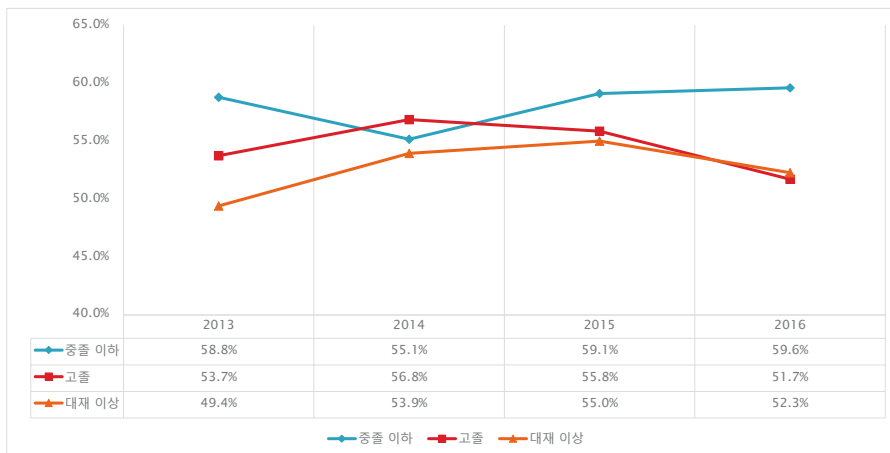
연령대별 한국의 자체 핵무기 보유 찬성 비율



2016년의 경우 60대 이상이 60.8%로 가장 높고(+2.3%), 그 다음을 30대>50대>40대>20대가 차지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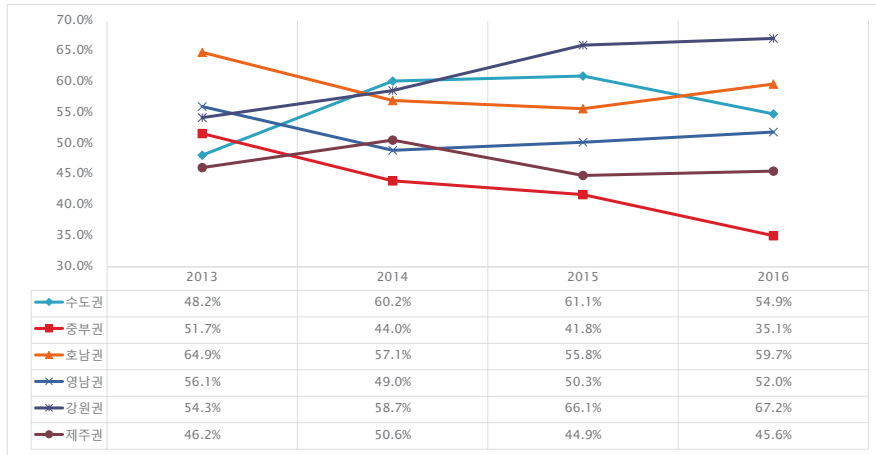
학력수준별 한국의 자체 핵무기 보유 찬성 비율



중졸 이하가 59.6%로 가장 높고(+0.5%)
고졸과 대재 이상은 2015년에 비해 각각 4.1%와 2.7% 감소하여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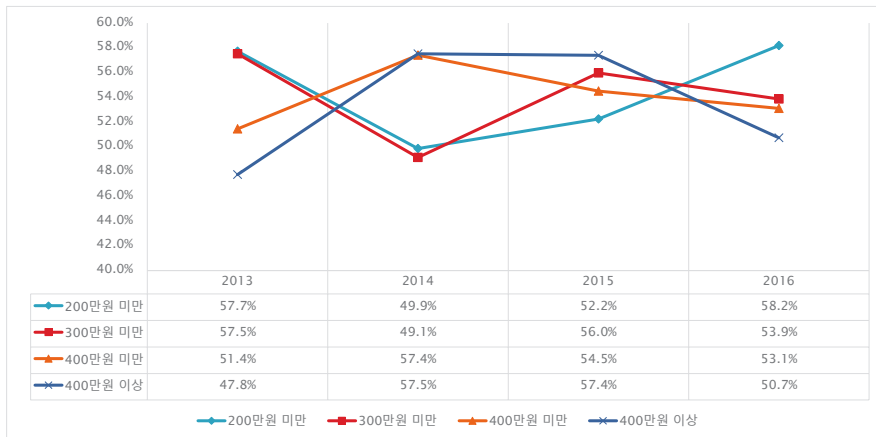
지역별 한국의 자체 핵무기 보유 찬성 비율



강원권(+1.1%)>호남권(+3.9%)>수도권(-6.2%)>영남권(+1.7%)>제주권(+0.7%)>중부권(-6.7%) 순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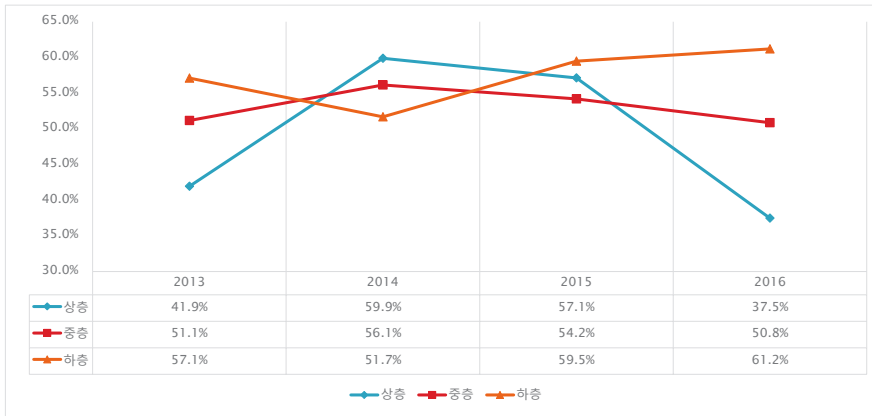
소득수준별 한국의 자체 핵무기 보유 찬성 비율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찬성비율이 높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찬성비율이 낮은 양상으로 회귀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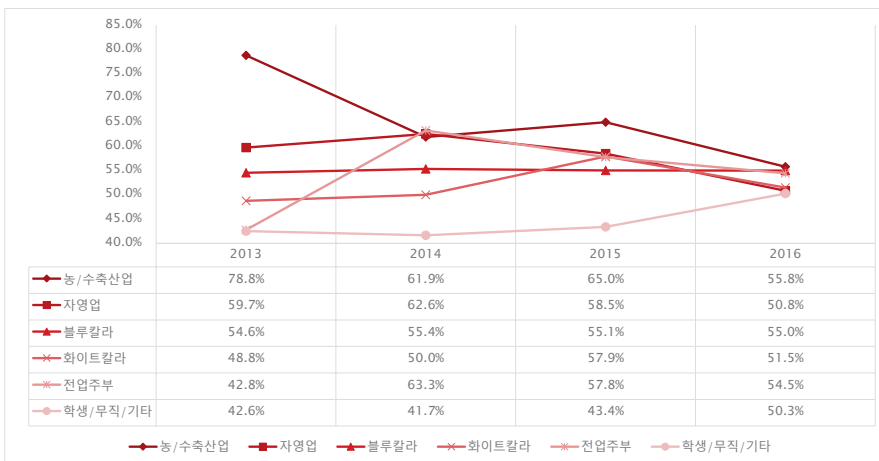
주관적 계층인식별 한국의 자체 핵무기 보유 찬성 비율



주관적 계층인식에서 하층이 상층보다 찬성 비율이 높은 양상으로 회귀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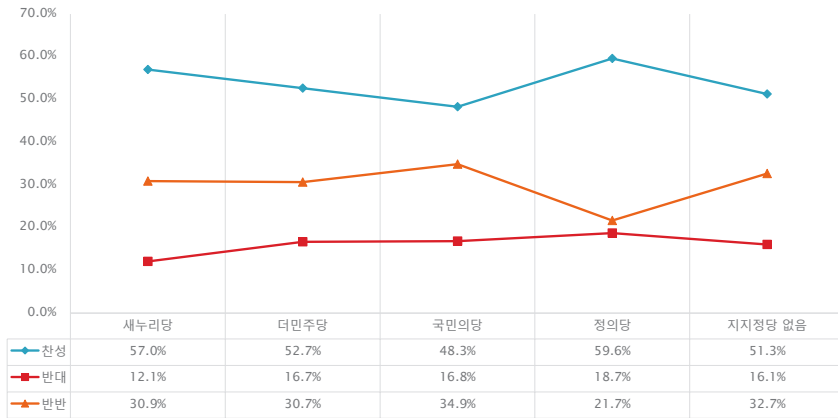
직업별 한국의 자체 핵무기 보유 찬성 비율



2016년의 경우 농축수산업, 블루칼라, 전업주부 층의 찬성 비율이 화이트칼라, 자영업, 학생 등 기타 층보다 3.0~5.5% 높은 양상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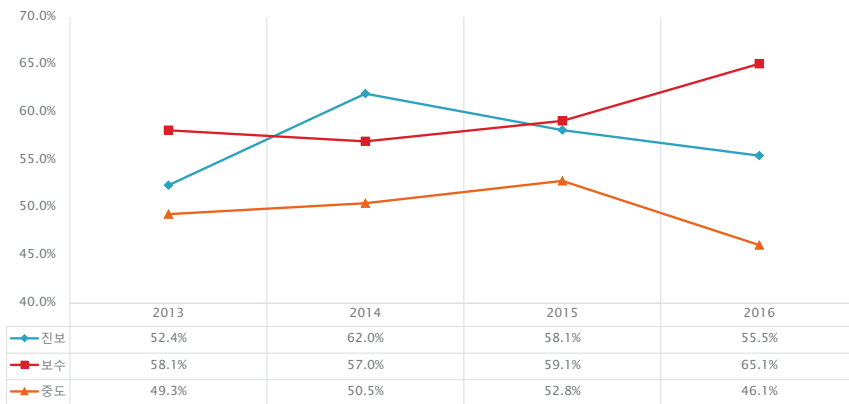
지지정당별 한국의 자체 핵무기 보유 인식



핵무기 보유 찬성 비율이 정의당>새누리당>더민주당>무당파>국민의당 순으로 높음
정당이 지향하는 이념성향과는 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임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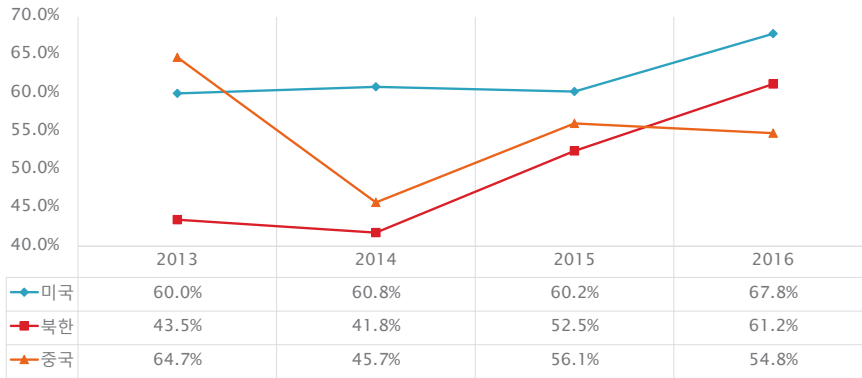
정치성향별 한국의 자체 핵무기 보유 찬성 비율



보수층이 2015년보다 6.0% 증가하여 가장 높고
진보층은 2015년보다 2.6% 감소하여 그 다음을 차지하였고
중도층도 2015년보다 6.7% 감소하여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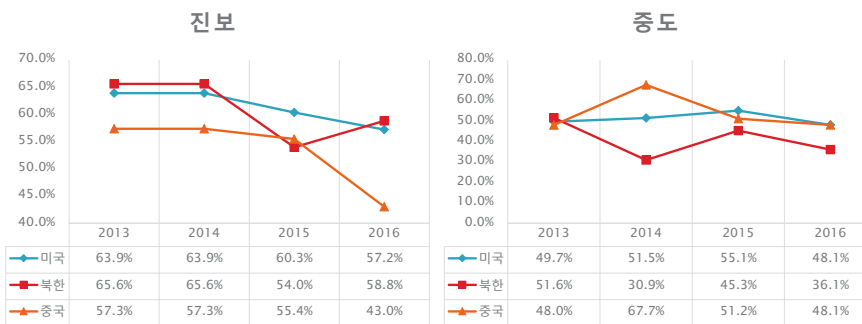
보수-친밀한 국가 인식별 한국의 자체 핵무기 보유 찬성 비율



2016년의 경우
미국을 친밀하게 생각하는 보수층에서 핵무기 보유 찬성 비율이 67.8%로 가장 높음(+7.6%)
친미 인식 층이 역설적으로 미국에 대한 불신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어 주목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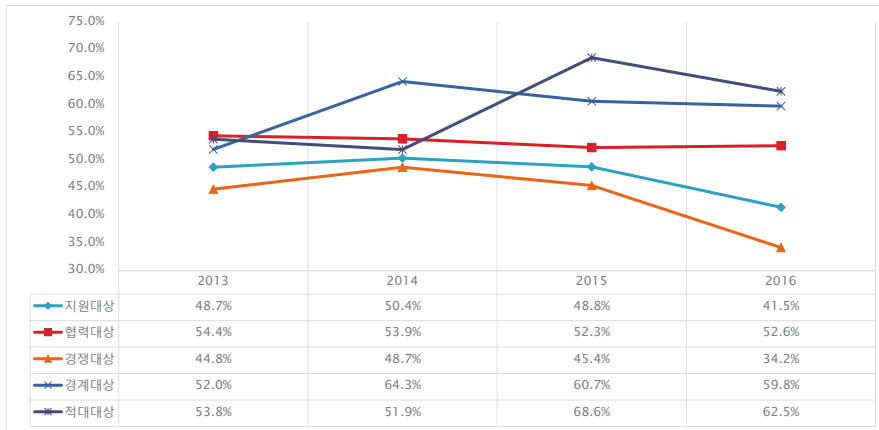
보수-중도의 친밀한 국가 인식별 한국의 자체 핵무기 보유 찬성 비율



2016년의 경우
진보는 미국과 북한이 비슷한 수준이었고 중도는 미국과 중국이 비슷한 수준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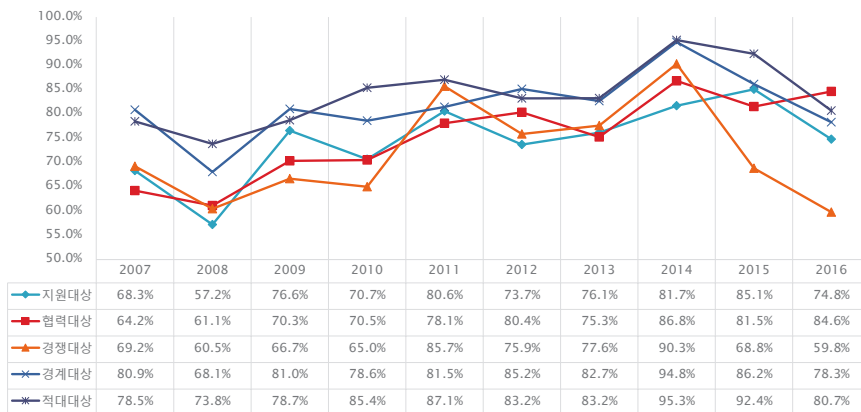
대북인식별 한국의 자체 핵무기 보유 찬성 비율



적대대상 인식층에서 2015년 찬성비율이 급증한 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
경계대상>협력대상>지원대상>경쟁대상 순으로 높은 찬성 비율을 보임
(경쟁대상이라는 인식층의 북핵 위협 인식이 낮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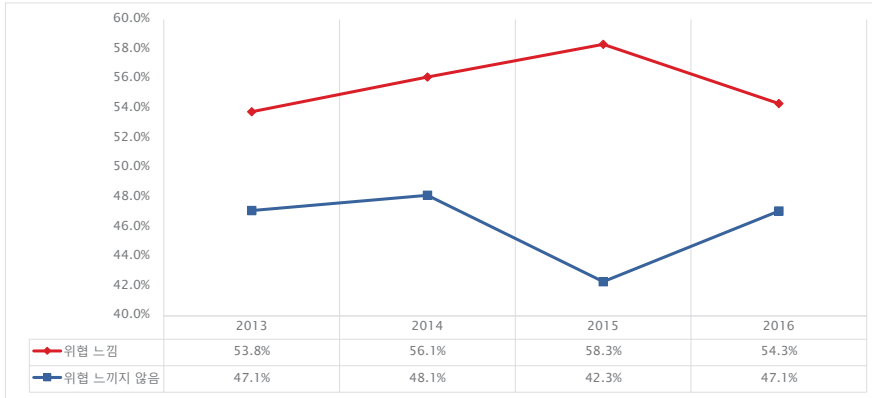
※ 대북인식별 북핵 위협(위협 느낌) 인식 비율



2016년의 경우 경쟁대상이라는 응답 층에서 북핵을 위협으로 느낀다는 응답이 최저 수준을 기록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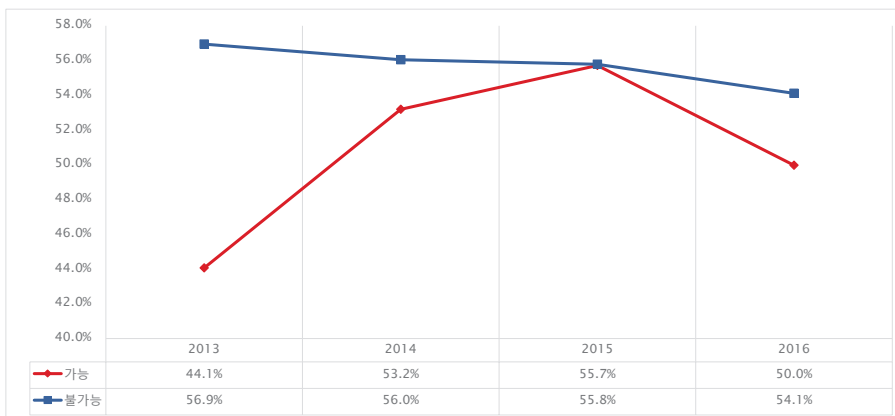
북핵 위협 인식별 한국의 자체 핵무기 보유 찬성 비율



북한 핵을 위협으로 느낀다는 응답 층의 핵무기 보유 찬성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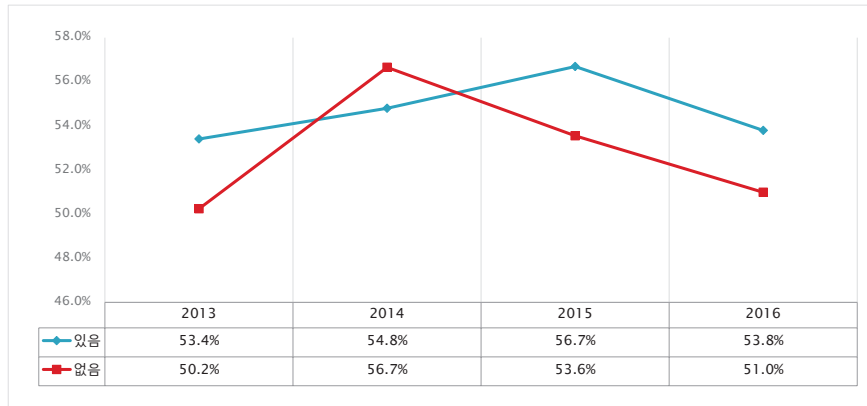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 인식별 한국의 자체 핵무기 보유 찬성 비율



북한과의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층에서 핵무기 보유 찬성 비율이 높은 수준을 지속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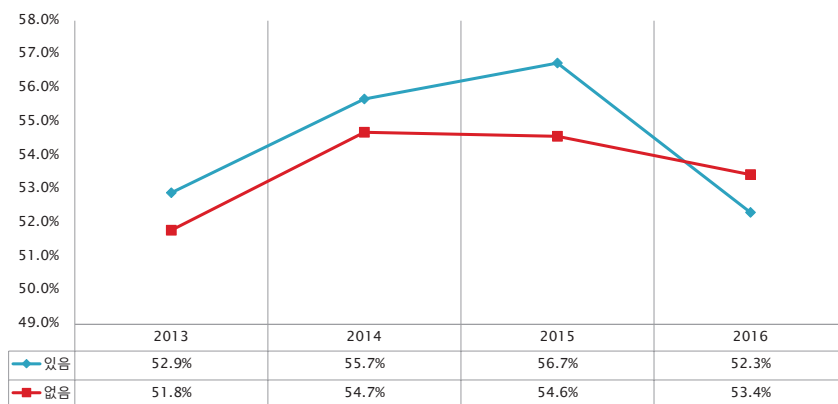
북한도발 가능성 인식별 한국의 자체 핵무기 보유 찬성 비율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 층에서 핵무기 보유 찬성 비율이 약간 높은 수준을 보임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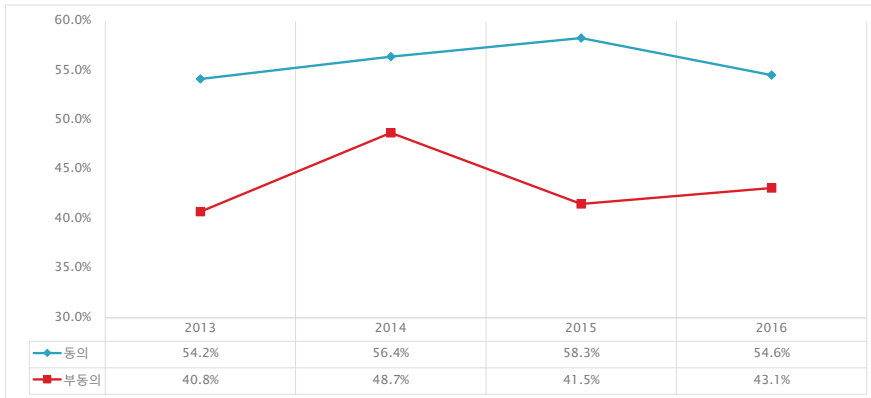
한반도 전쟁 가능성 인식별 한국의 자체 핵무기 보유 찬성 비율



2015년까지 한반도전쟁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 층에서 찬성 비율이 높은 추세를 유지하다가 2016년 들어 미미하나마 역전된 양상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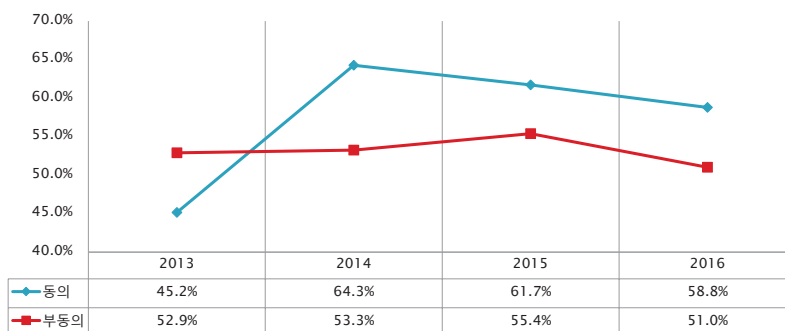
북한 핵 불포기 주장 동의 여부별 한국의 자체 핵무기 보유 찬성 비율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는 층에서 찬성비율이 높은 추세 지속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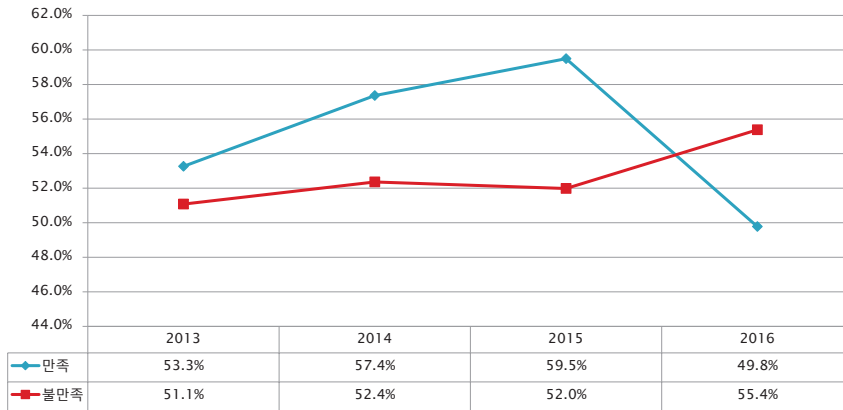
북한 정권 안정화 주장 동의 여부별 한국의 자체 핵무기 보유 찬성 비율



2014년 이후 북한이 안정되고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층에서 찬성 비율이 높은 추세 지속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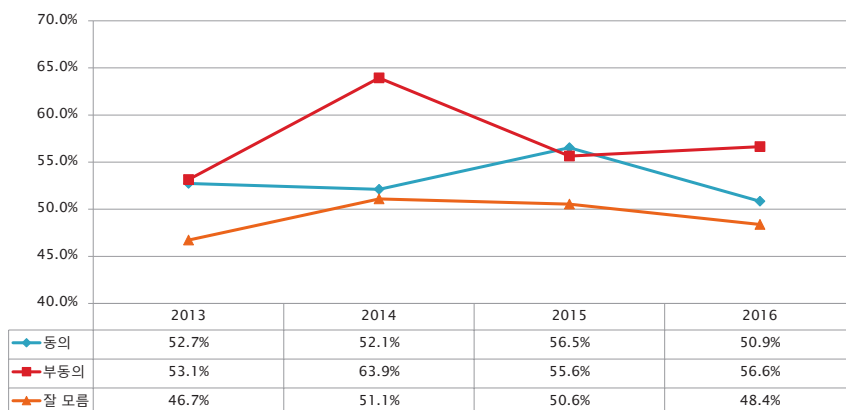
대북정책 만족도별 한국의 자체 핵무기 보유에 대한 인식



대북정책 만족 층에서 찬성 비율이 높았던 추세가 2016년 조사에서 역전된 양상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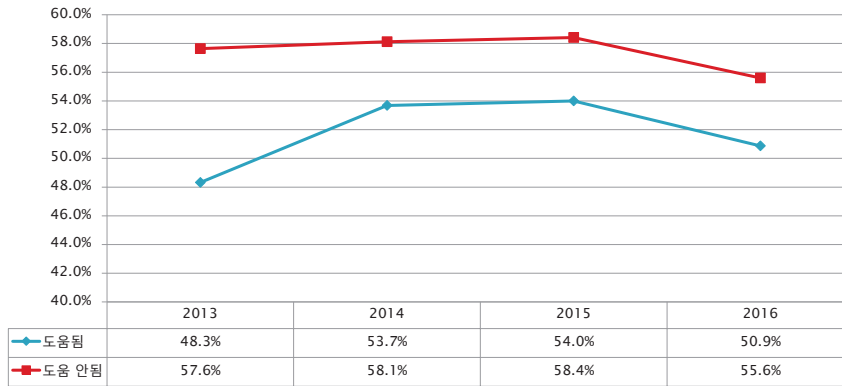
남북합의계승 인식별 한국의 자체 핵무기 보유 찬성 비율



남북합의는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계승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층의 찬성 비율이 가장 높음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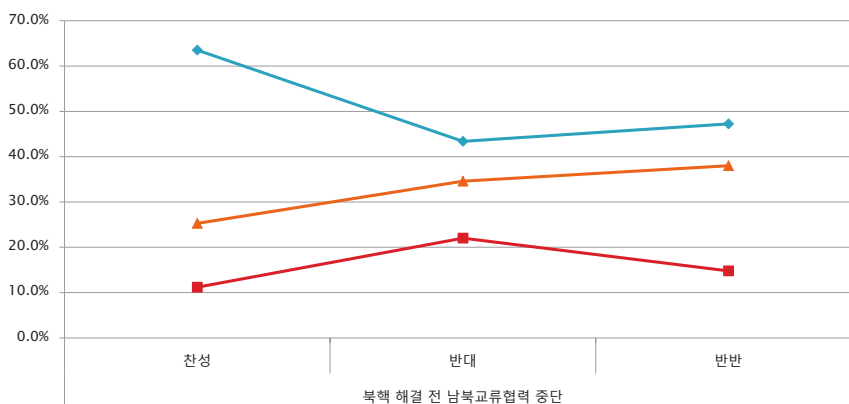
남북경협 북한 개혁개방 기여 인식별 한국의 자체 핵무기 보유 찬성 비율



남북경제협력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인식층의 찬성 비율이 높은 추세 지속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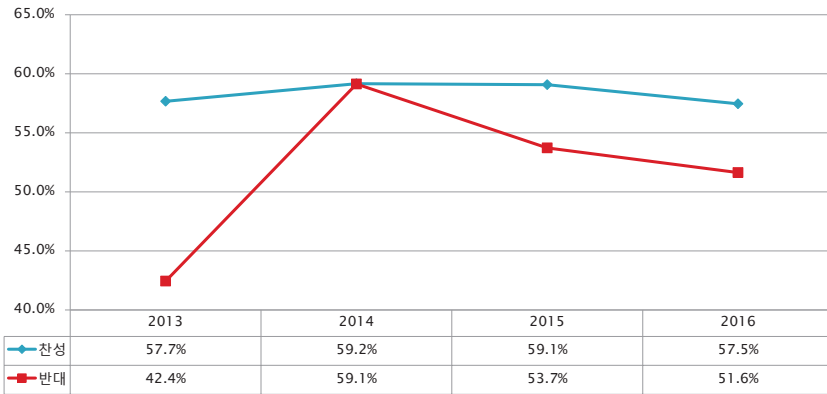
북핵 해결 전 교류협력 중단 인식별 한국의 자체 핵무기 보유 인식



북핵 해결 전 남북교류협력 중단 찬성 층에서 핵무기 보유 찬성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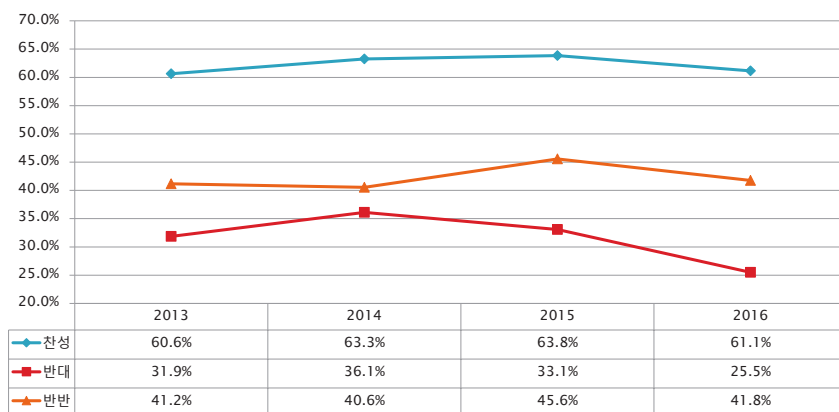
정부의 대북빠라살포 차단 인식별 한국의 자체 핵무기 보유 찬성 비율



정부의 대북빠라살포 차단에 찬성하는 층에서 핵무기 보유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남

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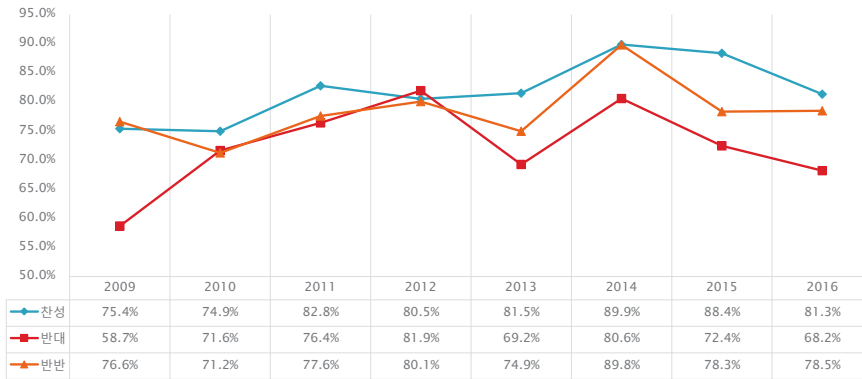
정부의 북한인권문제 지속 제기 인식별 한국의 자체 핵무기 보유 찬성 비율



정부의 북한인권문제 지속제기 찬성 층에서 핵무기 보유 찬성 비율이 높은 추세를 지속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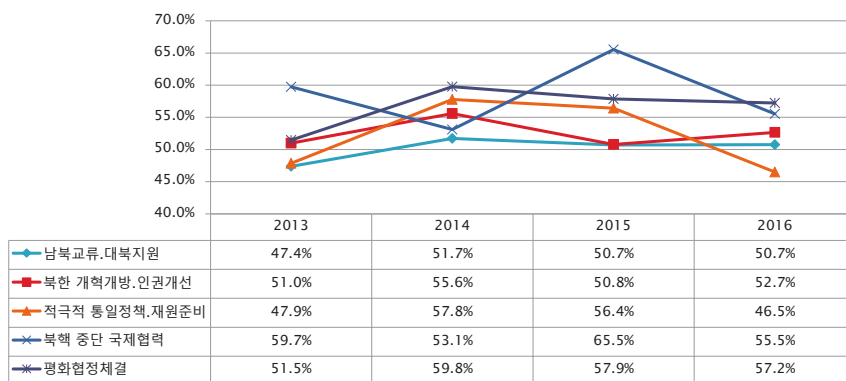
※ 정부의 북한인권문제 지속 제기 인식별 북핵 위협(위협 느낌) 인식



정부의 북한인권문제 지속제기 찬성 층에서 북핵을 위협으로 느낀다는 응답이 높은 추세 지속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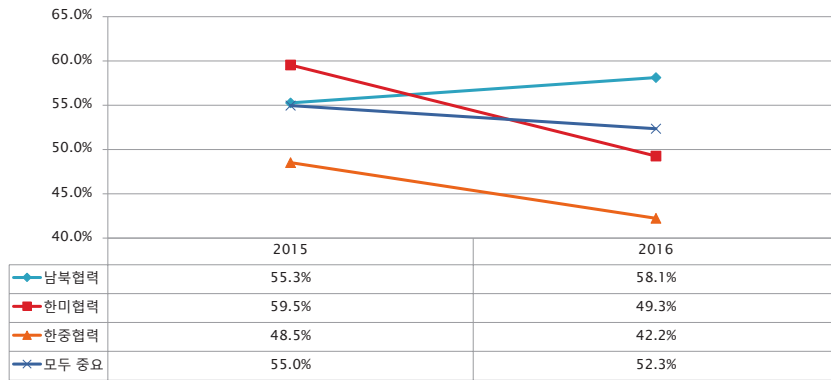
최우선 대북정책 인식별 한국의 자체 핵무기 보유 찬성 비율



북핵 중단 국제협력 응답 층에서 찬성 비율이 가장 크게 하락(-10.0)
적극적 통일정책, 재원준비 응답 층에서도 찬성 비율이 크게 하락(-9.9%),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냄
핵 보유와 북핵 중단을 위한 국제협력이나 적극적 통일준비가 상충한다는 인식 증가 가능성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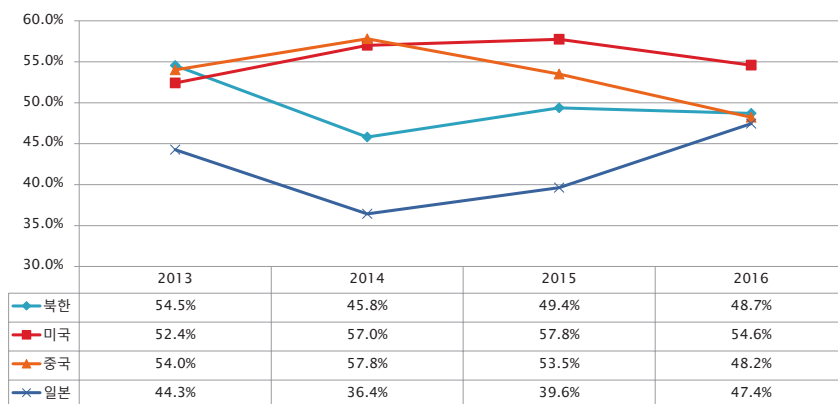
우선 협력대상 인식별 한국의 자체 핵무기 보유 찬성 비율



남북협력 중시 층에서 2.8% 증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한미협력(-10.2%), 한중협력(-6.3%), 모두 중요(-2.7%) 응답 층에서는 감소 (협력대상 관련 진보: 남북>모두>한미>한중, 보수: 모두>남북>한미>한중 순)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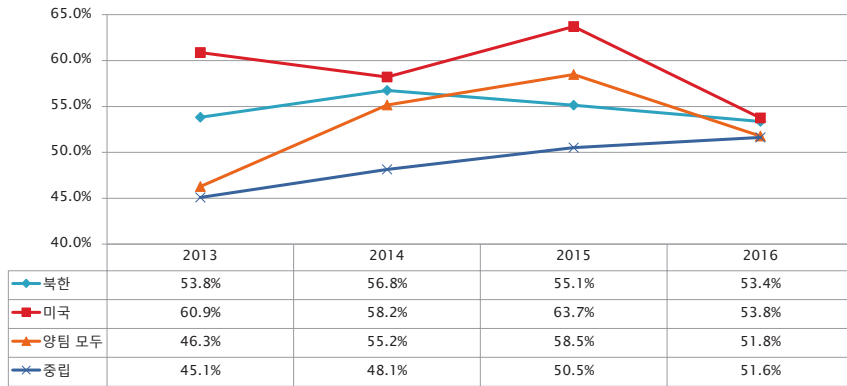
친밀한 국가 인식별 한국의 자체 핵무기 보유 찬성 비율



미국을 친밀하게 보는 층에서 핵무기 보유 찬성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러시아는 2016년 주변국 친밀감 조사에서 0.4%를 차지하여 제외)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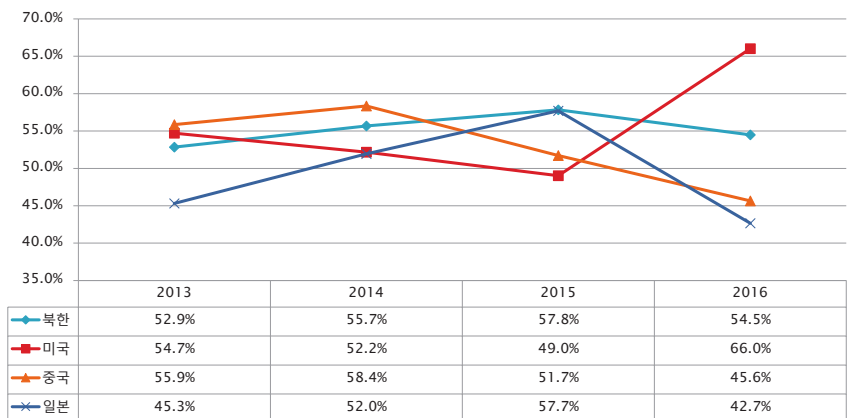
미-북 월드컵 경기시 응원할 팀 인식별 한국의 자체 핵무기 보유 찬성 비율



2016년 조사에서 전반적으로 50% 초반대로 수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을 응원하겠다는 층에서 핵무기 보유 찬성 비율이 가장 높은 양상을 보이는 점에 유의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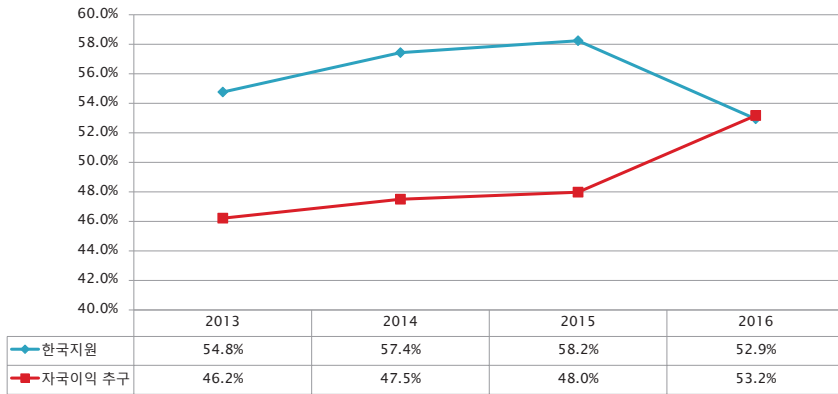
평화위협 국가 인식별 한국의 자체 핵무기 보유 찬성 비율



평화위협 국가 인식에 따른 핵무기 보유 찬성 비율을 보면 2016년의 경우 미국을 평화위협국가로 인식하는 층에서 핵무기 보유 찬성 응답이 급증(+17.0%), 가장 높은 찬성 비율을 나타냄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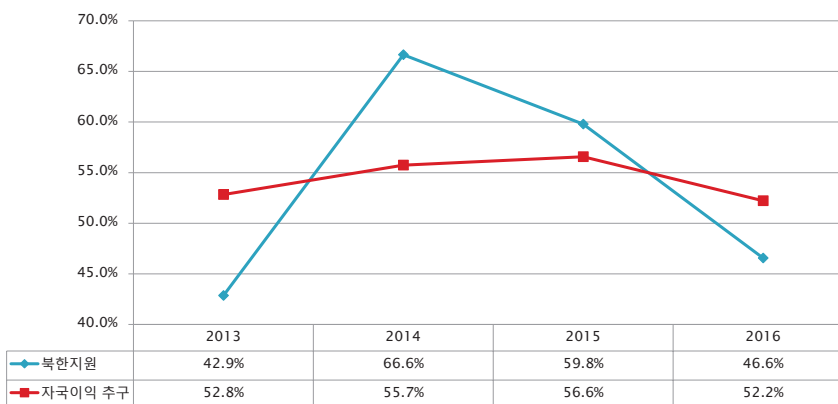
미국의 한반도 전쟁시 태도 인식별 한국의 자체 핵무기 보유 찬성 비율



2016년 조사에서 한국지원 인식층과 자국이익의 추구 인식층의 찬성 비율이 수렴
2013~2015년 간 미국이 한국을 지원할 것으로 보는 층에서 핵무기 보유 찬성 비율이 높은 양상

81

중국의 한반도 전쟁시 태도 인식별 한국의 자체 핵무기 보유 찬성 비율



2016년 조사에서 북한지원 인식층의 찬성 비율이 급감(-13.2%)
자국이익의 추구 인식층은 상대적으로 일관되나 북한지원 인식층의 등락 폭이 큼

82

4. 결론

83

[대북정책 만족도]

0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50% 이하로 하락(45.1%)

0 연령대별로는 30대에 이어 60대 이상에서 크게 하락(-9.9)

0 60대 이상 층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의 분화 가능성 주시

- 북핵 해결 전 교류협력 중단 찬성 비율에서
만족 층(46.4%)과 불만족 층(33.1%) 간 차이가 13.3%

0 정치성향 상 보수 층에서 2015년 대비 만족도가 급락(-11.0%)

- 진보 층은 -2.9%, 중도 층은 -3.2%

0 대북정책 만족도별 바람직한 최우선 대북정책은

- 만족 층: 북한개혁개방, 인권개선, 북핵중단 국제협력을 더 선호
- 불만족 층: 적극적 통일정책, 자원 준비, 평화협정체결을 더 선호

84

[대북정책 현안, 방향 인식]

0 전반적으로 북한과의 교류협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 증가

- 대북지원의 북한주민생활 기여(-4.5%), 남북경협외 북한개혁개방 기여(-1.8%), 금강산관광 재개(-4.6%) 긍정 인식 하락
- 개성공단 재가동 찬성도 47.0%로 절반 이하
- 다만 북핵 해결 전 교류협력 중단 찬성 비율은 40.5%에 그쳐 2015년 북핵 해결 전 대북지원 중단 찬성 비율(51.2%)보다 10.7% 감소, 교류협력의 전면적 중단에는 다소 신중한 태도 시현

0 중국의 남북관계 악화 책임이 크다는 응답이 5.4% 증가

북한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 한국과 미국은 감소

85

0 바람직한 최우선 대북정책으로

- 북한개혁개방.인권개선이 6.3% 감소하였고 북핵 중단 국제협력과 평화협정체결이 각각 5.5%와 3.4% 증가
- 평화협정체결의 경우 보수 중 대북정책 불만족 층에서 13.3% 증가, 최소한의 상황관리 필요성 제기 가능성

[한국의 핵무기 보유 인식]

0 핵무기 보유 찬성이 전년보다 3.0% 하락, 52.8% 기록(절반 상회)

-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가장 높고 20대 이하가 가장 낮음
-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찬성 비율 낮은 양상
- 지역별로는 강원.호남권이 높고 제주.중부권이 낮은 양상

86

- 직업별로는 농축수산업, 블루칼라, 전업주부 층의 찬성비율이 화이트칼라, 자영업, 학생 등 기타 층보다 높은 양상
-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과 새누리당, 정치성향별로는 보수 층에서 핵무기 보유 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양상

0 친미 인식 층에서 핵무기 보유 찬성비율이 최고인 점 주목

- 미국을 친밀한 국가로 인식한 층에서 찬성 비율이 최고
- 미-북 월드컵 경기시 미국 응원 층에서 찬성비율이 높은 경향
 - * 평화위협 국가로 북한이나 중국을 지목한 층보다 미국을 지목한 층에도 핵무기 보유 찬성 비율이 최고

⇒ **핵무기 보유 지지 층이 미국을 가장 중시하면서도 미국에 대한 불신을 누구보다 크게 갖고 있을 가능성 주시**

대북정책 인식 (요약)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1. 정부의 대북정책 만족도

-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50% 이하로 하락
 - 2016년 45.1%로 전년도 50.4%에 비해 5.3% 하락
- 연령대별로는 2015년에 비해 30대에 이어 60대 이상에서 크게 하락
 - 50대에서 0.6% 상승한 반면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모두 하락
 - 30대 -10.8% > 60대 이상 -9.9% > 40대 -5.9% > 20대 -2.0% 순으로 크게 하락
- 60대 이상 층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의 분화 가능성 주시
 - 60대 이상의 경우 북핵 해결 전 교류협력 중단 찬성 비율에서 만족 층(46.4%)과 불만족 층(33.1%) 간 차이가 13.3%
 - 만족 층과 불만족 층 간 북핵 해결 전 교류협력 중단 찬성 비율 격차가 20대 15.9%, 30대 8.6%, 40대 1.1%, 50대 6.1%
- 정치성향 상 보수층에서 2015년 대비 만족도가 급락(-11.0%)
 - 진보층은 -2.9%, 중도층은 -3.2% 하락
- 대북정책 만족도별 바람직한 최우선 대북정책은
 - 만족 층: 북한개혁개방, 인권개선, 북핵중단 국제협력을 더 선호

- 불만족 층: 적극적 통일정책, 재원 준비, 평화협정체결을 더 선호
- 평화협정체결의 경우 만족 층(+3.3%)과 불만족 층(+2.9%) 모두에서 전년보다 증가
- 불만족 층의 경우 적극적 통일정책, 재원준비가 전년 대비 6.5% 증가하였으며, 개성공단 재가동 찬성이 54.7%, 북핵 해결 전 교류협력 중단 반대가 34.4%로 각각 평균 이상을 차지, 선호하는 통일준비 방향이 북한 붕괴에 대한 기대라기보다 교류협력 기반의 준비일 가능성 시사

2. 대북정책 현안과 방향에 대한 인식

- 전반적으로 북한과의 교류협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 증가
 - 대북지원의 북한주민생활 기여(-4.5%), 남북경협외 북한개혁개방 기여(-1.8%), 금강산관광 재개(-4.6%) 동의나 찬성 비율이 하락하였고 개성공단 재가동 찬성도 47.0%로 절반 이하 차지
 - 다만 북핵 해결 전 교류협력 중단 찬성 비율은 40.5%에 그쳐 2015년 북핵 해결전 대북지원 중단 찬성 비율(51.2%)보다 10.7% 감소, 교류협력의 전면적 중단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태도 시현
 - 중국의 남북관계 악화 책임이 크다는 응답이 5.4% 증가
 - 북한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 한국과 미국은 감소
 - 바람직한 최우선 대북정책 인식에서 2015년에 비해
 - 북한개혁개방, 인권개선이 6.3% 감소하였고 북핵 중단 국제협력과 평화협정체결이 각각 5.5%와 3.4% 증가
 - 특히 보수 중 대북정책 만족 층에서 교류협력, 대북지원이 4.2% 증가하고, 불만족 층에서 평화협정체결이 13.3% 증가, 최소한의 상황관리 필요성 제기 가능성
- * 진보: 북핵중단 국제협력 +12.0% / 보수: 평화협정체결 +5.4% / 중도: 북핵 중단 국제협력 +5.8%, 평화협정체결 +5.7%

3. 한국의 핵무기 보유 인식

- 핵무기 보유 찬성이 전년보다 3.0% 하락, 52.8% 기록(절반 상회)
 -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가장 높고 20대 이하가 가장 낮음
 -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찬성 비율 낮은 양상
 - 지역별 찬성비율은 강원·호남권이 높고 제주·충부권이 낮은 양상
 - 직업별로는 농축수산업, 블루칼라, 전업주부 층의 찬성비율이 화이트칼라, 자영업, 학생 등 기타 층보다 높은 양상
 -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과 새누리당, 정치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핵무기 보유 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양상

- 친미 인식 층에서 핵무기 보유 찬성비율이 최고인 점 주목
 - 미국을 친밀한 국가로 인식한 층에서 찬성 비율이 최고
 - 미-북 월드컵 경기시 미국 응원 층에서 찬성비율이 높은 경향
 - 평화위협 국가로 북한이나 중국을 지목한 층보다 미국을 지목한 층에서 핵무기 보유 찬성 비율이 최고

⇒ 핵무기 보유 지지층이 미국을 가장 중시하면서도 미국에 대한 불신을 누구보다 크게 갖고 있거나 미국이 한국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할 수도 있다는 안이한 인식을 갖고 있을 가능성 우려

2016 통일의식조사

전환기 통일 · 대북정책 방향은?

발표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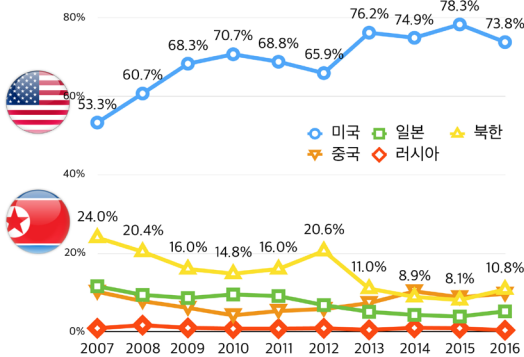
주변국 관계 인식

최규빈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주변국 관계 인식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최규빈

주변국 친밀감



미국을 가장 가깝게 느낀다는 응답자는 73.8%
가장 높은 친밀도

북한을 가장 가깝게 느낀다는 응답자는 10.8%
3년간 감소하던 호감도 다시 증가

중국 친밀도 8.8%에서 9.7%로 소폭 증가
지난 2년과 달리 북한보다 낮은 친밀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미국	53.3%	60.7%	68.3%	70.7%	68.8%	65.9%	76.2%	74.9%	78.3%	73.8%
일본	11.6%	9.4%	8.6%	9.5%	9.1%	6.8%	5.1%	4.3%	3.9%	5.2%
북한	24.0%	20.4%	16.0%	14.8%	16.0%	20.6%	11.0%	8.9%	8.1%	10.8%
중국	10.2%	7.8%	6.1%	4.2%	5.3%	5.8%	7.3%	10.3%	8.8%	9.7%
러시아	0.9%	1.7%	1.0%	0.8%	0.8%	0.9%	0.5%	1.0%	0.9%	0.4%

주변국 친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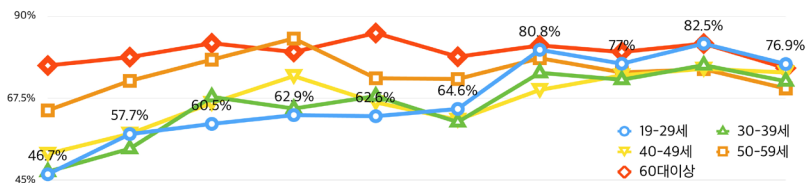
주변국 친밀감 선호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미국	1	1	1	1	1	1	1	1	1	1
일본	3	3	3	3	3	3	4	4	4	4
북한	2	2	2	2	2	2	2	3	3	2
중국	4	4	4	4	4	4	3	2	2	3
러시아	5	5	5	5	5	5	5	5	5	5

미국>북한>중국>일본>러시아 순서의 호감도

- 미국: 10년 동안 친밀감이 가장 높은 국가
- 중국: 2014, 2015 미국에 이어 두 번째 선호도, 2016년 미국, 북한에 이어 세 번째
- 북한: 2014, 2015 세 번째 선호도로 떨어짐, 2016년 미국에 이어 두 번째

주변국 친밀감-연령대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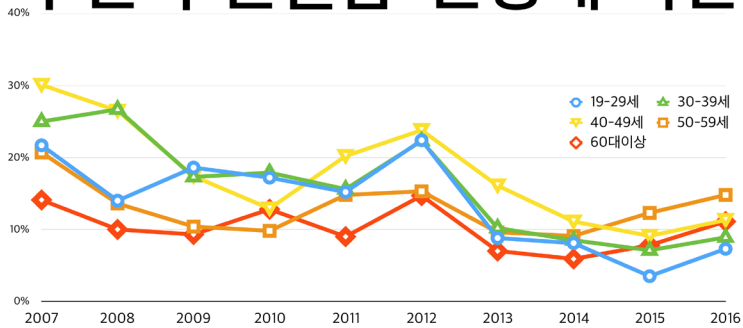


20대 대미친밀감:

2007년 46.7%, 연령대에서 가장 낮음 but 2016년 76.9%, 가장 높음
2016년으로 갈수록 연령대 편차는 점차 줄어들음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9-29세	46.7%	57.7%	60.5%	62.9%	62.6%	64.6%	80.8%	77.0%	82.5%	76.9%
30-39세	47.4%	53.7%	67.9%	64.7%	68.1%	61.0%	74.5%	72.6%	76.6%	72.2%
40-49세	52.3%	57.8%	66.2%	73.6%	66.4%	61.6%	69.8%	73.8%	75.6%	74.6%
50-59세	64.2%	72.3%	78.1%	83.9%	73.0%	72.8%	78.5%	74.6%	75.5%	70.2%
60대이상	76.5%	78.8%	82.6%	80.2%	85.4%	78.9%	82.0%	80.2%	82.5%	75.8%

주변국 친밀감-연령대 북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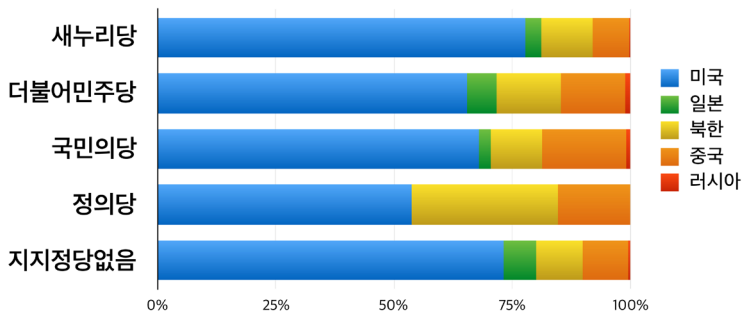


50대>40대>60대>30대>20대, 모든 연령대에서 2015년에 비해 2016년 소폭 증가
20대 2016년 7.3%로 가장 낮은 대북 친밀감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9-29세	21.7%	14.0%	18.6%	17.2%	15.2%	22.4%	8.8%	8.1%	3.5%	7.3%
30-39세	25.0%	26.7%	17.3%	17.9%	15.6%	22.3%	10.2%	8.5%	7.1%	8.9%
40-49세	30.1%	26.5%	17.4%	12.9%	20.2%	23.8%	16.1%	11.1%	9.1%	11.3%
50-59세	20.7%	13.6%	10.4%	9.8%	14.8%	15.3%	9.6%	9.1%	12.3%	14.8%
60대이상	14.1%	10.0%	9.3%	12.8%	9.0%	14.7%	7.0%	5.9%	7.8%	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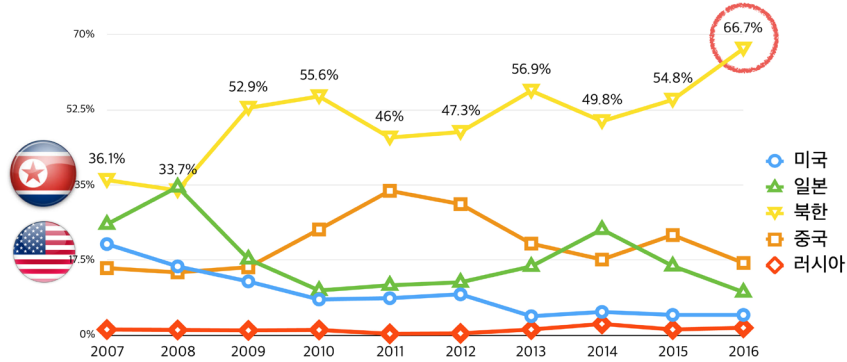
주변국 친밀감-지지정당

지지정당별 주변국 친밀감



- 대미친밀감
 새누리당(77.9%)>무당파 (73.1%)>국민의당(67.8%)>더민주당(65.5%)>정의당(53.8%)
- 대북친밀감
 정의당(30.8%)>더민주당(13.6%)>새누리·국민의당(11.0%)>무당파(9.7%)
- 대중친밀감
 국민의당(17.8%)>정의당(15.4%)>더민주당(13.6%)>무당파(9.7%)>새누리당(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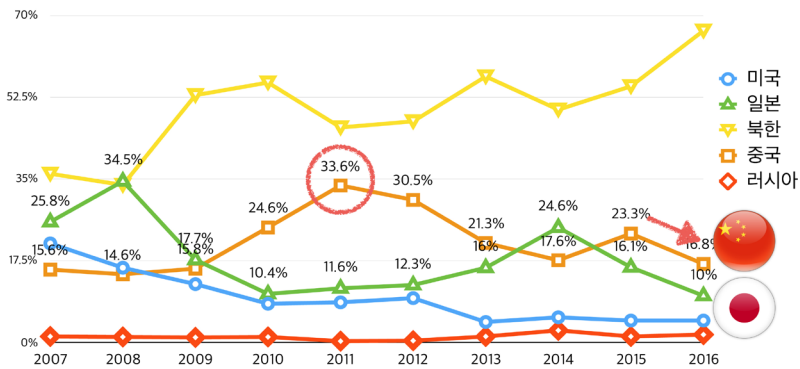
평화위협국가



북한이 가장 위협적이라는 응답은 2016년 66.7%로 가장 높음
 - 2009년(2차 핵실험), 2013년(3차 핵실험), 2016년(4차 핵실험) 시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이 증가

미국이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이라는 인식은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
 올해는 4.7%로 러시아(1.7%) 다음으로 비위협국가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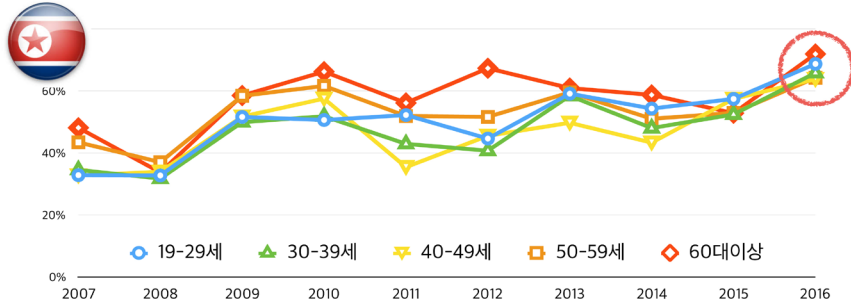
평화위협국가



중국이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라고 응답은
 2011년 33.6%까지 증가, 2014년 17.6% 까지 감소
 2015년 23.3%로 증가 후 2016년 16.8%로 다시 감소

일본의 경우 2014년 응답률이 24.6%, 두 번째로 높은 위협 국가
 2014년 이후 2년동안 감소 추세, 2016년 10%로 **역대 가장 낮은 위협인식**

평화위협국가-연령대 북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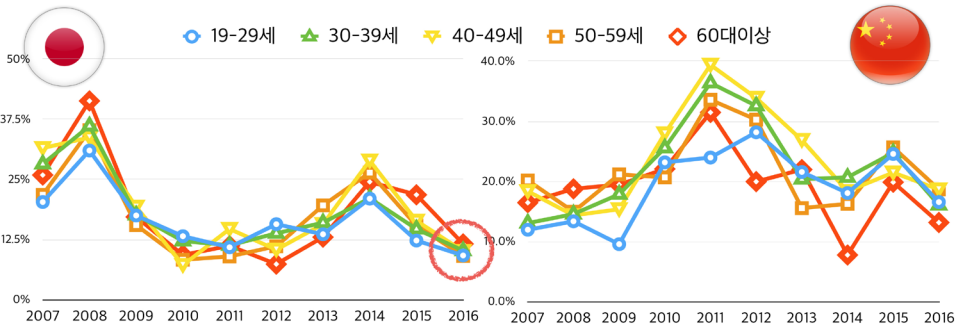


60대>20대>30대>50대>40대 순으로 북한을 한반도 평화에 위협국가로 인식

2007년 북한에 대해 40대 다음으로 가장 낮은 위협인식을 보였던 20대는
2016년 60대와 함께 북한을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인식

대북위협인식의 수렴화: 전 연령대에서 '북한이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상대'라는 인식

평화위협국가-연령대 일본, 중국



일본에 대한 위협인식의 수렴화

2014년 이후 위협국가 인식이 감소

일본의 우경화, 헌법개정 노력(집단적 자위권 행사 인정)으로 인한 부정적인 사안에도 불구하고
안보에 있어 현실적인 판단이 존재

미일동맹 강화, 북핵위험 증가, 중국부상 견제 측면에서
일본을 한반도 평화에 위협되는 국가로 보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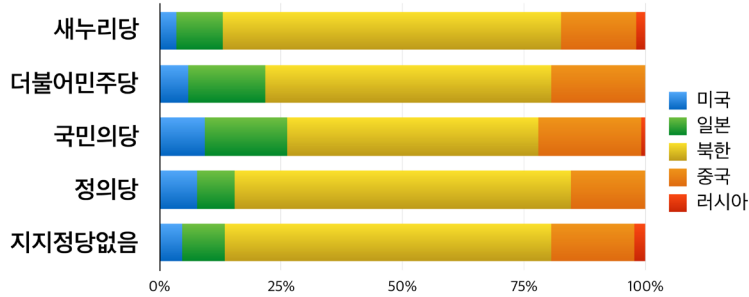
2016년 모든 연령대에서 위협인식 감소

북한에 비해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은 훨씬 낮으나
2016년 연령대별 대중위협인식의 격차는 크지 않음

최근 3년 동안 증감의 패턴이 반복:
중국에 대한 인식이 유동적, 유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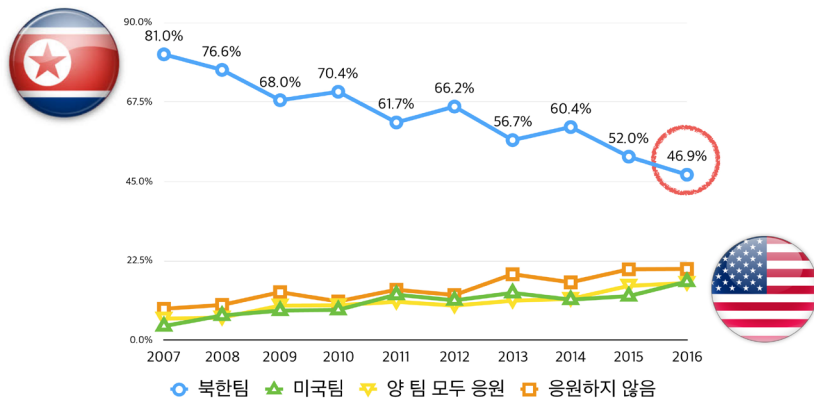
평화위협국가-지지정당

지지정당별 평화위협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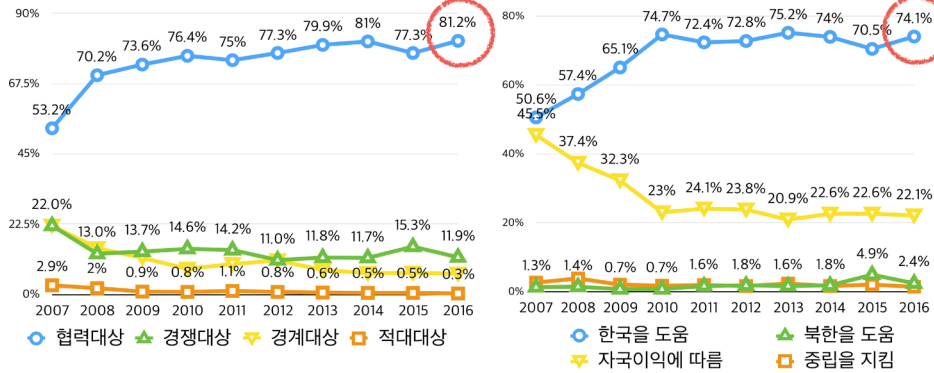
- 북한위협인식
 새누리당(69.7%)>정의당(69.2%)>무당파(67%)>더민주당(58.7%)>국민의당(51.7%)
- 중국위협인식
 국민의당(21.2%)>더민주당(19.4%)>무당파(17.2%)>새누리당(15.5%)>정의당(15.4%)
- 일본위협인식
 국민의당(16.9%)>더민주당(16%)>새누리당(9.5%)>무당파(8.8%)>정의당(7.7%)

월드컵 경기응원



'북한팀을 응원하겠다'는 응답률이 2016년 46.9%로
 조사 이래 가장 낮음, 처음으로 50% 이하

대미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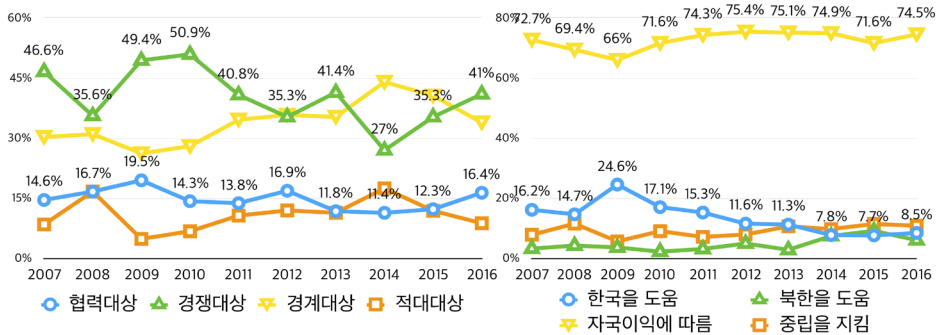
미국의 협력대상 이미지 81.2%

우방국, 동맹국, 협력자 이미지의 정형화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 시 '한국을 도울 것이다'가 74.1%로 지배적

2010년 이후 특별한 변동없음

대일인식



협력대상 16.4%, 경쟁대상 41%, 경계대상 3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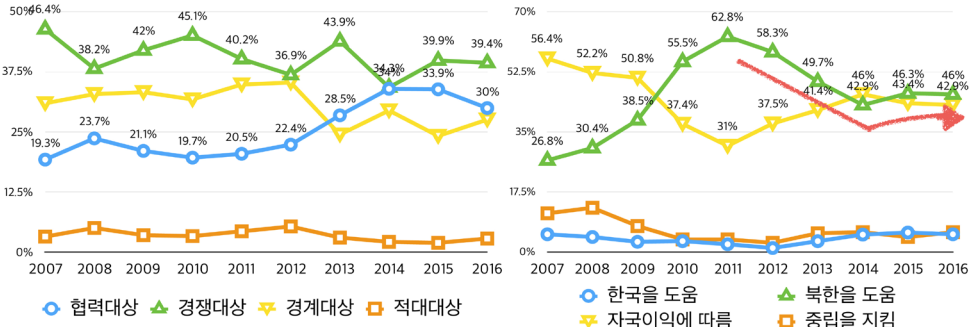
즉 협력대상보다는 경쟁과경계대상으로 인식

미·중·러 비교, 협력대상 이미지가 가장 낮고 적대대상 이미지가 가장 높음

'한국을 도울 것이다'는 2016년 8.5%로 매우 낮음,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는 74.5%로 주변국 중 가장 높음

박근혜 정부 들어 '한국을 도울 것이다'는 처음으로 10%이하

대중인식



경쟁대상으로 보는 것이 39.4%로 가장 높으며, 협력대상 30%, 경계대상 27.6%

협력, 경쟁, 경계 이미지가 복잡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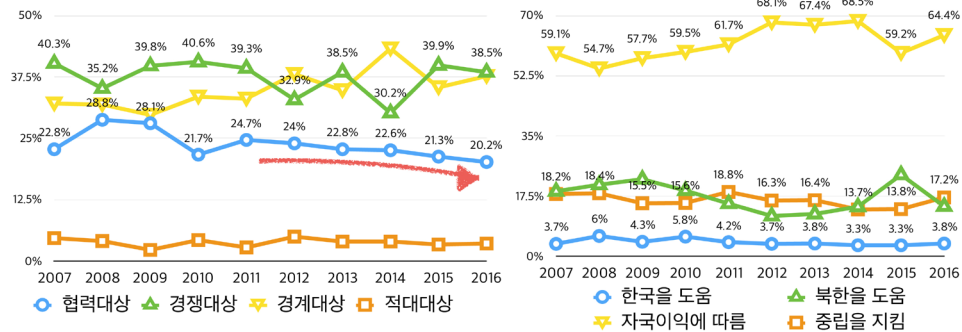
2016년 협력인식 감소, 경계인식 증가

'북한을 도움'(46%), '자국이익에 따름'(42.9%)

유사시 적극적으로 개입 할 것이라는 판단

'북한을 도울 것' 응답이 2011년 62.8% 이후 3년간 감소추세 but 최근 2년간 증가

대러인식



경쟁과 경계의 이미지가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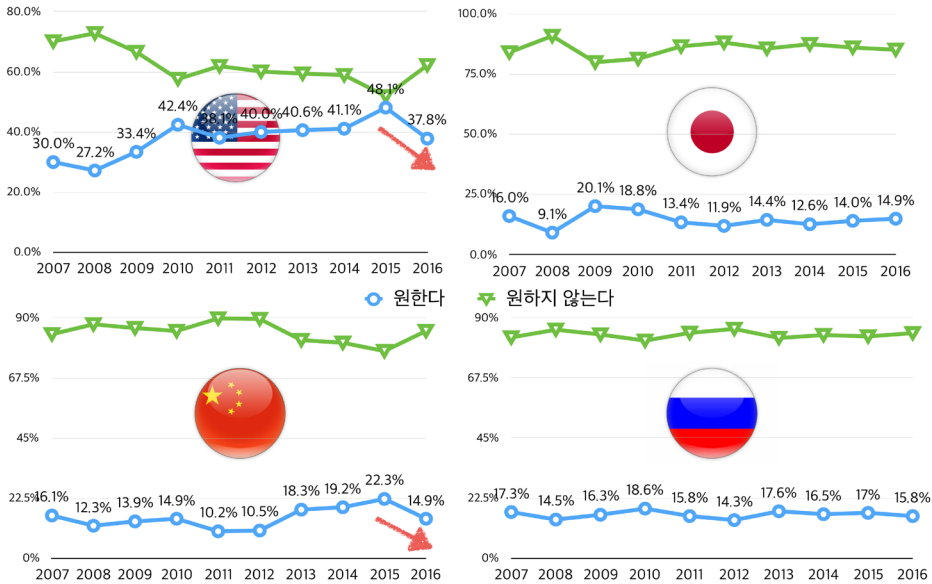
협력대상 이미지는 2010년 이래 20% 초반 지속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에 관계없이 비슷한 경향

'자국의 이익을 따를 것'이 지배적 (일본 다음으로 높음)

'중립을 지킬 것'이라는 응답이 미·중·일 에 비해 높음

주변국 통일희망



주변국 통일희망

	통일을 원함		통일을 원하지 않음	
	2016	2007-2016	2016	2007-2016
미국	37.8%	37.9%	62.2%	62.2%
일본	14.9%	14.5%	85.1%	85.5%
중국	14.9%	15.3%	85.1%	84.7%
러시아	15.8%	16.4%	84.2%	8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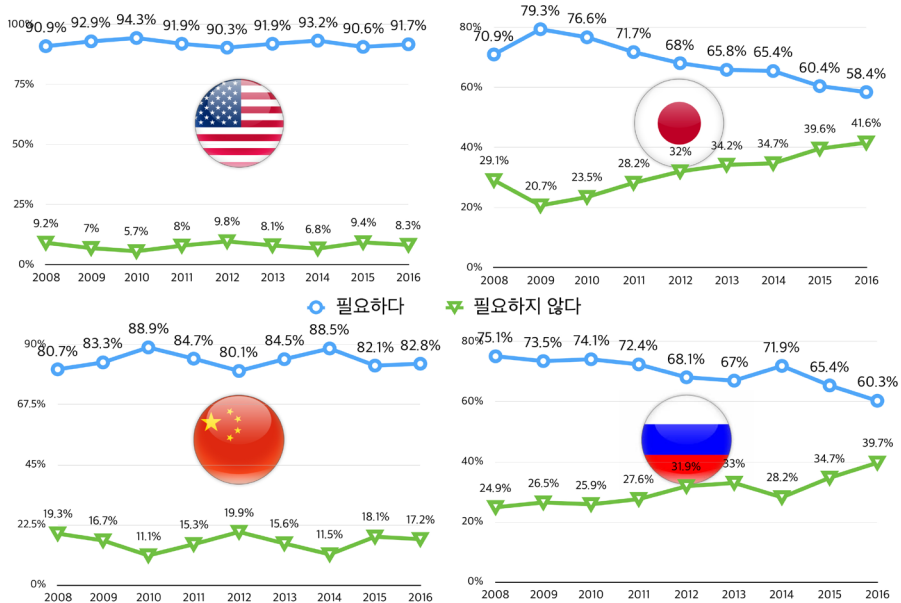
‘통일을 원한다’ 2016년 응답률: **미국** > 러시아 > 일본 · 중국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2016년 응답률: **일 · 중** > 러 > 미

통일을 가장 원하는 국가는 **미국** 가장 원하지 않는 국가는 **일본, 중국**

- 미국통일희망: 2011년 이후 지속적 증가 but 2015년 48.1%에서 10.3p 감소
- 중국통일희망: 2011년 이후 지속적 증가 but 2015년 22.3%에서 7.4%p 감소

통일협조 필요성



통일협조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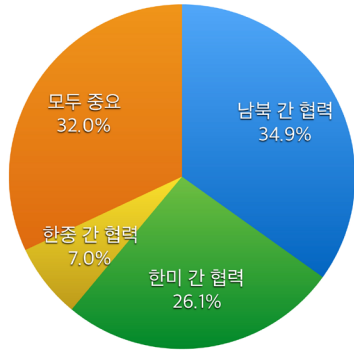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2016	2007-2016	2016	2007-2016
미국	91.7%	92%	8.3%	8%
일본	58.4%	68.5%	41.6%	31.5%
중국	82.8%	84%	17.2%	16%
러시아	60.3%	69.7%	39.7%	30.3%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률이 높은 순서는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도움이 필요없다’는 응답률이 높은 순서는 **일본>러시아>중국>미국**

미국의 도움이 가장 절실, 일본보다 중국의 도움이 더 필요

남북관계와 한·미·중 공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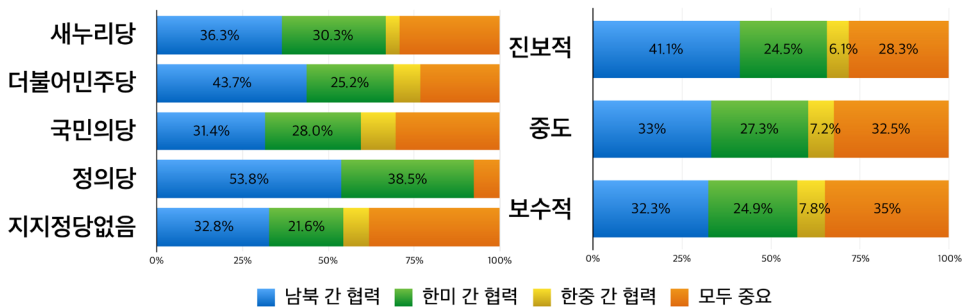
통일을 위해 '남북 간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것은 34.9%로 가장 높음

'남북 간 협력', '한중 간 협력'과 '한미 간 협력' 모두 중요: 32%, '한미 간 협력' 26.1%

'한중 간 협력'이 가장 중요는 7%

모두 중요(32%) VS '남북 간 협력', '한중 간 협력', '한미 간 협력'(all 68%)
선택의 문제로 보는 인식이 지배적

남북관계와 한·미·중 공조



지지 정당,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남북 간 협력'이 '한미 간 협력', '한중 간 협력' 보다 우선

'남북 간 협력'의 경우, 정의당>더불어민주당>새누리당>무당파>국민의당 지지자
진보>중도>보수

소결

- **굳건한 대미친밀감**
 - 친밀감 소폭 하락, but 높은 수준 호감도, 협력대상 의식 절대적
- **북한위협인식 증가**
 - 북한위협에 대한 보편적 공감대, 북한 핵 위협, 남북관계 경색 반영
- **20대: 가까워지는 미국, 멀어지는 북한, 위협적인 북한**
 - 대미친밀감 연령대에서 가장 높고 대북친밀감은 가장 낮음
- **대중이미지: 유동적, 복합적**
 - 친밀감 증가, 위협인식 감소, but 협력대상 의식 감소, 유사시 북한 도움 것
- **대일이미지: 여전히 부정적, 완화 조짐**
 - 북한, 중국보다 낮은 친밀도, 위협인식 감소, 협력대상 의식 증가, 적대의식 감소
 - 갈등과 긴장이 지속되는 것에 대한 부담, 부정적 인식이 강화되지 않음
- **주변국 통일환경 부정적**
 - 중국 도움 매우 필요하지만 남북 간, 한미 간 협력 더 중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변국 관계 인식 (요약)

최규빈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1. 주변국 친밀감

- 2016년 조사결과 한국인들은 주변국 가운데 미국을 가장 친밀하게 느끼고 있으며 북한을 두 번째로 가깝게 인식함.
 - ‘미국을 가장 가깝게 느낀다’는 응답자는 73.8%로 작년의 78.3%에서 4.5%p 하락.
 - 박근혜 정부 이후 미국에 대한 친밀감이 70% 이상을 상회하며 높은 수준을 보임.
 - ‘북한을 가장 가깝게 느낀다’는 응답자는 10.8%로 2015년 8.1%에 비해 2.7%p 증가.
 -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이어진 대북 제재국면, 김정은 정권의 공포정치 지속, 북핵문제에 대한 가중된 피로감에도 대북친밀도는 하락하기보다 증가한 점이 주목.
 - 중국에 대한 친밀도가 2015년 8.8%에서 9.7%로 소폭 증가함.
- 주변국 친밀감을 국가별 선호도로 볼 때 중국과 북한, 일본의 이미지에 변화가 있었음.
 - 2007~2012년까지 주변국 친밀감 선호도는 미국,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순이었음.
 - 2013년 처음으로 중국과 일본의 선호도가 바뀌었으며 2014년에는 중국이 두 번째, 북한이 세 번째, 일본에 네 번째가 됨.
 - 즉 2007~2012년 역대 네 번째 선호도였던 중국의 친밀감이 2014, 2015년 들어 두 번째로 친밀감이 높은 국가가 되었고 같은 기간 세 번째 선호도를 유지했던 일본의 선호도는 2013년 이래로 네 번째 국가가 되면서 그 친밀도가 하락함.
 - 2016년에는 다시 북한이 두 번째, 중국이 세 번째가 되므로 그 선호도가 역전됨.
 - 최근 중국에 대한 호감도 변화가 한국인의 다른 주변국 이미지에 영향을 주고 있음.

- 연령대별 미국과 북한에 대한 친밀감에서 20대 인식의 변화가 주목됨.
 - 연령대별로 미국과 북한에 대한 친밀감을 살펴보았을 때, 2007년 20대의 대미친밀감이 46.7%로 연령대에서 가장 낮은 친밀도를 보였지만 2016년 76.9%로 가장 높음. 이는 연령대에서 비교적 높은 대미친밀감을 보이는 60대보다도 높다는 점에서 주목됨.
 - 또 다른 특징은 2007년에서 2016년으로 갈수록 대미친밀도의 세대 편차는 점차 줄어들음. 이는 한국인들의 대미친밀감이 세대적 특징을 점차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의미함.
 - 북한에 대한 친밀도의 경우 2012년 이래 대부분의 세대에서 하락 추세를 보였으나 2016년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2015년에 비해 소폭 증가함.
 - 2016년에는 50대(14.8%) > 40대(11.3%) > 60대(11.1%) > 30대(8.9%) > 20대(7.3%) 순으로 북한에 대한 친밀감을 나타냄. 20대의 대북친밀감은 연령대에서 가장 낮음.

- 대미친밀감은 새누리당 지지자들에서, 대북친밀감은 정의당 지지자들에서 현저하게 나타남. ($\chi^2=32.380$, $p=0.039$)
 - 조사대상자 지지정당별 미국에 대한 친밀감을 보면, 새누리당(77.9%) > 무당파(73.1%) > 국민의당(67.8%) > 더민주당(65.5%) > 정의당(53.8%) 순서로 높게 나타남.
 - 북한에 대한 친밀감의 경우, 정의당(30.8%) > 더민주당(13.6%) > 새누리·국민의당(11.0%) > 무당파(9.7%) 순서의 응답률을 보였음.
 - 중국에 대한 친밀감의 경우, 국민의당(17.8%) > 정의당(15.4%) > 더민주당(13.6%) > 무당파(9.7%) > 새누리당(7.6%)로 나타남.

2. 평화위협국가

- 한국인은 북한을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인식함.
 -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것처럼 북한이 가장 위협적이라는 응답은 2016년 66.7%로 미국,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 중에 가장 높음.
 - 2015년 54.8%에서 11.9%p가 증가한 것이며 이는 지난 10년간 가장 높은 응답률임. 대북위협인식이 가장 낮았던 2008년(33.7%)과 비교하였을 때 대략 2배가 증가된 것.
 - 2차 핵실험을 했던 2009년, 3차 핵실험을 했던 2013년, 4차 핵실험을 했던 2016년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3년 12월 장성택 처형 등 고위층 숙청을 통한 공포정치 지속, 2015년 북한 DMZ 지뢰도발, 2016년 1월 4차 핵실험, 2016년 2월 북한 장거리미사일(광명성) 발사 등 북한의 지속되는 도발이 한국인의 대북위협인식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됨.
 - 미국이 한반도 평화에 위협적이라는 인식은 2007년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함. 2016년은 4.7%로 러시아(1.7%) 다음으로 위협적이지 않다고 인식함.
- 2016년 한국인의 중국과 일본에 대한 위협인식은 하락.
- 중국이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라고 응답한 한국인은 2011년 33.6%로 2007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위협인식을 보였으나 이후 2014년 17.6%까지 하락하다가 2015년 23.3%로 증가 후 2016년 16.8%로 다시 감소. 이는 북한 다음으로 높은 응답률임.
 - 대중인식이 최근 3년 동안 증감의 패턴이 반복되는 것은 중국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이 여전히 유동적이고 유보적임을 의미
 - 한중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2008.05) 관계 아래 양국 간의 관계는 상당히 밀접해짐. 급격히 확대된 경제적 상호의존 및 인적·문화적 교류와 함께 2014년 한중 FTA 타결, 2015년 한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2015년 9월의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송 70주년 기념 열병식 참석 등은 정치·경제적 분야에서의 양국 간의 관계 심화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인의 대중위협인식이 전체적으로 낮아지는 데 기여했을 가능성이 큼.
 - 하지만 2010년 이후 중국의 군사력 증강,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의 주변국과의 영토분쟁, 2013년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 2016년 4차 핵실험 이후의 대북 제재 강화에 대한 한중 간의 이견(異見) 등은 중국이 한반도 평화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제고하는 요인이 됨. 특별히 시진핑 정부 이후 부상하는 중국과 이를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과의 경쟁구도,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에 대한 중국의 공세적 대응은 중국이 동아시아 평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심과 두려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다시 말해 군사안보와 경제사회문화 축에서 다층적인 이미지가 한국인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2010년 응답률이 10.4%로 낮은 편이었지만 이후 대일위협인식은 2014년 24.6%까지 증가하여 북한 다음이 됨. 그 이후 2년간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고 2016년 10%까지 떨어짐.

- 아베 정권 이후의 독도, 교과서, 위안부 문제 등 한·일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여러 이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대일위협인식은 2014년 이후 2년 동안 감소 추세를 보임. 2016년 ‘일본이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라고 응답한 비율은 10%로 이는 지난 10년간 낮은 위협인식임.
 - 아베 내각의 역사인식은 과거사 문제와 영토문제에 있어 한국과 첨예한 갈등 요인이 되었고 특별히 2기 아베 내각이 시작된 2013년 이후 지속되었던 헌법 개정 노력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 인정 및 보통국가화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과의 마찰을 가져 왔던 요인이 됨. 특별히 박근혜 정부 들어 위안부 문제, 독도 영유권 주장, 역사 왜곡 등으로 한일관계는 상당히 악화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대일위협인식이 최근 2년 동안 감소한 점은 일본과의 역사인식 문제, 아베 내각의 우익성향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평화공존의 대상이며 북한 위협 특히 북핵문제에 있어 한국이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는 인식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또한 미일동맹 강화, 북핵위협 증가, 중국부상 견제 측면에서 일본을 한반도 평화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국가로 보지 않는 인식 또한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60대와 더불어 20대는 북한을 매우 위협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 60대, 20대, 30대, 50대, 40대 순으로 북한을 위협국가로 인식
 - 대북 위협인식이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음에도 2008년 수렴화 이후 확장되는 경향을 보였다가 최근 2년간 다시 수렴되는 현상. 이는 연령대에 관계없이 북한이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라는 공통된 인식이 존재함을 보여줌.
 - 비슷한 현상이 대중국위협인식에도 나타남. 한국인은 북한에 비해 중국을 훨씬 덜 위협적으로 느끼고 있으나 최근 2년간 연령대에 관계없이 응답률의 수렴현상이 나타남.
 - 대북위협인식은 새누리당 지지자들에서, 대중, 대일위협인식은 국민의당 지지자들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chi^2 = 32.961$, $p = 0.034$)
 - 조사대상자 지지정당별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을 보면, 새누리당(69.7%) > 정의당(69.2%) > 무당파(67%) > 더민주당(58.7%) > 국민의당(51.7%) 순서로 높게 나타남.
 - 중국 위협인식의 경우, 국민의당(21.2%) > 더민주당(19.4%) > 무당파(17.2%) > 새누리당(15.5%) > 정의당(15.4%) 순서의 응답률 보였음.

- 일본 위협인식의 경우, 국민의당(16.9%) > 더민주당(16%) > 새누리당(9.5%) > 무당파(8.8%) > 정의당(7.7%)으로 나타남.

3. 월드컵 경기응원

- ‘북한팀을 응원하겠다’는 응답률이 지속적으로 하락
 - ‘북한팀을 응원하겠다’는 응답률이 2016년 46.9%로 처음으로 50% 이하로 떨어졌으며 조사가 시작된 2007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

4. 주변국 국가이미지

- 협력대상 이미지가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 적대대상 이미지가 가장 높은 나라는 일본임.
 - 2016년 협력대상 이미지는 미국(81.2%), 중국(30%), 러시아(20.2%), 일본(16.4%) 순서로 높았으며 적대국가 이미지는 그 반대인 일본(8.8%), 러시아(3.6%), 중국(2.9%), 미국(0.3%) 순서임.
- 한국인의 10명 중 8명은 미국을 협력대상으로 인식.
 - 2016년 미국이 협력대상이라는 응답은 81.2%로 2015년 77.3%에 비해 3.9%p 높아짐. 미국에 대한 이미지는 매우 긍정적이며 특별히 변동을 보이지 않음.
 - 이는 미국이 전통적인 한국의 우방이자, 동맹국, 협력자라는 인식이 국민들에게 내재되어 있음을 보여줌.
 - 이러한 인식은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더욱 뚜렷해짐.
- 대미인식을 미국의 한반도 전쟁대응과 연결지어 볼 때,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 시 ‘한국을 도울 것이다’는 의견이 74.1%로 지배적임.
 - 2010년 이후 특별한 변동 없이 높은 응답률을 유지하고 있음.
 -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는 의견도 22.1%임.

- 우리 국민들은 일본을 협력대상이라기보다 경쟁과 경계대상으로 인식.
 - 협력대상이라는 판단은 16.4%에 그친 반면 경쟁대상은 41%, 경계대상이라는 판단은 33.9%에 이룸. 즉 협력대상이라기보다 경쟁과 경계대상의 이미지가 강함.
 - 일본은 미국, 중국, 러시아와 비교하였을 때 협력대상 이미지가 가장 낮고 적대대상 이미지가 가장 높음.
 - 일본과의 과거사 갈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주요하게 자리 잡고 있음. 다만 최근 2년 동안 협력대상 이미지 증가, 경계와 적대이미지 감소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함.
 - 박근혜 정부 초기의 한·일 간의 갈등과 긴장이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한일 협력이 더 필요하다는 인식이 투영되는 것일 수 있음. 2015년 11월 한·일 정상회담, 같은 해 12월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 2016년 3월, 9월의 정상회담 등은 경색된 양국 간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일 수 있음.
 - 다만 이러한 변화들이 국민들의 일본에 대한 감정과 이미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

- 일본은 한반도 전쟁 발발 시 자국의 이익에 기반한 결정을 할 것이라 판단.
 -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 일본은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한국을 도울 것이다’는 2016년 8.5%로 매우 낮으며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는 74.5%로 주변국 중 가장 높음.
 - 박근혜 정부 들어 ‘한국을 도울 것이다’는 10%이하로 떨어짐.

- 중국에 대한 한국인들의 이미지는 복합적임.
 - 한국인들이 중국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의 문제는 한반도 정세와 주변국 인식에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음.
 - 2016년의 결과로 볼 때, 우리 국민은 중국을 경쟁대상으로 보는 것이 39.4%로 가장 높으며, 협력대상이 30%, 경계대상 27.6%, 적대대상 2.9% 임.
 - 중국에 대한 이미지는 어느 한쪽으로 결정되어 있기보다 협력, 경쟁, 경계의 이미지가 복합적.
 - 대중이미지는 2012년 전까지는 정형화된 측면이 존재. 즉 경쟁과 경계의 대상이 우세였고 협력대상은 20%전후였음. 하지만 2012년 이후 협력대상 이미지가 지속적인

로 증가하고 경계와 적대 이미지는 하락함.

- 하지만 2016년 협력대상 이미지가 30%로 2015년 33.9%에 비해 3.9%p 하락하였고 경계대상 이미지가 24.2%에서 27.6%로 3.4%p 증가함. 대중친밀감이 증가하고, 대중위협인식이 감소하는 중에 나타난 현상이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
- 최근 1~2년 동안 협력대상 의식 감소(2014년 34%, 2015년 33.9%, 2016년 30%), 경계대상 의식 증가(2015년 24.2%, 2016년 27.6%)는 북한 핵문제에 있어 중국의 역할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 된 가능성. 실제 '남북관계 악화에 중국의 책임이 크다'는 응답률이 2015년 51.2%, 2016년 56.6%로 5.4%p 증가.

○ 중국은 유사시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라 판단.

- 한반도 전쟁 발발 시 '북한을 돕는다'(46%) 혹은 '자국이익에 따른다'(42.9%)가 높은 응답률을 보임. 즉 한국인은 중국이 유사시 한반도에 적극적으로 개입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지배적임.
- '북한을 도울 것이다'라는 응답이 2011년 62.8% 이후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는 응답이 2011년 31.0%에서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
- 단 '북한을 도울 것이다'라는 응답이 2011년 이후 3년간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최근 2년 동안 더 이상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 국민들은 중국이 북한의 후견인, 보호자로 무력충돌, 긴급사태와 같은 유사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을 가짐.

○ 러시아에 대해서는 경쟁과 경계의 이미지가 우세

- 우리 국민은 러시아에 대해 경쟁과 경계의 대상의 이미지가 다소 강한 것으로 나타남.
- 협력대상 이미지는 2010년 이후 20% 초반대가 지속됨..
- 러시아 국가에 대한 이미지 변화의 폭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나 향후 북러, 한러관계의 변화가 있을 경우 향후 국민들의 러시아에 대한 이미지는 달라 질 수 있음.

- 한반도 전쟁 발발 시에 러시아는 ‘자국의 이익을 따를 것’이라는 응답이 지배적임.
 - 이는 일본 다음으로 높은 결과. 또한 미국, 중국, 일본에 비해 ‘중립을 지킬 것이다’라는 응답률도 높음.
 - 유사시 적극적 개입이라기보다 신중한 판단을 할 것이라는 한국인의 인식이 반영된 것.

5. 주변국 통일희망

- 주변국은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함.
 - 주변국가 중 한반도의 통일을 가장 원하는 나라는 미국, 가장 원하지 않는 나라는 일본과 중국으로 나타남.
 - 주변국가 중 ‘통일을 원한다’의 2016년 응답률이 높은 순서는 미국(37.8%), 러시아(15.8%), 일본, 중국(14.9%) 임.
 - 주변국가 중 ‘통일을 원한다’의 2007-2016 평균 응답률이 높은 순서는 미국(37.9%), 러시아(16.4%), 중국(15.3%), 일본(14.5%) 임.
 - 주변국가 중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의 2016년 응답률이 높은 순서는 일본, 중국(85.1%), 러시아(84.2%), 미국(62.2%)이며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의 2007-2016 평균 응답률이 높은 순서는 일본(85.5%), 중국(84.7%), 러시아(83.6%), 미국(62.2%) 임.
 - 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원할 것이라는 응답은 2016년 37.8%로 2015년 48.1%에서 10.3p 감소하였고 이는 2011년 이후 증가하던 응답률의 처음 감소한 것.
 - 중국이 한반도 통일에 긍정적인 것이라는 인식이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6년 감소로 전환됨.
 - 미국과 중국의 통일희망에 대한 회의적 인식은 한반도 통일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한층 더 부정적으로 바뀌었음을 나타냄.

6. 통일협조 필요성

-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주변 4개국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
 - “통일을 위해서 다음 국가들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
 - 조사가 시작된 2008년 이후,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0% 초반대를,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0% 초반대를 유지.
 - 일본의 경우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009년의 경우 약 79.3%에 이르렀으나 그 후 지속적으로 감소, 2016년의 경우 58.4% 까지 이름.
 - 러시아의 경우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016년 60.3%로 여전히 우세하나 2014년 71.9%에 비하면 감소함.

-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통일을 위해 미국의 도움이 가장 절실하고 일본보다는 중국의 도움이 더 필수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 2016년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률이 높은 순서는 미국(91.7%), 중국(82.8%), 러시아(60.3%), 일본(58.4%) 임.
 - 2007~2016년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평균응답률은 미국(92%), 중국(84%), 러시아(69.7%), 일본(68.5%) 순서임.
 - 2016년 ‘도움이 필요없다’는 응답률이 높은 순서는 일본(41.6%), 러시아(39.7%), 중국(17.2%), 미국(8.3%) 임.
 - 2007~2016년 ‘도움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나라의 평균응답률은 일본(31.5%), 러시아(30.3%), 중국(16%), 미국(8%) 순서로 나타남.

7. 남북관계와 한·미·중 공조

- ‘남북 간 협력’, ‘한·중 간 협력’과 ‘한·미 간 협력’이 모두 복합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선택의 문제로 보는 시각이 다수임.
 - 한국사회는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공조’라는 이분법적인 인식으로 극심한 남남갈등을 경험했으며 이는 대북정책의 추동력을 약화시키며 사회적 갈등의 주요한 원인이 되어 왔음.
 - 최근 남북관계에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이 바로 ‘한·미 간 협력’과 ‘한·중 간 협력’ 문제임. 이 두 가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조화의 문제이지만 국민들의 정치의식에 따라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냐’라는 질문에 개별 선호도는 있을 수 있음.
 - 통일을 위해 ‘남북 간 협력’, ‘한·중간 협력’과 ‘한·미 간 협력’ ‘모두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5년 36.6%로 가장 높았으나 2016년에는 32%로 다소 낮아짐.
 - ‘남북 간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은 34.9%로 가장 높았고 ‘한·미 간 협력’이라는 응답은 26.1%로 나타남. ‘한·중 간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7%로 2015년과 마찬가지로 가장 낮게 나타남.
 - ‘남북한 협력’, ‘한·중 간 협력’과 ‘한·미 간 협력’이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에도 여전히 선택의 문제로 보는 시각이 한국사회에 지배적임을 보여줌.
 - ‘남북 간 협력’을 ‘한·미 간 협력’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한다는 것은 사안에 따라 잠재적 사회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음.
 - ‘한·중 간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은 7%로 미미하게 나타났지만 앞으로의 상황에 남북관계와 한미관계에 중요한 영향력을 줄 수 있음.

- 지지정당,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남북 간 협력’이 ‘한·미 간 협력’, ‘한·중 간 협력’보다 우선시 하는 공통된 인식이 발견됨.
 - ‘남북 간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은 정의당 > 더불어민주당 > 새누리당 > 무당파 > 국민의당 지지자 순으로 높게 나타나며($\chi^2=35.314, p=0.000$), 정치적 성향에 있어서는 진보 > 중도 > 보수 순으로 높게 나타남($\chi^2=19.012, p=0.088$).

2016 통일의식조사

전환기 통일 · 대북정책 방향은?

발표 5

이념, 당파성, 그리고 통일의식

정동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이념, 당파성, 그리고 통일 의식 (발표)

정동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1. 당파성 분포와 결정요인

○ <표 1> 당파성 분포 추이(2011~2016)

년도	무당파	새누리당	더민주당	국민의당	기타	합계
2016	546 (45.5)	317 (26.4)	206 (17.2)	118 (9.8)	13 (1.1)	1,200 (100.0)
2015	708 (59.0)	316 (26.3)	164 (13.7)	n/a	12 (1.0)	1,200 (100.0)
2014	597 (49.8)	324 (27.0)	242 (20.2)	n/a	37 (3.1)	1,200 (100.0)
2013	649 (54.1)	349 (29.1)	178 (14.8)	n/a	24 (2.0)	1,200 (100.0)
2012	623 (52.1)	301 (25.2)	240 (20.1)	n/a	32 (2.7)	1,196 (100.0)
2011	617 (51.4)	291 (24.2)	184 (15.3)	n/a	109 (9.1)	1,201 (100.0)

* 괄호 안은 %

○ <표 2> 당파성의 결정요인에 대한 다항로짓(multinomial logit) 분석

변 수	새누리당 vs. 무당파		더민주당 vs. 무당파		국민의당 vs. 무당파	
	Coeffi.	Odds Ratio	Coeffi.	Odds Ratio	Coeffi.	Odds Ratio
나이	0.06 ***	(1.06)	0.02 **	(1.02)	0.01	(1.01)
성별(0:남성, 1:여성)	0.14	(1.15)	0.13	(1.13)	-0.03	(0.97)
교육수준(1: 중졸이하, 2: 고졸, 3: 대제이상)	0.05	(1.05)	0.14	(1.15)	0.19	(1.21)
소득수준(1: 200만원 미만~4: 400만원 이상)	-0.03	(0.97)	0.06	(1.06)	0.13	(1.14)
거주지(1: 읍/면, 2: 중소도시, 3: 대도시)	-0.08	(0.92)	0.07	(1.07)	0.45 ***	(1.57)
이념성향(1: 매우 진보적~5: 매우 보수적)	0.16	(1.18)	-0.74 ***	(0.48)	-0.67 ***	(0.51)
영남지역 출신	0.26	(1.30)	-0.52 **	(0.60)	-0.43	(0.65)
호남지역 출신	-1.97 **	(0.14)	1.01 ***	(2.75)	0.97 ***	(2.64)
상수항	-3.82 ***	(0.02)	-0.44	(0.65)	-2.22 **	(0.11)

응답자 수: 1,184명

* 준거집단: 무당파

* Two-tailed test, *** p<.01, ** p<.05, * p<.1

○ <표 3> 위 모델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영향력 검정(Likelihood-Ratio 테스트)

변 수	chi2	P>chi2
나이	73.66	0.000
성별(0:남성, 1:여성)	1.29	0.732
교육수준(1: 중졸이하, 2: 고졸, 3: 대제이상)	1.26	0.740
소득수준(1: 200만원 미만~4: 400만원 이상)	1.89	0.596
거주지(1: 읍/면, 2: 중소도시, 3: 대도시)	9.02	0.029
이념성향(1: 매우 진보적~5: 매우 보수적)	75.45	0.000
영남지역 출신	13.67	0.003
호남지역 출신	77.85	0.000

* 귀무가설: "모든 집단간 모델에 대한 해당변수의 계수들이 0이다."

○ <표 4> 위 모델에 대한 정당지지자 집단간 차별화 검정(Wald 테스트)

비교 집단	chi2	P>chi2
새누리당 vs.무당파	125.14	0.000
더민주당 vs.무당파	67.96	0.000
국민의당 vs.무당파	42.951	0.000
새누리당 vs.더민주당	142.573	0.000
새누리당 vs.국민의당	116.456	0.000
더민주당 vs.국민의당	6.821	0.556

* 귀무가설: "해당 집단간 모델에 대한 모든 변수들의 계수가 0이다."

2. 통일 인식과 당파성

○ <표 5> 지지 정당에 따른 항목별 평균

지지 정당	통일의 필요성 (1: 전혀 필요없다~5: 매우 필요하다)	통일 시기 (1: 5년 이내~6: 불가능하다)	통일의 남한에 대한 이익 (1: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다~4: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통일의 자신에 대한 이익 (1: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다~4: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1: 전혀 없다~4: 많이 있다)	북핵위협 (1: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4: 매우 위협을 느낀다)
새누리당	3.62	3.85	2.55	2.06	2.85	3.09
더민주당	3.56	3.94	2.76	2.21	2.83	3.05
국민의당	3.53	3.84	2.58	2.20	2.73	2.91
무당파	3.29	4.16	2.46	2.01	2.77	3.07
전체 평균	3.45	4.01	2.55	2.08	2.80	3.06

○ <표 6> 통일인식 결정요인에 대한 순위로짓(ordered logit) 분석

변수	통일의 필요성 (1: 전혀 필요없다~5: 매우 필요하다)		통일 시기 (1: 5년 이내~6: 불가능하다)		통일의 남한에 대한 이익 (1: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다~4: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통일의 자신에 대한 이익 (1: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다~4: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1: 전혀 없다~4: 많이 있다)		북핵위협 (1: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4: 매우 위협을 느낀다)	
	Coeff.	Odds Ratio	Coeff.	Odds Ratio	Coeff.	Odds Ratio	Coeff.	Odds Ratio	Coeff.	Odds Ratio	Coeff.	Odds Ratio
나이	0.05 ***	(1.05)	-0.03 ***	(0.97)	0.01 **	(1.01)	0.01	(1.01)	-0.01	(0.99)	0.01 *	(1.01)
여성	-0.45 ***	(0.64)	0.41 ***	(1.50)	-0.32 ***	(0.72)	-0.22 *	(0.80)	-0.09	(0.91)	0.07	(1.07)
교육수준	0.31 ***	(1.37)	-0.25 **	(0.78)	0.22 **	(1.25)	0.23 **	(1.26)	0.13	(1.14)	0.24 **	(1.27)
소득수준	-0.13 **	(0.88)	-0.02	(0.98)	0.00	(1.00)	-0.02	(0.98)	-0.16 ***	(0.85)	-0.15 **	(0.86)
도시 거주	-0.04	(0.97)	-0.04	(0.96)	0.13	(1.14)	0.13	(1.14)	0.33 ***	(1.39)	0.35 ***	(1.42)
보수적 이념성향	-0.05	(0.95)	-0.01	(0.99)	0.02	(1.02)	0.01	(1.01)	-0.09	(0.91)	0.01	(1.01)
새누리당 지지	0.09	(1.10)	-0.06	(0.94)	0.14	(1.15)	0.14	(1.15)	0.32 **	(1.38)	-0.05	(0.95)
더민주당 지지	0.34 **	(1.40)	-0.20	(0.82)	0.65 ***	(1.91)	0.52 ***	(1.69)	0.14	(1.15)	-0.10	(0.90)
국민의당 지지	0.34 *	(1.40)	-0.31 *	(0.73)	0.25	(1.28)	0.41 **	(1.51)	-0.21	(0.81)	-0.50 **	(0.61)
응답자수	1184	1184	1184	1184	1184	1184	1184	1184	1184	1184	1184	1184

* Two-tailed test, *** p<.01, ** p<.05, * p<.1

○ <표 7>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통일인식 주요변수에 대한 당파적 영향력 추이

년도	종속 변수	독립 변수			
		이념적 성향	새누리당 지지	더민주당 지지	국민의당 지지
2016	통일의 필요성	-0.05	0.09	0.34 **	0.34 *
	통일시기	-0.01	-0.06	-0.20	-0.31 *
	통일의 이익(남한)	0.02	0.14	0.65 ***	0.25
	통일의 이익(개인)	0.01	0.14	0.52 ***	0.41 **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0.09	0.32 **	0.14	-0.21
	북핵 위협	0.01	-0.05	-0.10	-0.50 **
2015	통일의 필요성	-0.21 ***	-0.01	0.19	n/a
	통일시기	0.14 **	-0.13	-0.23	
	통일의 이익(남한)	-0.12	0.06	0.25	
	통일의 이익(개인)	-0.13 *	0.17	0.03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0.05	0.04	0.05	
	북핵 위협	0.05	0.25 *	0.34 *	
2014	통일의 필요성	-0.11	0.17	0.34 **	n/a
	통일시기	0.12 *	0.02	-0.08	
	통일의 이익(남한)	-0.02	0.02	0.20	
	통일의 이익(개인)	-0.08	0.06	-0.08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0.24 ***	0.14	-0.01	
	북핵 위협	0.08	0.21	0.00	
2013	통일의 필요성	-0.23 ***	-0.12	0.37 **	n/a
	통일시기	0.24 ***	0.12	-0.11	
	통일의 이익(남한)	-0.14 *	0.04	0.47 ***	
	통일의 이익(개인)	-0.22 ***	-0.02	0.23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0.05	-0.07	0.50 ***	
	북핵 위협	-0.01	0.24 *	0.40 **	
2012	통일의 필요성	-0.37 ***	0.02	0.35 **	n/a
	통일시기	0.17 **	-0.07	-0.40 ***	
	통일의 이익(남한)	-0.35 ***	-0.12	0.17	
	통일의 이익(개인)	-0.32 ***	-0.03	0.14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0.08	0.23	-0.03	
	북핵 위협	0.07	0.36 ***	-0.22	
2011	통일의 필요성	-0.08	-0.31 **	0.32 **	n/a
	통일시기	0.14	-0.15	-0.30 *	
	통일의 이익(남한)	0.02	-0.04	0.47 ***	
	통일의 이익(개인)	-0.13 *	-0.01	0.54 ***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0.21 ***	-0.06	0.06	
	북핵 위협	0.20 **	0.11	0.25	

3. 대북정책 인식과 당파성

○ <표 8> 지지 정당에 따른 항목별 평균

지지 정당	대북지원 (1: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4: 매우 도움이 된다)	사회문화교류 (1: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4: 매우 도움이 된다)	경제협력 (1: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4: 매우 도움이 된다)	남북간 정기회담 (1: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4: 매우 도움이 된다)	대북제재와 압박 (1: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4: 매우 도움이 된다)	개성공단 재가동 (1: 매우 반대~5: 매우 찬성)	금강산관광 재개 (1: 매우 반대~5: 매우 찬성)	한국의 핵무장 (1: 매우 반대~5: 매우 찬성)
세누리당	2.36	2.62	2.55	2.82	2.40	3.14	3.31	3.66
더민주당	2.58	2.78	2.75	2.94	2.29	3.51	3.55	3.49
국민의당	2.56	2.76	2.49	2.82	2.28	3.23	3.42	3.46
무당파	2.22	2.50	2.47	2.73	2.34	3.22	3.31	3.51
전체 평균	2.35	2.61	2.54	2.80	2.34	3.25	3.36	3.54

○ <표 9> 대북정책 인식 결정요인에 대한 순위로짓(ordered logit) 분석

변수	대북지원 (1: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4: 매우 도움이 된다)		사회문화교류 (1: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4: 매우 도움이 된다)		경제협력 (1: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4: 매우 도움이 된다)		남북간 정기회담 (1: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4: 매우 도움이 된다)		대북제재와 압박 (1: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4: 매우 도움이 된다)	
	Coeff.	Odds Ratio	Coeff.	Odds Ratio	Coeff.	Odds Ratio	Coeff.	Odds Ratio	Coeff.	Odds Ratio
나이	0.02 ***	(1.02)	0.01 **	(1.01)	0.01 **	(1.01)	0.02 ***	(1.02)	0.00	(1.00)
여성	-0.11	(0.89)	-0.05	(0.95)	0.00	(1.00)	-0.22 *	(0.81)	0.14	(1.15)
교육수준	-0.09	(0.91)	0.02	(1.02)	-0.02	(0.98)	0.04	(1.04)	0.03	(1.03)
소득수준	0.13 **	(1.14)	0.10 *	(1.10)	0.12 **	(1.13)	0.01	(1.01)	-0.04	(0.96)
도시 거주	0.04	(1.04)	-0.01	(0.99)	0.13	(1.14)	0.00	(1.00)	0.01	(1.01)
보수적 이념성향	-0.19 ***	(0.83)	-0.04	(0.96)	-0.14 **	(0.87)	-0.14 **	(0.87)	0.06	(1.06)
새누리당 지지	0.20	(1.22)	0.19	(1.20)	0.08	(1.08)	0.14	(1.15)	0.11	(1.12)
더민주당 지지	0.72 ***	(2.05)	0.55 ***	(1.74)	0.55 ***	(1.74)	0.41 **	(1.50)	-0.11	(0.90)
국민의당 지지	0.69 ***	(2.00)	0.50 ***	(1.65)	-0.04	(0.96)	0.18	(1.19)	-0.07	(0.93)
응답자수	1184		1184		1184		1184		1184	

* Two-tailed test, *** p<.01, ** p<.05, * p<.1

○ <표 9, 계속> 대북정책 인식 결정요인에 대한 순위로짓(ordered logit) 분석

변수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관광 재개		한국의 핵무장	
	(1: 매우 반대~5: 매우 찬성)	(1: 매우 반대~5: 매우 찬성)	(1: 매우 반대~5: 매우 찬성)	(1: 매우 반대~5: 매우 찬성)	(1: 매우 반대~5: 매우 찬성)	(1: 매우 반대~5: 매우 찬성)
	Coeffi.	Odds Ratio	Coeffi.	Odds Ratio	Coeffi.	Odds Ratio
나이	0.01 **	(1.01)	0.01 **	(1.01)	0.01 **	(1.01)
여성	0.01	(1.01)	0.07	(1.08)	0.03	(1.03)
교육수준	0.08	(1.09)	0.04	(1.04)	0.10	(1.10)
소득수준	0.06	(1.06)	0.08	(1.08)	-0.11 *	(0.90)
도시 거주	0.08	(1.08)	0.08	(1.08)	-0.13	(0.88)
보수적 이념성향	-0.09	(0.92)	-0.05	(0.95)	0.02	(1.02)
새누리당 지지	-0.18	(0.84)	-0.09	(0.92)	0.11	(1.12)
더민주당 지지	0.39***	(1.48)	0.32 **	(1.38)	-0.06	(0.95)
국민의당 지지	-0.06	(0.94)	0.14	(1.15)	-0.06	(0.94)
응답자수		1184		1184		1184

* Two-tailed test, *** p<.01, ** p<.05, * p<.1

○ <표 10>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대북정책 인식 주요변수에 대한 당파적 영향력 추이

년도	종속 변수	독립 변수			
		이념적 성향	새누리당 지지	더민주당 지지	국민의당 지지
2016	대북지원 효용성	-0.19 ***	0.20	0.72 ***	0.69 ***
	사회문화교류 효용성	-0.04	0.19	0.55 ***	0.50 ***
	경제협력 효용성	-0.14 **	0.08	0.55 ***	-0.04
	남북회담 효용성	-0.14 *	0.14	0.41 *	0.18
	대북제재 효용성	0.06	0.11	-0.11	-0.07
	개성공단 재가동 찬성	-0.09	-0.18	0.39 ***	-0.06
	금강산관광 재개 찬성	-0.05	-0.09	0.32 **	0.14
한국의 핵무장 찬성	0.02	0.11	-0.06	-0.06	
2015	대북지원 효용성	-0.23 ***	0.19	0.47 ***	n/a
	사회문화교류 효용성	-0.18 **	0.09	0.40 **	
	경제협력 효용성	-0.36 ***	-0.09	0.31 *	
	남북회담 효용성	-0.20 ***	-0.03	0.32 *	
	개성공단 재가동 찬성	-0.18 **	0.11	0.41 **	
	금강산관광 재개 찬성	-0.28 ***	0.22	0.31 *	
	한국의 핵무장 찬성	-0.04	0.19	-0.22	
2014	대북지원 효용성	0.08	-0.04	0.37 *	n/a
	사회문화교류 효용성	-0.09	-0.22	0.21	
	경제협력 효용성	-0.02	-0.23 *	0.04	
	남북회담 효용성	0.06	-0.28 **	0.20	
	개성공단 재가동 찬성	-0.19 ***	-0.10	0.00	
	금강산관광 재개 찬성	-0.21 ***	-0.03	0.18	
	한국의 핵무장 찬성	-0.12	0.29 **	0.02	
2013	대북지원 효용성	-0.22 ***	-0.10	1.11 ***	n/a
	사회문화교류 효용성	-0.16 **	-0.18	0.35 **	
	경제협력 효용성	-0.26 ***	0.05	0.58 ***	
	남북회담 효용성	-0.22 ***	0.02	0.33 **	
	개성공단 재가동 찬성	-0.32 ***	0.27 **	0.13	
	금강산관광 재개 찬성	-0.14 **	-0.04	0.61 ***	
	한국의 핵무장 찬성	0.10	0.11	0.37 **	
2012	대북지원 효용성	-0.26 ***	-0.07	0.68 ***	n/a
	사회문화교류 효용성	-0.33 ***	0.04	0.52 ***	
	경제협력 효용성	-0.36 ***	0.06	0.63 ***	
	남북회담 효용성	-0.22 ***	-0.15	0.68 ***	
	개성공단 재가동 찬성	-0.31 ***	-0.18	0.65 ***	
	금강산관광 재개 찬성	-0.32 ***	0.02	0.48 ***	
	한국의 핵무장 찬성	n/a	n/a	n/a	
2011	대북지원 효용성	-0.21 ***	-0.22	0.52 ***	n/a
	사회문화교류 효용성	-0.22 ***	-0.16	0.01	
	경제협력 효용성	-0.24 ***	-0.13	0.20	
	남북회담 효용성	-0.20 ***	-0.10	0.31 *	
	개성공단 재가동 찬성	-0.27 ***	-0.25 *	0.66 ***	
	금강산관광 재개 찬성	-0.33 ***	-0.09	0.66 ***	
	한국의 핵무장 찬성	n/a	n/a	n/a	

4. 정부평가와 당파성

○ <표 11> 지지 정당에 따른 항목별 평균

지지 정당	정부의 대북정책 (1: 매우 불만족~4: 매우 만족)	현재의 경제상황 (1: 매우 불만족~4: 매우 만족)	대통령 직무평가 (1: 매우 잘 못하고 있다~4: 매우 잘하고 있다)	북한의 남북관계 악화 책임 (1: 거의 없다~5: 아주 크다)	한국의 남북관계 악화 책임 (1: 거의 없다~5: 아주 크다)	미국의 남북관계 악화 책임 (1: 거의 없다~5: 아주 크다)	중국의 남북관계 악화 책임 (1: 거의 없다~5: 아주 크다)	일본의 남북관계 악화 책임 (1: 거의 없다~5: 아주 크다)
새누리당	2.65	2.09	2.87	4.29	3.00	3.17	3.55	3.16
더민주당	2.28	1.92	1.92	4.41	3.41	3.36	3.58	3.32
국민의당	2.42	2.06	2.15	4.24	3.18	3.31	3.64	3.12
무당파	2.35	1.95	2.14	4.40	3.34	3.34	3.62	3.20
전체 평균	2.42	1.99	2.30	4.35	3.25	3.29	3.59	3.20

○ <표 12> 정부평가 결정요인에 대한 순위로짓(ordered logit) 분석

변 수	정부의 대북정책		현재의 경제상황		대통령 직무평가		북한의 남북관계 악화 책임		한국의 남북관계 악화 책임		미국의 남북관계 악화 책임		중국의 남북관계 악화 책임		일본의 남북관계 악화 책임	
	Coeff.	Ratio	Coeff.	Ratio	Coeff.	Ratio	Coeff.	Ratio	Coeff.	Ratio	Coeff.	Ratio	Coeff.	Ratio	Coeff.	Ratio
나이	0.01	(1.01)	0.00	(1.00)	0.01***	(1.01)	0.01*	(1.01)	0.01	(1.01)	0.01**	(1.01)	0.00	(1.00)	0.01**	(1.01)
여성	-0.04	(0.96)	0.13	(1.14)	0.24**	(1.28)	-0.11	(0.90)	0.14	(1.15)	0.21*	(1.24)	-0.07	(0.93)	0.22*	(1.25)
교육수준	-0.10	(0.91)	0.10	(1.10)	-0.13	(0.87)	0.08	(1.08)	0.06	(1.06)	0.11	(1.12)	0.13	(1.14)	0.16	(1.17)
소득수준	-0.03	(0.97)	-0.03	(0.97)	-0.04	(0.96)	0.04	(1.04)	0.16***	(1.18)	0.09	(1.10)	0.03	(1.03)	-0.03	(0.97)
도시거주	0.03	(1.03)	0.10	(1.10)	-0.03	(0.97)	0.09	(1.09)	-0.36***	(0.70)	-0.19**	(0.83)	-0.04	(0.96)	-0.02	(0.98)
보수이념	-0.01	(0.99)	-0.05	(0.95)	0.18**	(1.20)	0.00	(1.00)	0.04	(1.04)	-0.02	(0.98)	0.10	(1.11)	-0.07	(0.93)
새누리당	0.74***	(2.09)	0.43***	(1.54)	1.99***	(7.32)	-0.33**	(0.72)	-0.67***	(0.51)	-0.50***	(0.61)	-0.15	(0.86)	-0.20	(0.82)
더민주당	-0.18	(0.84)	-0.12	(0.88)	-0.56***	(0.57)	0.01	(1.01)	0.10	(1.11)	0.03	(1.03)	-0.05	(0.95)	0.26	(1.30)
국민의당	0.16	(1.18)	0.34*	(1.41)	0.12	(1.13)	-0.47**	(0.62)	-0.30	(0.74)	-0.10	(0.91)	0.11	(1.12)	-0.27	(0.76)
응답자수	1184	1184	1184	1184	1184	1184	1184	1184	1184	1184	1184	1184	1184	1184	1184	1184

* Two-tailed test, *** p<.01, ** p<.05, * p<.1

○ 〈표 13〉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정부평가 주요변수에 대한 당파적 영향력 추이

년도	종속 변수	독립 변수			
		이념적 성향	새누리당 지지	더민주당 지지	국민의당 지지
2016	정부의 대북정책 만족	-0.01	0.74 ***	-0.18	0.16
	현재의 경제상황 만족	-0.05	0.43 ***	-0.12	0.34 *
	대통령 직무평가 만족	0.18 ***	1.99 ***	-0.56 ***	0.12
	남북관계 악화책임(북한)	0.00	-0.33 **	0.01	-0.47 **
	남북관계 악화책임(한국)	0.04	-0.67 ***	0.10	-0.30
	남북관계 악화책임(미국)	-0.02	-0.50 ***	0.03	-0.10
	남북관계 악화책임(중국)	0.10	-0.15	-0.05	0.11
	남북관계 악화책임(일본)	-0.07	-0.20	0.26	-0.27
2015	정부의 대북정책 만족	0.10	0.55 ***	-0.24	
	현재의 경제상황 만족	0.04	0.17	-0.01	
	대통령 직무평가 만족	0.14 *	1.44 ***	-0.91 ***	
	남북관계 악화책임(북한)	0.04	0.05	0.13	
	남북관계 악화책임(한국)	-0.14 *	-0.32 **	0.25	
	남북관계 악화책임(미국)	-0.22 ***	-0.03	0.18	
	남북관계 악화책임(중국)	-0.16 **	0.19	0.08	
	남북관계 악화책임(일본)	-0.22 ***	0.07	0.08	
2014	정부의 대북정책 만족	0.33 ***	0.73 ***	-0.45 ***	
	현재의 경제상황 만족	0.06	0.41 ***	-0.32 **	
	대통령 직무평가 만족	0.26 ***	2.11 ***	-1.00 ***	
	남북관계 악화책임(북한)	0.09	0.03	-0.11	
	남북관계 악화책임(한국)	-0.11	-0.35 **	0.40 ***	
	남북관계 악화책임(미국)	-0.05	-0.17	0.31 **	
	남북관계 악화책임(중국)	0.05	0.11	0.11	
	남북관계 악화책임(일본)	0.10	-0.06	0.22	
2013	정부의 대북정책 만족	0.14 *	0.96 ***	-0.39 **	
	현재의 경제상황 만족	-0.01	0.48 ***	-0.37 **	
	대통령 직무평가 만족	0.18 **	1.92 ***	-0.86 ***	
	남북관계 악화책임(북한)	0.15 *	0.48 ***	-0.15	
	남북관계 악화책임(한국)	-0.17 **	-0.62 ***	-0.10	
	남북관계 악화책임(미국)	-0.10	-0.53 ***	0.36 *	
	남북관계 악화책임(중국)	-0.02	-0.16	0.07	
	남북관계 악화책임(일본)	-0.09	-0.20	0.02	
2012	정부의 대북정책 만족	0.38 ***	0.64 ***	-0.41 ***	
	현재의 경제상황 만족	0.17 **	0.36 **	0.28 *	
	대통령 직무평가 만족	0.29 ***	1.09 ***	-0.55 ***	
	남북관계 악화책임(북한)	0.13 *	0.37 **	-0.22	
	남북관계 악화책임(한국)	-0.24 ***	-0.14	0.31 **	
	남북관계 악화책임(미국)	-0.10	-0.08	0.23	
	남북관계 악화책임(중국)	0.00	0.21	-0.04	
	남북관계 악화책임(일본)	-0.03	0.00	-0.10	
2011	정부의 대북정책 만족	-0.02	0.66 ***	-0.39 **	
	현재의 경제상황 만족	-0.10	0.62 ***	-0.18	
	대통령 직무평가 만족	0.01	1.52 ***	-0.57 ***	
	남북관계 악화책임(북한)	0.28 ***	-0.17	-0.16	
	남북관계 악화책임(한국)	-0.14 *	-0.31 **	-0.01	
	남북관계 악화책임(미국)	-0.14 *	-0.18	0.13	
	남북관계 악화책임(중국)	0.09	0.13	0.09	
	남북관계 악화책임(일본)	-0.08	-0.15	-0.22	

이념, 당파성, 그리고 통일의식 (요약)

정동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1. 당파성 분포와 결정요인

- 올해 당파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응답자들의 비율(54.5%)은 해당 문항이 조사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양대 주류정당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의 지지층 비율이 예년과 큰 변동이 없다는 점을 볼 때 기존의 무당파중 일부가 국민의당 지지세력을 형성하였다 볼 수도 있으나, “생태학적 오류(ecological fallacy)”에 빠지지 않기 위해 보다 신중한 분석을 요함
 - 각 정당 간 비율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새누리당 지지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26.4%), 더민주당(17.2%)과 국민의당(9.8%)이 그 뒤를 따랐음
- 응답자들의 당파성을 결정짓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다른 인구통계적 요인들보다도 이념적 성향과 영·호남의 출신지역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독립변수의 영향력에 대한 LR(Likelihood-Ratio) 테스트 결과가 보여주듯, 성별,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은 응답자들의 정당지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정당지지에 대해 가장 일관된 영향력을 보여준 변수는 호남지역 변수로, 출신지역이 응답자들의 당파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임을 보여줌
 - 특히 더민주당 지지에 대하여 이념과 출신지역이 갖는 영향력은 다른 정당 지지에 비해 강한 것으로 나타남
 - 국민의당의 경우 더민주당 지지집단과 유사한 성격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나이, 영남출신, 도시거주 등의 변수에서 차이를 보임

- 정당지지자 집단간 차별화를 검정한 Wald 테스트 결과, 해당 모델에 사용된 변수들로
는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지지집단 간의 차이를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됨
 - 이는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지지집단의 성격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으로, 올해
치러진 총선에서 더민주당 현역의원들을 대거 영입한 국민의당이 호남지역에 배당된
28석 중 23석을 차지한 점을 고려할 때 납득할만한 결과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집합적 차원에서 무당파의 비중이 감소했다는 위의 결과와 종합할 때, 기존의
무당파 중 민주당 지지자들과 이념·출신지역을 공유하거나, 또는 기존의 민주당 지
지자 중 보다 젊고 도시에 거주하는 중도적 집단이 국민의당 지지층으로 옮겨갔다는
유추가 가능함
 - 이러한 국민의당 지지세력의 특징을 고려할 때, 이들은 기본적으로 더민주당과 유사
한, 하지만 보다 중도적인 통일인식과 평가를 할 것으로 예측됨

2. 통일 인식과 당파성

- 전반적으로, 통일과 북한에 대한 여러 인식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 올해에는 당파적 차
이가 예년에 비해 크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됨
 - 이전 시기(2011~2015년)의 경우, 통일에 대한 인식 차이는 당파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 이념적 성향의 차이에서 나온 결과였음
 - 하지만 2016년의 경우, 분석된 전 항목에 걸쳐 이념 변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영향력을 가지지 못한 반면, 당파 변수는 최소 1개 이상의 정당에서 유의미한 당
파적 영향력을 보임
 - 따라서 사람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이 예년보다 올해 더 당파적으로 변했다고 볼 수
있음
 - 이는 올 4월에 열린 20대 총선의 영향으로 사람들이 동일한 이슈에 대해서도 보다
당파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19대 총
선과 18대 대선이 동시에 열렸던 2012년의 경우에도 당파성보다는 이념의 영향력이
더 작용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꼭 그렇다고만은 할 수 없음

- 적어도 통일 이슈의 인식에 대하여 시민수준에서 당파적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 이러한 통일인식의 당파적 양극화가 올해만의 일시적 현상일지 앞으로도 지속될 양극화의 시작일지는 향후 조사를 통해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임
- 올해의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지지자들은 무당파에 비하여 통일에 대한 더 큰 필요성을 느낀 반면,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무당층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오즈비(Odds ratio)를 살펴보면,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더 느낄 확률(odds)이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지지자의 경우 무당파에 비하여 각각 40%씩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대체적으로 예년의 패턴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음
- ‘통일의 시기’를 예상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을 제외하고 두 주류정당 사이에서는 지지집단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 이 역시 기존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라 할 수 있음
- 통일이 남한 사회와 개인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 지에 대한 질문에는, 두 항목 모두에서 더민주당 지지층에서 통일을 더욱 이로운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임
- 두 질문에 대하여 더민주당 지지자들이 통일에 대한 이익을 더 많이 느낄 확률은 무당파에 비해 각각 91%와 69%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경향은 양당 모두에서 뚜렷한 당파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이전 시기와 비교할 때 올해에 두드러진 현상으로 파악할 수 있음
- 북한의 무력도발이 가능성 있다 생각하는 정도에 있어서는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당파적 편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음
-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보다 크게 느낄 확률은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무당층에 비하여 38% 높은 것으로 조사됨
- 하지만 북핵위협 경우에는 새누리당과 더민주당 사이에서 당파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국민의당 지지층들만 조금 더 적은 위협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3. 대북정책 인식과 당파성

- 전체적으로, 대북정책의 효용성과 찬반에 관한 항목에 대해서는 지난 2011~2015년과 마찬가지로 당파적 차이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특히 더민주당 지지층에서 당파적 편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 더민주당 지지자들은 무당파에 비하여 대북지원과 사회문화교류, 경제협력, 정기회담 등이 더 통일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을 보임
 -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찬성 역시, 더민주당 지지층에서 유의미하게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됨
 - 다만 2016년의 경우, 통일인식과 마찬가지로 이념변수의 영향력이 예년에 비해 약화되었다는 점에서 2016년에는 자신의 이념적 신념에 따라 대북정책을 바라보기 보다는 자신이 속한 정당의 당파성에 입각하여 평가하는 측면이 강화되었음을 보여줌
 - 즉, 통일 이슈에 이어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시민들 사이의 양극화가 어느 정도 심화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구체적으로 먼저 일련의 대북정책이 통일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를 묻는 질문들에 대하여, 민주당 지지층일수록 대북지원, 사회문화교류, 경제협력과 남북간의 정기적 회담이 통일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을 보임
 - 이러한 경향은 새누리당 지지층과 비교할 때 통계적 유의미도뿐 아니라 영향력의 크기(오즈비)에 있어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임
 - 국민의당 지지층 역시 대북지원과 사회문화교류에 있어 더민주당 지지층과 비슷한 정도의 효용성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은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와 관련하여 올해 처음으로조사된 대북제재의 효용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뚜렷한 당파간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음
 - 각 당파에 따른 평균치를 보면 새누리당에서 대북제재가 통일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조금 더 많았으나(새누리당: 2.40, 더민주당: 2.29, 국민의당: 2.28),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는 아니었음
 -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당파와 상관없이 대북제재와 압박이 통일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됨

- 대북정책 찬반에 관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뚜렷한 당파간 차이를 보임
 -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운영 재개에 대해서는 역시 민주당 지지층이 무당파에 비하여 보다 더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 한국도 핵무기를 가져야한다는 문항에서는 뚜렷한 당파적 편향을 보이지 않은 가운데, 1(매우 반대)부터 5(매우 찬성) 사이에서 전체 응답자 평균 3.54를 기록, 핵무장에 대해 당파와 상관없이 찬성하는 쪽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됨

4. 정부평가와 당파성

- 종합적으로, 정부평가에 대한 부문에서는 새누리당 지지층의 당파적 편향이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에 비하여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됨
 - 이념성향이 정부평가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유의미한 항목의 개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점을 볼 때 이념을 초월한 당파적 경향이 정부평가 영역에서도 강화되었음을 보여줌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새누리당 지지층이 무당층에 비해 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남
 -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정부의 대북정책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확률이 무당파에 비해 2.09배 높게 나타남
 - 반면, 다른 정당 지지집단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일반적인 정부평가 항목(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만족도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무평가)에 대해서도 새누리당 지지층은 유의미한 수준에서 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조사됨
 - 특히 새누리당 지지층이 대통령의 직무평가를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확률이 무당파에 비해 무려 7.32배나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어, 그 영향력의 크기 또한 매우 강한 것으로 드러남

- 기타, 남북관계의 악화를 어느 국가의 책임으로 느끼는지를 묻는 문항들에 있어서도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당파적 편향이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됨
 - 특히 한국과 미국에 남북관계 악화에 책임이 있다고 느끼는 비중은, 새누리당 지지층일수록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올해의 조사에서 새누리당 지지층은 북한에 대해서도 무당파에 비해 더 낮은 수준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예년의 패턴과 상이한 결과임
 - 물론 해당 문항에 대한 응답자 전체의 평균이 1(책임이 거의 없다)부터 5(매우 크다) 중 4.35에 달하고,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평균 또한 4.29라는 점에서 이들이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을 북한에 돌리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음

5. 소결

- 2016년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볼 때, 이념성향이 가지는 영향력은 예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감소한 반면, 당파적 변수의 영향력은 증가하였음
 - 특히 통일에 대한 인식에서 6개 중 평균 3개 이상의 문항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던 예년과 달리, 2016년에는 어떠한 문항에서도 이념변수의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음
 - 통일과 대북정책의 인식에서는 더민주당 지지층이 두드러진 당파적 성향을 보인 반면, 정부의 대북정책과 직무평가에 있어서는 새누리당이 높은 수준의 당파적 차이를 보임
 - 즉, 시민들은 이념적 신념에 의해 통일과 대북정책을 인식·평가하기 보다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 인식·평가하는 경향을 보임
- 응답자들의 정부평가 역시 통일과 대북정책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근거하기 보다는, 당파적 성향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됨
 - 특히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통일과 대북정책에 대하여 무당파에 비해 크게 다른 인식을 갖지 않았지만, 대북정책과 대통령의 직무평가에 있어서는 보다 긍정적인 당파적 편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됨
 - 반면 더민주당의 경우, 전반적인 통일과 대북정책의 인식에 있어 당파적으로 편향된

- 태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에 있어서는 당파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이는 응답자들이 자신들만의 차별화된 인식에 기초하여 정부의 대북정책과 성과를 평가하기 보다는, 당파적 소속감에 따라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당파적 양극화의 심화는 민주주의의 규범적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음
- 이념적 신념과 정책별 입장보다는 지지정당에 따라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고 평가함으로써, 관련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과 평가를 내리기 어려워짐
 - 정당 역시 합리성과 신중성에 근거한 통일·대북정책들을 내놓기 보다는 지지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당파적 입장으로 정책을 수립할 것
- 마지막으로, 2016년 총선에서 제3당으로 떠오른 국민의당은 통일인식,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및 정부 평가 등 전반적인 항목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의 중간 혹은 더민주당에 조금 더 가까운 정도의 인식과 평가 수준을 보임
- 이는 무당파 비율의 감소와 국민의당과 더민주당의 지지집단이 서로 유사한 인구·정치적 성향을 가졌다는 앞선 분석을 고려할 때 예측가능한 결과라 할 수 있음
 - 즉, 기존의 부동층과 더불어 더민주당 지지세력 중 보다 중도적 성향을 지닌 시민들이 국민의당 지지층으로 옮겨갔고, 이러한 지지집단의 특성이 이와 같은 통일인식과 평가의 결과로 이어진 것이라 볼 수 있음
 - 이러한 결과는 이념과 출신지역에 따라 통일에 대한 인식과 정부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나뉘었던 기존의 양상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앞으로 국민의당 지지세력이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일 지가 향후 통일인식과 정부평가의 전체적인 그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됨

2016 통일의식조사

전환기 통일 · 대북정책 방향은?

발표 6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인식 : 북한, 한국 그리고 강대국

김병조 (국방대)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인식 : 북한, 한국 그리고 강대국

김병조 (국방대)

1. 머리말

9월 9일은 북한정권 수립일이다. 그런데 2016년 9월 9일 오전 9시 30분(북한시간 9시)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이번 핵실험이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하여 발사하는 핵무기 병기화 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고 발표한다. 이에 아세안(ASEAN) 관련 정상회의 참석으로 라오스를 방문 중이던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방문일정을 단축하고 귀국길에 올랐으며, 한국정부는 북한이 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 핵실험을 감행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도발이라면서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이 정권수립일에 핵실험을 단행한 것은, 대남정책에서 남북관계개선이나 평화통일보다 남북대립과 전쟁준비를 우선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이 외교적 고립과 경제파탄으로 이어져 자멸의 길도 들어설 것이라며 경고하고, 박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2016년 가을 남북관계는 6.25 전쟁 이후 최악의 상태라고 인식될 정도로 악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남북관계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시기 이후 개선되기보다 악화되는 과정을 겪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지속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통해 대량파괴무기를 끊임없이 개발하고,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GOP 목함지뢰 매설 등 크고 작은 군사 도발을 자행할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이버 테러를 꾸준히 시도하는 등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사건을 계속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은 유엔과 협력하여 '대북제재'를 시도하고 북한의 도발수준이 높아짐이 따라 점차 그 강도를 더하게

된다. 그 결과 2008년 이후 남북관계 개선을 상징하는 정부 당국 간 회담, 남북경제교류, 대북인도적 지원, 이산가족상봉 등은 단절 되었거나 크게 위축된 상태이다.

그렇다면 남북관계 악화에 대해 누가 책임이 있는가? 남북관계 악화에 대해 한국과 미국은 군사도발을 자행하는 북한에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북한은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무력시위를 하는 근본 원인은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은 중국의 대북제재에 대한 미온적인 협조 때문에 북한이 계속적인 도발을 자행한다고 해석하고 중국도 남북관계 악화에 일련의 책임이 존재함을 언급한다. 한편 중국은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해 불편함을 표현하면서도 한국과 미국이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대응해서 사태를 악화시킨다고 주장한다.

이상과 같이 남북관계 악화 책임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남북관계 악화책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식에 대한 찬반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인 한국정부의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북한 및 미국, 중국의 반응이며, 국내에서 이해당사자 간의 충돌과 반목이다. 사드배치에 대한 찬반논란은 국가를 위기에 몰아넣는 국론분열이라고까지 언급되고도 한다.

그러나 남북관계 악화 책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다양한 책임론에 상응하여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찬반논의가 활발하게 때로는 지나칠 정도로 격심하게 존재하는 것은 맞지만, 한국 국민이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한 논의는 찾아보기 힘들다. 대부분 특정 정치인이나 소수 지식인들의 표명한 의견이 바로 국민의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정부가 주변국 관계를 포함하여 적절한 대북정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식에 대한 정확한 분석에 기초하여 정책을 수립 집행해야 한다. 국민의식에 충실한 정책이 수립되면 정책집행이 수월할 것이다. 그리고 만일 국민의식이 왜곡되었거나 잘못된 사실에 기초해서 형성되어 있는 경우, 정부는 특정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해당 정책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분위기를 사전에 마련해서 국민의식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이 글은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에서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통일의식조사』 중에서 남북관계 악화 책임에 대한 질문을 집중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목적은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과연 국민들이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분석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남북관계 현실에 대한 국민의식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있어야 보다 적절한 대북정책이나 통일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남북관계 악화 책임론에 대한 인식편차가 통일의식 및 대북 및 주변국 정책

에 대한 의견 차이와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만일 남북관계 악화에 대해 다른 의견 가진 집단이 통일 및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의견을 표명한다면, 남북관계 악화 책임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집단의 통일 및 대북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거나 수렴되지 않는 경우 균형 잡힌 대북 및 통일정책을 실행함으로써 대다수 국민들이 통일 정책에 동참하도록 하는 방법을 고안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¹⁾

2. 분석에 사용된 질문 및 분석방법

분석에 사용된 질문 및 분석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통일의식조사』는 2009년부터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것에 대해 각국의 책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고, 북한,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 5개국 각각에 대해 ‘아주 크다’, ‘조금 크다’, ‘중간이다’, ‘별로 크지 않다’, ‘거의 없다’ 중에서 고르도록 하고 있다.

이 중에서 대상 국가 중에서 일본을 제외한 북한, 한국, 미국, 중국 등 4국에 대한 의견을 분석하되, 5개로 나누어진 응답지 중 ‘중간이다’, ‘별로 크지 않다’, ‘거의 없다’를 ‘크지 않다’로 묶어 ‘아주 크다’, ‘조금 크다’, ‘크지 않다’로 3분해서 국민들이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중간이다 이하 세 응답을 묶은 것은 ‘남북관계 악화’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매우 크다’와 ‘조금 크다’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겠지만, 책임이 중간이하라고 평가하는 경우는 실제 차이를 구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편 남북관계 악화 책임론에 대한 국가별 분석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라는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였다. 절대평가는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남북관계 악화에 책임이 어느 정도 크다고 생각하는지 분석하는 것으로, 북한, 한국, 미국, 중국 각각에 대해 남북관계 악화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지를 개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이때, 조사 연도에 따라 개별 국가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상대평가는 북한, 한국, 미국, 중국을 2개국씩 묶어 2개국 중 어느 국가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남북한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즉 북한의 책임과 한

1) 남북통일을 위한 단일하고 유일한 최선의 정책은 없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그렇지만 남북통일이 되고 남북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개별적인 통일정책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찬성하지는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통일지향적인 의지”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의 책임에 대한 의견을 비교해서 북한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면 북한책임으로 보고, 한국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면 한국책임론, 그리고 한국과 북한의 책임이 같다고 보는 경우에는 남북한 공동책임론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두 가지 분석에 이어 남북관계악화 책임론과 여타 통일정책, 대북 및 주변국 정책에 대해 이견 제시와 상관관계가 있는지 분석하였다.²⁾ 이 경우는 정책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해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한국 대 북한 책임론’, 그리고 ‘미국 대 중국 책임론’을 독립변수로 해서 분석하였다.³⁾ 또한 분석대상은 2016년도 조사결과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향후 정책을 전개할 때 과거의 국민의식보다 현재의 국민의식을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3. 남북관계악화 책임국가: 절대평가

〈표 1〉은 남북관계 악화에 대해 북한의 책임이 어느 정도라고 보는지를 정리한 것이다. 남북관계 악화에 북한의 책임이 ‘매우 크다’는 응답이 대략 50~65%이고, ‘조금 크다’가 25~35%이고, ‘크지 않다’가 10% 정도이다.

가장 일관된 조사결과는 남북관계 악화에 북한의 책임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10% 정도로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10% 정도의 국민들이 북한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는 않더라도 북한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하거나 수용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표 1〉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북한 책임

(단위: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아주 크다	57.9	62.6	63.2	56.0	63.5	64.5	50.8	49.8
조금 크다	30.3	27.0	25.8	31.3	25.3	26.3	36.3	37.3
크지 않다	11.9	10.4	11.1	12.7	11.2	9.3	12.8	12.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 여기에는 통일이 되어야 할 이유, 북한 핵무기 포기에 대한 의견, 바람직한 대북정책기조, 개성공단 재가동 및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의견, 한국 핵무기 보유에 대한 의견, 한미 혹은 한중 협력에 대한 의견 등이 포함된다.

3) 다양한 국가 쌍을 비교할 수 있지만, 남북관계 악화 책임이 한국에 있느냐 북한에 있느냐, 그리고 미국에 있느냐 중국에 있느냐를 견주어보는 것이 가장 흥미롭다고 판단하였다.

10%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90%정도의 국민이 남북관계 악화에 북한이 매우 크거나 조금 큰 책임이 있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내부적으로 ‘매우 크다’와 ‘조금 크다’는 의견 비중은 조사연도마다 차이가 나타나는 데, 이는 조사시점의 남북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2015년과 2016년 ‘아주 크다’는 의견이 줄고, ‘약간 크다’는 의견이 많아지는 특성을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김정은 정권하 북한이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사태를 지속적으로 발생 시키면서 북한 책임론이 일상화된 반면, 그에 대한 여러가지 대응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표 2>는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한국 책임 정도를 제시한 것이다. 남북관계 악화에 한국의 책임이 ‘매우 크다’는 응답이 대략 8~15%이고, ‘조금 크다’가 30~40% ‘크지 않다’가 50~60% 정도이다.

<표 2>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한국 책임

(단위: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아주 크다	13.9	14.3	10.4	13.2	7.2	10.3	8.9	8.9
조금 크다	39.5	39.8	37.3	36.6	34.8	35.8	41.6	33.2
크지 않다	46.6	45.8	52.3	50.2	58.0	54.0	49.5	57.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이는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북한의 책임정도에 거의 정반대되는 응답결과이다. 대략 10% 정도의 국민이 남북관계 악화에 한국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머지 90%가 ‘조금 크다’와 ‘크지 않다’로 나뉘는 데, ‘조금 크다’ 보다는 ‘크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한국 책임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과반수 50% 넘는 경우는 있지만, 안정적 과반수라고 할 수 있는 60%는 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대북정책이 국민들에게 완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이 부분 정부가 대북 정책을 수행할 때보다 정교해야 함을 시사해준다.

<표 3>은 남북관계 악화에 미국책임 여부를 제시한 것이다. 남북관계 악화에 미국의 책임이 ‘매우 크다’는 응답이 대략 15%내외이고, ‘조금 크다’가 30~40% ‘크지 않다’가 40~60% 정도이다. 한국 책임론과 비슷한 분포이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국보다는 미국의 책임이 크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음을 알게 된다. 그러나 2016년의 경우

미국책임론이 매우 줄어들었다. 오바마 정부 말기에 미국이 명확한 대북정책을 펴기보다 ‘무정책’이라고 할 정도로 명확한 대북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이 점이 한국 국민이 남북관계 악화에 미국의 책임이 크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조금 크다’와 ‘크지 않다’를 비교했을 때, 점차 조금 크다는 줄어들고 크지 않다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유로 생각된다.

〈표 3〉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미국 책임

(단위: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아주 크다	18.4	15.8	13.9	16.2	11.8	13.2	14.5	6.4
조금 크다	43.0	40.7	35.7	34.8	32.6	36.5	32.7	34.8
크지 않다	38.7	43.5	50.4	49.1	55.7	50.3	52.8	58.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마지막으로 남북관계 악화에 중국책임 여부를 〈표 4〉로 제시한다. 남북관계 악화에 중국의 책임이 ‘매우 크다’는 응답이 10%~25%로 소수이지만, 비교적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조금 크다’는 35%~45%, ‘크지 않다’가 35%~50%로 변한다. ‘매우 크다’는 응답 변동 폭이 큰 것은 중국에 대한 국민의식이 안정되어 있다기보다는 현재 형성과정에 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2011년을 정점으로 남북관계 악화에 중국의 책임이 크다는 인식은 줄어들고 있다. 미국에 대해서도 남북관계 악화에 책임이 ‘아주 크다’는 의견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남북관계 악화를 강대국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4〉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중국 책임

(단위: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아주 크다	13.1	20.8	26.5	22.6	19.2	16.3	14.0	11.3
조금 크다	34.3	38.6	39.1	38.0	39.2	42.6	36.4	45.6
크지 않다	52.6	40.6	34.5	39.4	41.7	41.2	49.6	43.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한편 <표 1>에서 <표 4>까지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각국의 책임 여부를 비교하면, 국민들은 남북관계 악화에 북한의 책임이 압도적으로 크고, 다음이 중국과 미국이며 한국이 책임이 가장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남북한에 한정해서 보자면 50% 정도의 국민이 남북관계 악화에 북한의 책임이 ‘매우 큰’ 반면, 한국의 책임이 ‘크지 않다’고 본다는 점에서, 남북한 중에서는 북한책임론이 크다는 것이 대체적인 국민정서이다. 그러나 60%이상 절대다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 전체가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주장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한편 남북관계 악화에 북한에 책임이 ‘크지 않다’고 보는 의견이 10% 정도이고, 반대로 한국의 책임이 ‘매우 크다’는 의견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소수이기는 하지만 남북관계 악화에 한국책임론을 주장하는 의견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대북 정책에 매우 비판적인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기반은 존재한다. 그러나 10%의 의견을 보고 ‘국론분열’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지나치다.

그리고 나머지 40%정도의 국민이 남북관계 악화에 한국의 책임이 ‘조금 크고’, 북한의 책임도 ‘조금 크다’고 생각한다. 이들 40%가 50%의 북한책임론과 10%의 한국 책임론 중간에 위치한다. 그리고 이들 집단을 어느 쪽으로 간주하느냐에 따라 국민여론은 통합을 보이기도 하고 완전 분열을 나타내기도 한다. 만일 이들 40%를 북한책임론에 찬성하는 쪽으로 간주하면 90%가 북한책임론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이 되고, 통합된 여론이라고 주장하게 된다. 반대로 이들 40%를 한국책임론에 붙이면 50%의 국민이 한국책임론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 진정한 국론분열이다. 그러나 이들 40%는 ‘절충주의적’ 또는 ‘양비론적’ 입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책임론이나 한국책임론에 붙이는 것은 곤란하다. 오히려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국민의견이 한국 북한의 2분법이 아닌 북한책임론 50%, 한국책임론 10%, 그리고 남북책임론 40% 정도로 나누어져 있는 현실에 기초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4. 남북관계악화 책임국가: 상대평가

이어서 해당되는 4개국을 책임론을 2개국씩 비교한 남북관계 악화에 상대적으로 책임이 큰 국가가 어느 국가라고 생각하는지 분석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표 5>는 북한책임론과 한국책임론을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다. 60~70% 정도의 국민이 남북관계 악화에 북

한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다, 60%가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절대다수가 북한책임론을 상정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반면에 한국책임론을 제기하는 국민들은 5% 이하이다. 이는 <표 1>이나 <표 2>의 절대평가에서 북한무책임론 및 한국책임론이 10% 정도 나왔던 것에 비해 절반 정도 낮은 수치이다. 시중에는 북한에 동조하는 국민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논의가 있지만, 실제 북한이 주장하는 한국책임론에 동조하는 국민은 5% 미만의 극소수라는 점이다.

그러나 30% 내외의 국민이 남북한 공동책임론을 생각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 악화가 주로 북한 책임이 있지만, 한국도 남북관계를 개선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공동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극소수 한국책임론자를 제외하면, 남북관계 악화 책임에 대한 남북한 상대평가는 북한이나 한국이나의 2분법이 아니라, 북한이나 남북한 공동이나의 2분법으로 구분된다는 점을 인식했으면 한다.

〈표 5〉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 비교 : 북한 vs. 한국

(단위: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북한>한국	60.0	64.2	66.5	61.3	70.5	69.3	59.4	61.6
북한=한국	34.4	31.6	29.3	33.5	27.1	28.2	36.3	34.7
북한<한국	5.6	4.3	4.2	5.3	2.4	2.5	4.3	3.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한편 한국과 미국 및 중국이라는 강대국을 비교하여 남북관계 악화 책임소재에 대한 의견을 분석한 것이 <표 6>과 <표 7>이다. <표 6>에서 한국과 미국의 책임을 비교하면 한국 책임이 15~20%, 미국 책임이 20~25%이라는 의견이어서 다수를 차지하지 못한다.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50~60% 정도를 차지하는 한미 공동책임론이다. 동맹국으로서 한국과 미국은 남북관계악화에 공동책임이 있다는 관점을 과반수 국민들이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40~50%가 한국 또는 미국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데, 2015년까지는 한국책임론보다 미국책임론이 조금이나마 많았는데, 2016년에 공동책임론의견이 많아지는 가운데 미세하나마 한국책임론이 미국책임론보다 높아졌다. 남북관계에서 미국보다 한국이 직접 당사자라는 의식이 부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조짐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6〉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 비교 : 한국 vs. 미국

(단위: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한국>미국	18.6	19.7	16.4	19.8	16.9	18.5	20.0	19.3
한국=미국	53.1	57.0	62.7	57.3	60.4	57.0	57.3	63.5
한국<미국	28.3	23.3	20.9	22.9	22.7	24.5	22.8	17.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7〉은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한국책임론과 중국책임론을 비교한 것이다. 한미관계와 비교하면 한국과 중국이 같은 정도의 책임이 있다는 한중 공동책임론의 차지하는 비중은 40%대로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한국책임론과 중국책임론과 각각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60% 정도가 한국책임론과 중국책임론으로 나뉘는데, 2009년 한국책임론이 컸지만, 그 이후는 지속적으로 중국책임론이 한국책임론보다 높다. 대체로 한국책임론은 25% 정도 중국책임론이 30~40%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책임론보다 중국책임론이 보다 많은 것은 한국보다 중국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인식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보인다.

〈표 7〉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 비교 : 한국 vs. 중국

(단위: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한국>중국	30.3	22.7	15.2	20.5	18.1	18.1	23.2	22.6
한국=중국	47.1	45.6	44.1	44.0	48.6	48.6	49.1	40.5
한국<중국	22.6	31.8	40.7	35.5	39.3	33.3	27.8	36.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그리고 북한과 미국 및 중국이라는 강대국을 비교하여 남북관계 악화 책임소재에 대한 의견을 분석한 것이 〈표 8〉과 〈표 9〉이다. 먼저 〈표 9〉에서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북한책임론과 미국책임론을 보면, 북한책임론이 60%대임을 알게 된다. 반대로 미국책임론은 10% 미만이다. 북한이 북한 도발의 원인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을 지적하지만, 국민들 중에 미국책임론에 동조하는 집단은 많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30% 정도의 국민이 미북 공동책임론 의견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남북관계 악화에 미국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하기는 힘들 것이다.

〈표 8〉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 비교 : 북한 vs. 미국

(단위: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북한>미국	56.7	63.2	64.9	61.1	70.0	68.6	60.2	67.0
북한=미국	33.8	29.3	29.1	30.6	22.8	24.8	30.3	27.3
북한<미국	9.5	7.4	6.0	8.3	7.2	6.7	9.5	5.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그리고 〈표 9〉에서 북한과 중국 책임론을 살펴보면, 〈표 8〉과 거의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음을 알게 된다. 중국이 북한의 후견인으로 보는 견해도 존재하지만, 중국에 보다 큰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견해는 10%에 미치지 못한다. 북한과 중국의 책임을 비교하면 50~60% 정도가 남북관계 악화의 우선적인 책임이 북한이 있다는 의견이다. 그리고 중국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역할을 기대만큼 하지 못한다는 평가에서 북중 공동책임을 30~40%가 공동책임론 의견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9〉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 비교 : 북한 vs. 중국

(단위: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북한>중국	64.7	58.0	52.4	52.3	60.8	64.0	60.8	57.6
북한=중국	30.1	34.9	40.8	39.9	30.3	28.7	30.9	37.4
북한<중국	5.2	7.1	6.8	7.8	8.9	7.3	8.3	5.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그럼 G2로 구분되는 미국과 중국은 남북관계 악화에 어느 쪽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가? 〈표 10〉에서 미중 공동책임이라는 의견이 60% 내외를 이루며 절대다수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강대국으로서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안정에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 그리고 굳이 미국과 중국 중에서 책임론을 선택한다고 한다면 2009년도를 제외하면 미국 책임보다 중국의 책임이 더 크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다. 대체로 중국에 책임이 있다는 의견이 미국에 책임이 있다는 의견보다 2배 이상 많다. 이는 한국과 중국을 비교해서 중국책임론이 높았던 것처럼(〈표 6〉),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중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으로 크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10〉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 비교 : 미국 vs. 중국

(단위: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미국<중국	28.8	14.7	7.8	10.5	9.6	11.1	13.8	11.8
미국=중국	59.8	63.7	61.5	66.4	63.2	67.3	68.6	59.8
미국>중국	11.4	21.6	30.6	23.1	27.3	21.7	17.6	28.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남북관계악화 책임국가에 대한 상대평가는 다음이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절대평가와 마찬가지로 남북관계 악화의 가장 큰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특징은 상대평가에서 보다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점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한국·미국 책임론에 대해 동조하는 국민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남북관계 악화를 해결하지 못한 데는 한국, 미국, 중국에 부분적인 책임이 있다는 의견도 상당수 된다. 남북관계 악화가 진행된 데는 한국과 미국의 공동책임,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공동책임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중에서는 특히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여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데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의견이 많다는 점이다.

5. 남북책임론 및 미중책임론과 통일, 대북 및 대외정책에 대한 의견

2016년 조사를 분석해서 남북한과 미중 사이에 나타난 남북관계 악화 책임국가에 대한 상대 평가를 독립변수로 해서 통일, 북한, 대북현안 정책 및 대외정책과 상관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고자 한다.⁴⁾

〈표 11〉과 〈표 12〉는 남북 책임론 및 미중 책임론별로 어떤 통일의식(통일필요성 및 통일 이유)을 갖고 있는지 제시한 표이다. 먼저 통일필요성에 대한 의식을 살펴보면, 북한책임론자와 남북공동책임론자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한국책임론자가 통일

4) 남북관계 악화 책임국가에 대한 상대평가가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소득수준별 이념지향별로 차이가 나지 분석해보았다. 이는 남북관계 악화 책임론에 대한 의견차이가 앞에서 제시한 변수에서 드러난다면, 성,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이념지향이라는 변수가 남북관계악화 책임론에 영향을 미치는 비경변수가 되어, 그 결과 남북관계 악화 책임 국가라는 변수가 갖는 의미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2016년도 조사결과를 남북책임론과 미중책임론을 대상으로 카이자승 검증한 결과, 앞에 제시한 모든 변수에서 유의상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상대평가에 의한 남북관계 악화 책임론 변수가 새로운 독립변수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의 필요성을 낮게 본다. 그러나 한국책임론자는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기 때문에 지나치게 그 의미를 강조해서는 곤란하다.⁵⁾ 한편, 미국책임론자와 중국책임론자 간에는 통일필요성에 대한 의견에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남북관계 악화책임론과 통일필요성에 대한 의견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표 11〉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론과 통일필요성(2016년)

(단위: %)

통일필요성	남북책임론			미중책임론		
	북한책임	공동책임	한국책임	미국책임	공동책임	중국책임
매우 필요	20.4	22.9	11.9	17.0	21.8	21.1
약간 필요	34.8	28.2	40.5	33.3	31.9	33.9
그저그렇다	22.3	22.9	21.4	22.0	22.0	23.7
별로 필요하지않다	18.5	17.2	23.8	22.0	22.0	23.7
전혀 필요하지않다	3.9	8.8	2.4	6.4	6.3	3.8
χ^2 검증	p < 0.01			p = n.s.		

남북관계 악화책임론과 통일필요성에 대한 의견 사이는 밀접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표 12〉에서는 보는 바와 같이 북한책임론자와 남북한공동책임론자 간에 그리고 미중책임론자 사이에 통일이유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가 통일이유로 가장 많이 거론되지만, 북한책임론자는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와 '전쟁위협소멸'이유가 거의 대응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반면에 남북공동책임론자는 여전히 '같은 민족'임으로 통일해야한다는 전통적인 의견을 갖는 사람이 다른 의견보다 크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5) 이하 마찬가지로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표 12〉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론과 통일이유(2016년)

(단위: %)

통일이유	남북책임론			미중책임론		
	북한책임	공동책임	한국책임	미국책임	공동책임	중국책임
같은 민족	37.1	43.0	33.3	34.0	42.4	34.0
이산가족 고통해결	11.5	11.2	33.3	13.5	12.0	12.0
전쟁위협소멸	33.7	22.2	19.0	26.2	25.2	38.7
북한주민 잘 살게	4.1	6.2	2.4	8.5	5.2	2.3
선진국되기위해	13.0	16.5	11.9	17.0	14.6	12.0
기타	0.5	1.0	0.0%	0.7	0.6	0.9
χ^2 검증	p < 0.001			p < 0.001		

그리고 미중책임론자 중에서는 중국책임론자 중에서 전쟁위협소멸을 가장 많은 사람이 지적한 점이 눈에 띈다. 이제 중국책임론자는 한반도 전쟁 억제에 있어 한국과 미국 외에 중국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많이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미중공동책임론자들은 여전히 통일이유로 같은 민족이라는 전통적인 이유를 가장 많이 택하고 있다. 결국, 남북한이나 미중 공동책임론자들이 통일이유로 민족결합을 많이 선택함을 알 수 있다.

〈표 13〉과 〈표 14〉는 남북 책임론 및 미중 책임론별로 북한에 대한 인식(북한 및 북한정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제시한 표이다. 북한책임론자가 남북공동책임론자에 비해 지원 및 협력대상이라는 의견이 적은 반면, 경계 및 위협대상으로 보는 의견이 많아진다. 북한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한 의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중책임론과 북한에 대한 인식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다. 북한에 대한 인식이 미국 및 중국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인다. 단순화시켜 표현하면 친북이라고 해서 친중이고 반북이라서 친미는 아니라는 점이다. 북한에 대한 인식이 미국 및 중국에 대한 의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표 13〉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론과 북한인식(2016년)

(단위: %)

대북인식	남북책임론			미중책임론		
	북한책임	공동책임	한국책임	미국책임	공동책임	중국책임
지원대상	9.2	14.8	23.8	11.3	12.6	9.9
협력대상	42.6	45.8	38.1	48.9	43.1	42.4
경쟁대상	7.0	8.4	19.0	10.6	7.1	8.5
경계대상	24.6	18.4	11.9	19.9	21.9	23.1
위협대상	16.5	12.6	7.1	9.2	15.3	16.1
χ^2 검증	p < 0.01			p = n.s.		

그러나 북한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아니라 북한정권에 대한 인식으로 보다 특정화된 북한인식을 살펴보면 남북책임론이나 미중책임론 모두 의견이 다르게 나타난다. 북한책임론자는 남북공동책임론자보다 북한정권에 대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반면에 남북공동책임론자는 상대적으로 북한정권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라고 보는 의견이 많아진다.

그리고 미중책임론중에서는 중국책임론자가 북한정권이 대화가 타협이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을 많이 피력하고 미중공동책임론자, 미국책임론자 순으로 북한정권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일반적인 북한에 대한 인식이 미중책임론에 미치는 영향은 없지만, 북한정권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미중간 책임을 다르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 14〉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론과 북한 정권인식(2016년)

(단위: %)

북한정권 대화타협가능	남북책임론			미중책임론		
	북한책임	공동책임	한국책임	미국책임	공동책임	중국책임
매우 가능	2.8	4.1	14.3	5.0	4.0	2.3
어느 정도 가능	24.2	33.2	50.0	39.0	30.7	18.7
별로 가능하지않음	52.9	46.5	35.7	41.1	48.5	57.0
전혀 가능하지않음	20.0	16.2	0.0	14.9	16.7	21.9
χ^2 검증	p < 0.001			p < 0.001		

〈표 15〉와 〈표 16〉은 남북책임론과 미중책임론 별로 주요 대북 현안정책(개성공단 재가동, 한국 핵무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표 15〉에서 남북관계 악화가 북한책임론이라는 의견을 가진 집단은 남북공동책임론자보다 개성공단 재가동을 찬성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난다. 한편 미중책임론에 대한 의견 차이에 있어서는 미국책임론자가 중국책임론자보다 개성공단 재가동을 찬성하는 비율이 높다. 그리고 미중공동책임론자가 중간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은 미중공동책임론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인데, 남북한 공동이나 미국에 남북관계 악화 책임이 있다고 보는 집단에서는 개성공단 재가동에 찬성의견이 많지만, 북한이나 중국에 남북관계 악화 책임이 있다고 보는 집단에서는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찬성의견이 줄어들고 있다.

〈표 15〉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론과 개성공단 재가동(2016년)

(단위: %)

통일필요성	남북책임론			미중책임론		
	북한책임	공동책임	한국책임	미국책임	공동책임	중국책임
매우 찬성	10.4	22.0	14.3	20.6	16.6	7.9
다소 찬성	30.9	35.8	38.1	38.3	32.2	31.9
그저그렇다	24.0	23.4	38.1	25.5	22.9	26.6
다소 반대	24.5	13.6	9.5	11.3	21.1	21.9
매우 반대	10.3	5.3	0.0	4.3	7.3	11.7
χ^2 검증	p < 0.001			p = n.s.		

〈표 16〉은 한국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남북책임론과 미중책임론자들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소수인 한국책임론자를 제외하면 한국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5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핵무장’을 언급했지만, 핵무기 그 자체 보다는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특단의 자위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⁶⁾ 북한의 군사적위협에 대응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남북관계 악화 책임에 대한 의견 차이에 따라 핵무장에 대해 부분적인 의견차이가 드러난다. 남북공동책임론자와 미국책임론자, 그리고 미중공동책임론자 중에서 한국 핵무장을 반대하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6) 이번 조사에 사드배치에 대한 의견이 조사되지 않았지만, 대체로 핵무장에 대한 의견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을 것으로 짐작된다.

〈표 16〉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론과 한국 핵무장(2016년)

(단위: %)

한국 핵무장	남북책임론			미중책임론		
	북한책임	공동책임	한국책임	미국책임	공동책임	중국책임
매우 찬성	21.7	22.4	14.3	19.9	23.2	19.3
다소 찬성	32.1	28.6	26.2	31.9	27.5	36.8
그저그렇다	32.5	28.6	52.4	30.5	32.6	30.7
다소 반대	9.2	15.0	7.1	12.8	12.4	7.9
매우 반대	4.6	5.3	0.0	5.0	4.3	5.3
χ^2 검증	p < 0.01			p < 0.1		

마지막으로 〈표 17〉과 〈표 18〉에서 남북책임론과 미중책임론 별로 ‘바람직한 통일정책’과 ‘중요한 대외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표 17〉에서 북한책임론자는 현재 통일정책이나 통일준비보다 북한 핵개발 중단 정책이 보다 바람직 하다는 의견을 가장 많이 표명하고 있다. 이는 한국책임론자가 통일정책과 통일준비를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과 대비된다. 남북공동책임론자는 북한책임론자에 비해 평화협정 체결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많이 선택한다. 그리고 북한 개혁개방과 인권신장은 북한책임론자나 남북공동책임론자 모두에서 20%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음이 눈에 띈다.

한편 중국책임론자는 북한 핵중단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조하고, 미국책임론자는 상대적으로 평화협정 체결을 많이 선택하고 있다. 다수를 차지하는 미중공동책임론자는 북한핵중단을 위한 국제협력과 북한의 개혁개방과 인권시장을 유사하게 선택하고 있다.

〈표 17〉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론과 바람직한 통일정책 (2016년)

(단위: %)

바람직한 통일정책	남북책임론			미중책임론		
	북한책임	공동책임	한국책임	미국책임	공동책임	중국책임
남북 교류협력, 대북지원	14.7	17.4	11.9	14.9	16.2	14.6
북한개혁개방, 인권신장	25.7	23.4	21.4	25.5	24.0	26.0
적극적 통일정책, 통일지원준비	13.7	20.0	45.2	22.0	17.7	13.5
북한 핵중단 위한 국제협력	30.7	18.9	11.9	15.6	24.5	33.0
평화협정 체결	15.2	20.3	9.5	22.0	17.6	12.9
χ^2 검증	p < 0.001			p < 0.01		

〈표 18〉은 중요한 대외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남북공동책임론자가 남북협력을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조사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책임론자가 한미협력보다 남북협력과 모두 중요하다는 것을 선택한 비율이 높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악화에 북한책임이 크지만 해결은 남북협력 외에 한미협력과 남북한과 미중 모두가 협력해야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모든 집단에서 한중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선택한 비율이 매우 낮음도 주목거리이다. 한중협력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되지만 이는 남북협력 및 한미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미중책임론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미중공동책임론자나 중국책임론자, 그리고 미국책임론자 모두 남북협력, 한미협력 그리고 한중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중국책임론자의 경우 남북한과 미중 모두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 한국과 중국과의 협력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중국을 포함하여 북한 및 미국과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표 18〉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론과 중요한 대외정책 (2016년)

(단위: %)

중요한 대외정책	남북책임론			미중책임론		
	북한책임	공동책임	한국책임	미국책임	공동책임	중국책임
남북협력	33.7	40.1	26.2	37.6	37.7	30.7
한미협력	25.6	22.7	47.6	26.2	25.2	25.1
한중협력	7.2	6.7	2.4	8.5	6.3	7.3
모두 중요	33.6	30.5	23.8	27.7	30.8	36.8
χ^2 검증	p < 0.05			p = n.s.		

6. 소결: 정책적 시사점

남북한이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곤란하다. 당위론적으로는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남북관계는 개선되기도 하고, 악화되기도 하는 우여곡절을 겪기 마련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최근 남북관계는 악화일로에 있다.

악화일로에 있는 남북관계를 어떻게 해야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남북관계 악화

에 책임이 있는 국가가 기존의 정책을 우선적으로 변경해야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그러나 각국 정부는 남북관계 악화의 원인이 자신보다는 타 국가에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발표하거나 논의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각국 정부가 나서서 기존 정책을 수정하기는 쉽지 않다.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정책변화는 전문 학자나 정책담당자의 의견을 정부가 받아들이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물론 이는 민주주의가 발전된 사회에 한정된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이후 정부 정책결정에 국민여론을 중시하고 있다. 그래서 전문 학자나 정책가들이 정책을 입안하거나 실행할 때 국민의견을 참고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대북 및 통일정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에 많은 통일 및 대북 담론들이 국민의 통일의식조사 결과를 기초자료로 해서 자신의 정책이나 주장을 편다. 그러나 국민들의 통일의식을 본격적으로 분석한 논의는 많지 않다. 몇 사람의 의견을 전체 국민의 의견인 것처럼 주장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이에 일반국민들이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분석하여 한국정부가 대북 및 관련 통일정책을 펴는 데 참고자료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정부의 통일 및 대북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관계 악화에 대해 그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보는 국민들이 대다수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 ‘북한제재’로 맞서는 것은 타당한 정책방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수는 아니지만 상당수 국민들이 남북공동책임론 입장을 가졌다는 점에서 ‘북한제재’를 하되 그 방식이나 범위에 있어서는 융통성을 부여하는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대북정책에서 북한주민과 북한정권에 주는 함의를 구분해서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북한 정권이 남북관계 악화 책임의 원인이 한국 및 미국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한국국민 중에 북한 주장에 동조하거나 긍정하는 국민의 매수 소수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주장은 한국인에게 타당성을 결여한 논의에 불과하다. 남북관계 악화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을 비난하는 북한의 선전선동전략은 일반적인 한국인에 통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 반정부 및 반미 주장이나 논리가 한국인에게 큰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북한의 주장에 대해 지나치게 세세하거나 진지하게 대응하지 않았으면 한다.

셋째, 한편, 한미 간에 그리고 미중 간에는 공동책임론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한미 간에 그리고 미중 간에 공조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중 미중 간 정책공조는 한국정부가 주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동맹국인 미국에게 한국 국민들이 보다 대북정책에 있어서 미중협력이 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려줄 필요는 있다.

넷째, 한국인은 북한에 이어 중국이 남북관계 악화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중 간에도 대북정책에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인은 중국이 한국보다는 북한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에 한중 공조라 쉽게 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 실제로 중국협력 중시론은 중국과의 협력을 집중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아니라 남북한 협력과 한미협력을 유지하면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라 할 수 있다. 이 점 한국 정부에 대해 대북정책 실행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자주 거론되고 있지만, 중국 일변도로 협력을 강화하기보다는 남북협력과 한미협력과 동시에 한중협력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고 보아야한다. 그런 점에서 한국정부가 점차 중국과 통일과 대북정책을 논의하려는 입장으로 선회하는 방향성은 맞지만, 국민들이 대북정책에서 중국에 거는 기대수준이 낮다는 점에서 무리하거나 성급하게 추진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다섯째, 그동안 통일 및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서 성별차이, 교육수준별 차이, 지역별 차이, 세대와 이념지향별 차이가 강조되었다. 그러나 남북관계 악화 책임에 대한 인식은 위에서 제시한 기본적인 배경변수와 상관관계가 높지 않다는 특징을 보였다. 그렇다면 기존의 배경변수별 맞춤형 통일의식을 제고하는 통일 및 대북정책만으로는 국민들을 통일추진형으로 만들기에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남북관계 악화 책임론에 대한 입장차를 고려하여 적절한 통일 및 대북정책을 구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컨대, 북한책임론자에 대해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국제협력과 군사적 대비책 마련에 대한 정부 정책을 알려주고, 남북공동책임론자에 대해서는 적정수준의 남북교류와 북한을 개혁개방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음을 알려준다면, 북한책임론자와 남북공동책임론자 모두 남북통일에 관심을 갖고 실천하도록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016 통일의식조사

전환기 통일 · 대북정책 방향은?

발표 7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변화와 다문화 수용성

황정미 (고려대)

2016/ 통일외식조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변화와 다문화 수용성

2016. 9.
황정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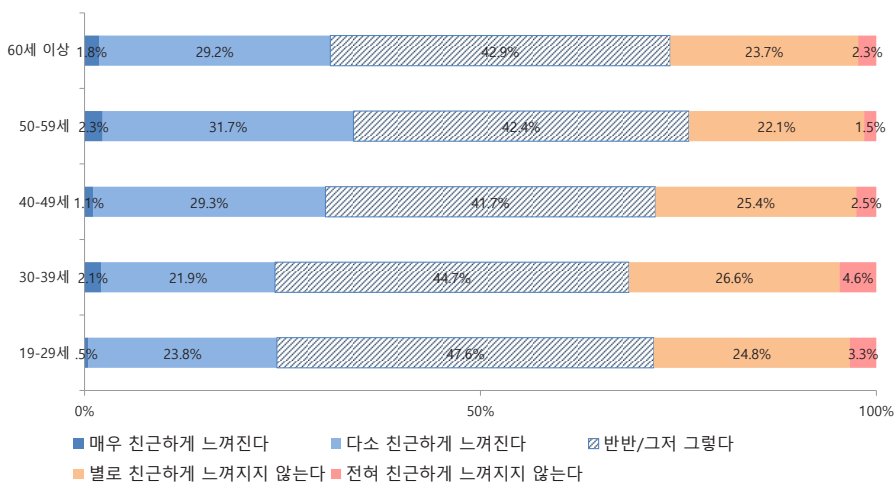
도입

- 분석의 의의
 - : 남한주민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를 분석
 - : 시계열적 변화 및 연령, 교육수준 등에 따른 차이 - 그 사회적 함의 및 관련된 요인들간의 이론적 경험적 연관성 탐색
- 주요 분석 내용
 -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 : 한국에 거주하는 다른 이주자에 대한 태도와 비교
 - 탈북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
 - 탈북자 수용에 대한 태도 (정책지원 등)
 - 탈북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탐색 : 접촉, 북한 인식, 통일 인식
 - 다문화 수용성의 시계열적 변화
 - 다문화 수용성과 탈북자 수용 태도/ 통일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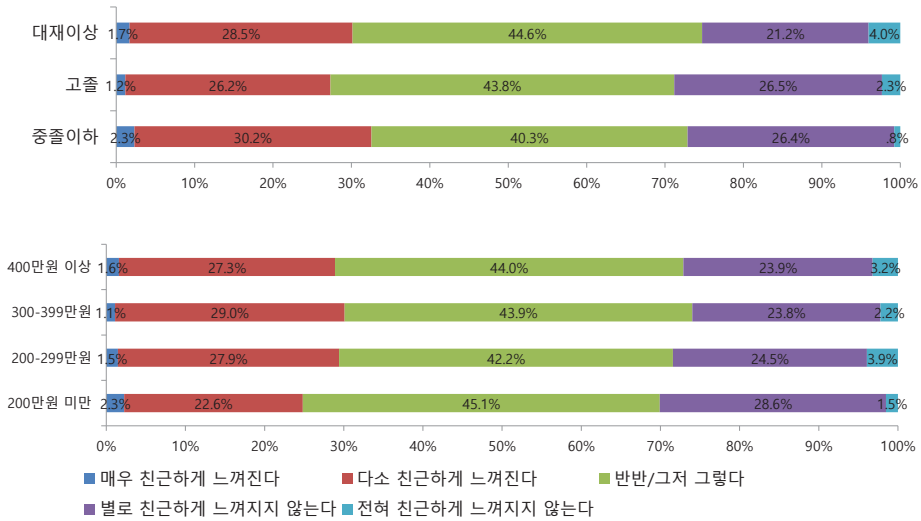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 북한이탈주민을 '친근하게 느낀다'는 긍정적 응답률은 20대, 30대 응답자에서 적은 반면 50대 연령층에서 가장 많았음.
- 교육수준별 - 중졸 이하 층에서 친근하다는 응답이 높은 반면, 고졸 응답자는 가장 친근감이 낮음.
- 가구소득별로는 2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층에서 친근감을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국내 거주 이주자 집단과의 비교 : '친근하게 느낀다'는 긍정적 응답률의 미국·유럽인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탈북자, 그리고 조선족>동남아인>아프리카인>아랍인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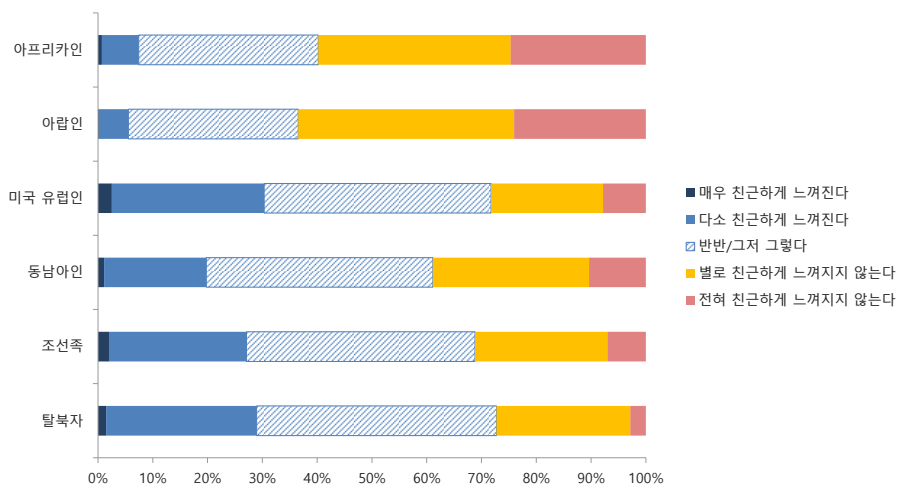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 : 연령별 (2016)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 교육/소득수준별 (2016)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 - 국내 거주 이주자와 비교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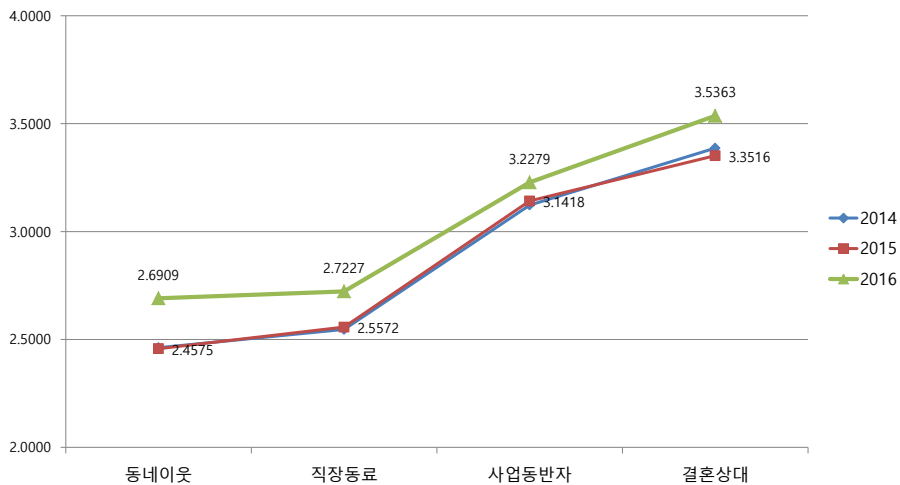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 (social distance)

- 북한이탈주민을 동네 이웃, 직장동료, 사업동반자, 결혼상대로 얼마나 꺼리는지를 각각 조사함 (5점 척도)
- 2014년, 2015년에 비해 2016년 조사에서는 탈북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가 유의미하게 멀어진 것으로 나타남
- 2015년에는 20대가 탈북자를 가장 멀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2016년에는 30대의 사회적 거리감이 더 높게 나타난 점이 주목됨. 20, 30대의 태도가 지난 조사에 비해 점차 유사하게 수렴되는 경향이 엿보임.
- 2016년에는 전반적으로 모든 연령에서 사회적 거리가 확대되었지만, 특히 6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 탈북자를 결혼상대로 꺼린다는 응답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음 -- 60대 이상 고령층의 탈북자에 대한 거부감이 유의미하게 늘어난 것으로 해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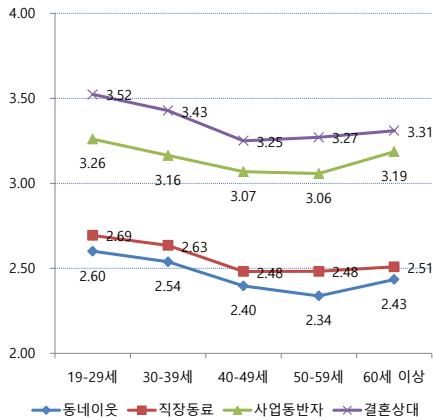
탈북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 2014~2016

(5점 척도 평균값 : 1점 전혀 꺼리지 않음 ~ 5점 매우 꺼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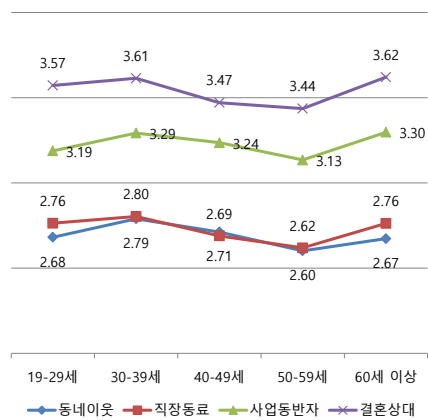


탈북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 - 연령별

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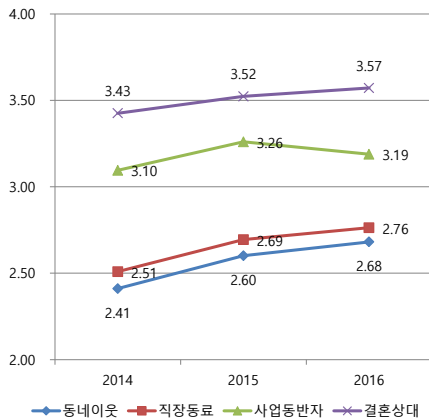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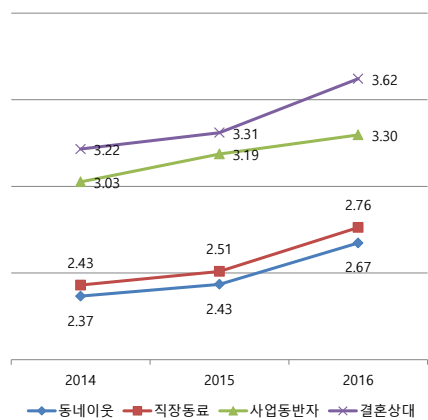
탈북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 변화

: 20대와 60대 이상

19~29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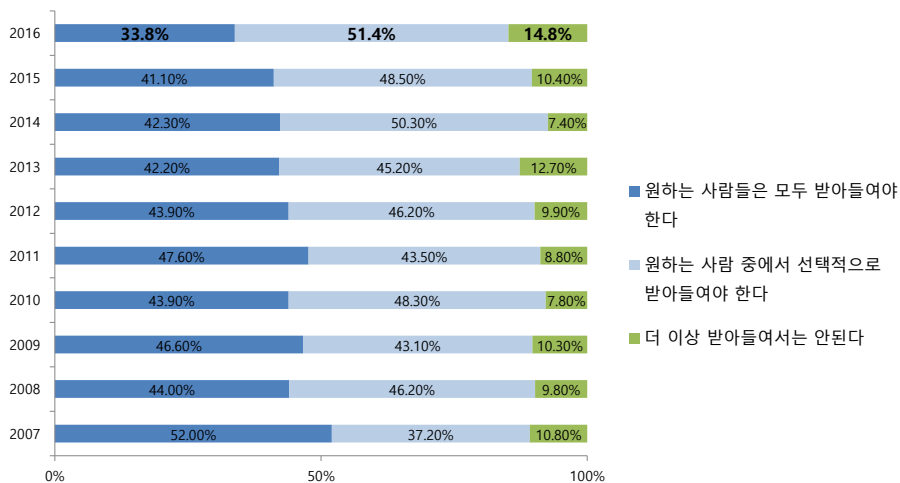
60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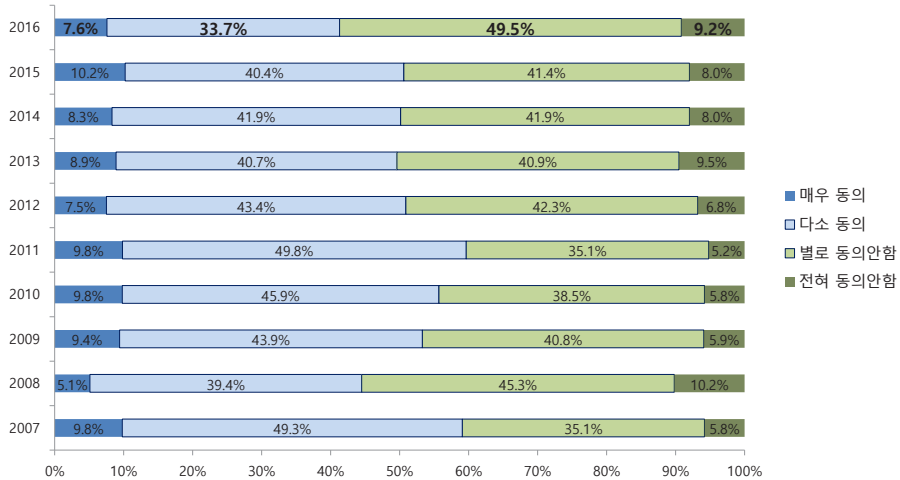
탈북자 수용/ 정책지원에 대한 태도

- 2016년 조사에서는 탈북자 수용에 대해 '전부 수용'을 지지하는 견해가 감소한 반면, '선택적 수용' 혹은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다'는 부정적 부정적 태도가 증가하였음.
- 탈북자에 대한 정부지원에 찬성하는 응답률도 이전 조사에 비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탈북자로 인해 취업이 어려워진다는 부정적 견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
- 전반적으로 탈북자의 수용 및 정책 지원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시계열적으로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탈북자들이 남북한의 이질화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응답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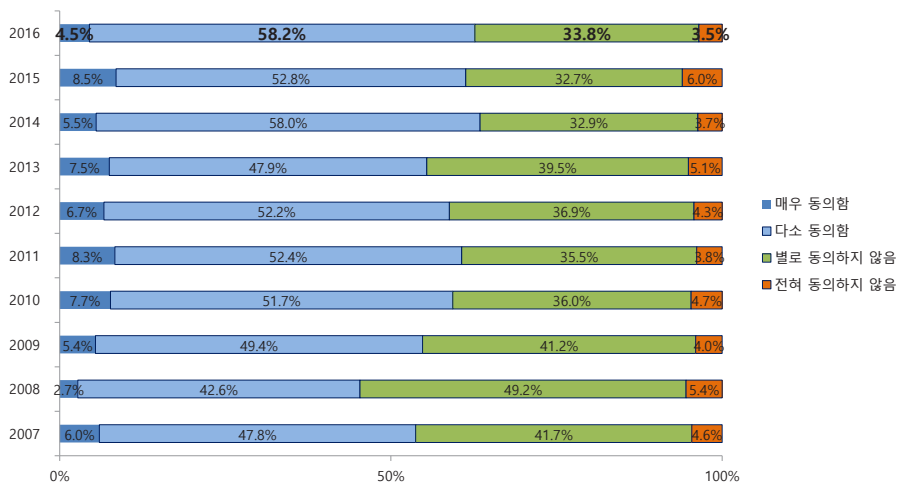
한국으로 들어오는 탈북자 수용에 대한 의견 (2007~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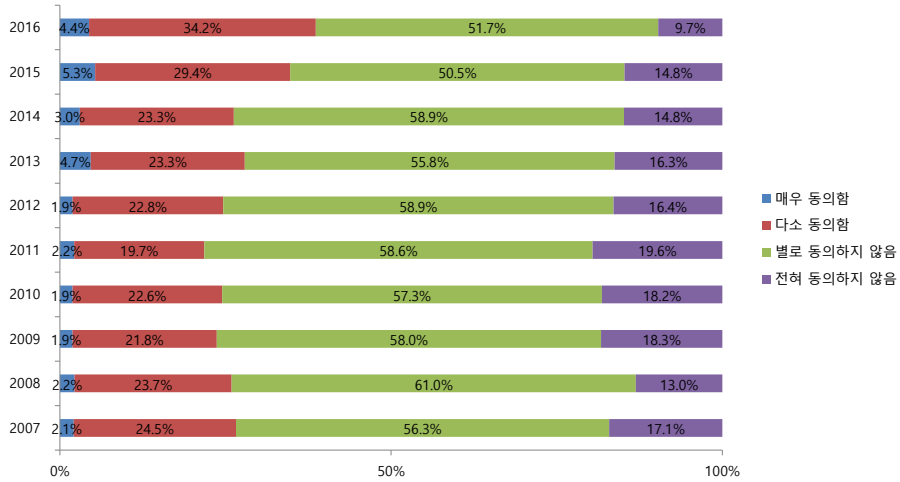
탈북자에 대한 정부지원 증대에 대한 의견 (2007~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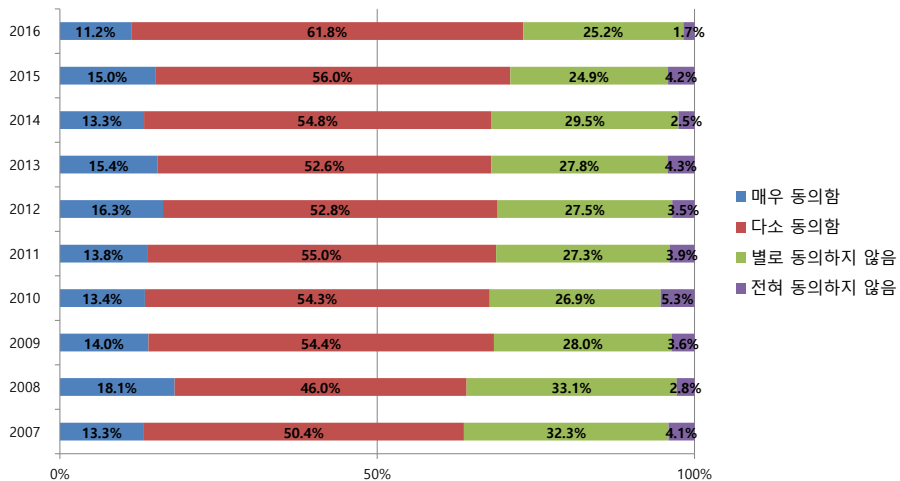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 - 이질화 해소에 도움



“탈북자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 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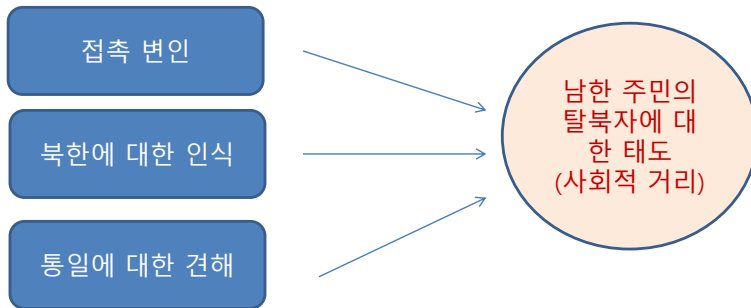


“탈북자도 조직에서 동일하게 경쟁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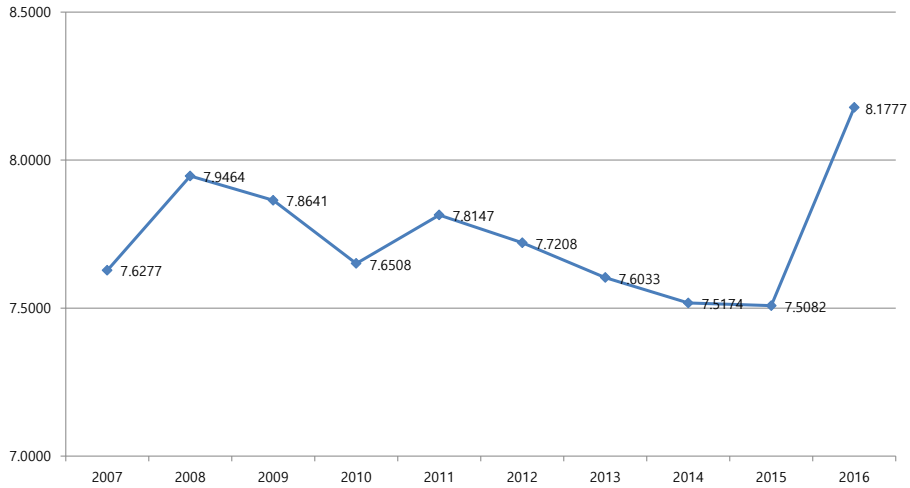
탈북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 – 평균비교분석

- 탈북자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를 요약하는 변인으로 사회적 거리 (social distance) 점수를 계산
- : 4 항목(동네이웃, 직장동료, 사업동반자, 결혼상대)에 대한 거리감을 0~4점으로 리코딩 → 합산 점수를 구함 (0~16점)



- 접촉 변인 : 탈북자와 만난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사회적 거리감이 줄어드는 경향
 - 대북 인식 : 북한을 지원대상으로 보는 경우 사회적 거리가 줄어들며, 경계대상으로 보는 응답자는 사회적 거리감이 커지는 경향
 - 조속한 통일을 지지하는 응답자는 사회적 거리감이 적은 반면, 분단의 현상 유지를 원하는 경우 탈북자를 좀더 멀게 느끼는 경향이 나타남
- 남한주민들이 탈북자를 바라보는 인식과 태도에는 탈북자와의 직접적인 접촉 경험, 그리고 북한과 통일에 대한 견해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됨.
- 북한에 대한 적대감 보다는 경계심과 무관심 등이 거리감을 더 확대하는 요인으로 해석됨.

탈북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 점수 추이 : 2007~2016 (4항목 합산, 0~16점)



"접촉" 변인과 탈북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 (2016)

		N	평균값	유의도
북한 방문 관광	있다	25	8.1639	t=.022
	없다	1176	8.1780	
탈북자 만남	있다	171	7.2429	t=4.243***
	없다	1030	8.3324	
북한문화 접촉	있다	260	8.1023	t=.439
	없다	941	8.1985	

“대북인식”과 탈북자 거리감

(평균비교, 2016)

대북인식	평균	N	표준 편차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지원대상이다	7.6257	139	3.38278
우리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	7.6408	525	3.12568
우리와 선의의 경쟁을 하는 대상이다	8.5138	99	2.46813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9.1144	260	2.98999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대상이다	8.6382	178	3.05893
총계 (F=12.429***)	8.1777	1201	3.12778

통일 인식과 탈북자 거리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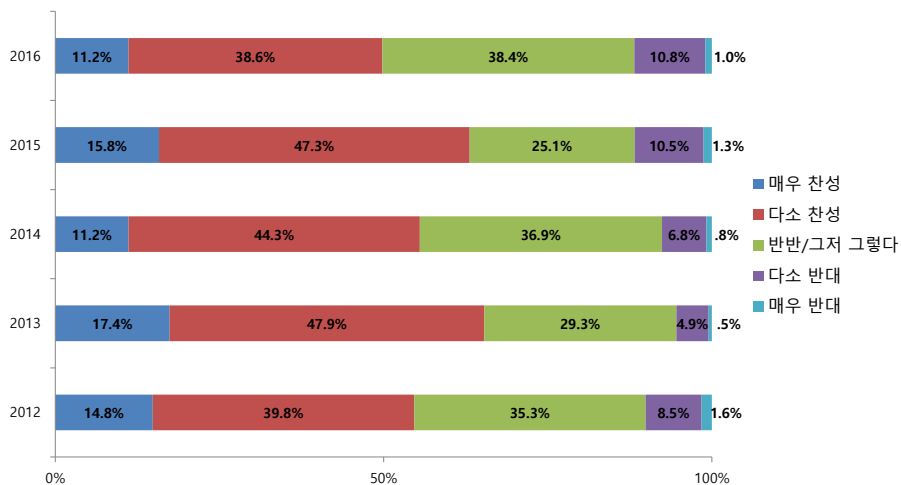
(평균비교, 2016)

통일에 대한 견해	평균	N	표준 편차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통일되는 것이 좋다	7.5441	157	3.56778
통일을 서두르기보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7.9236	650	2.97476
현재대로가 좋다	9.0415	279	3.11014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	8.3894	115	2.96557
총계 (F=11.116 ***)	8.1777	1201	3.127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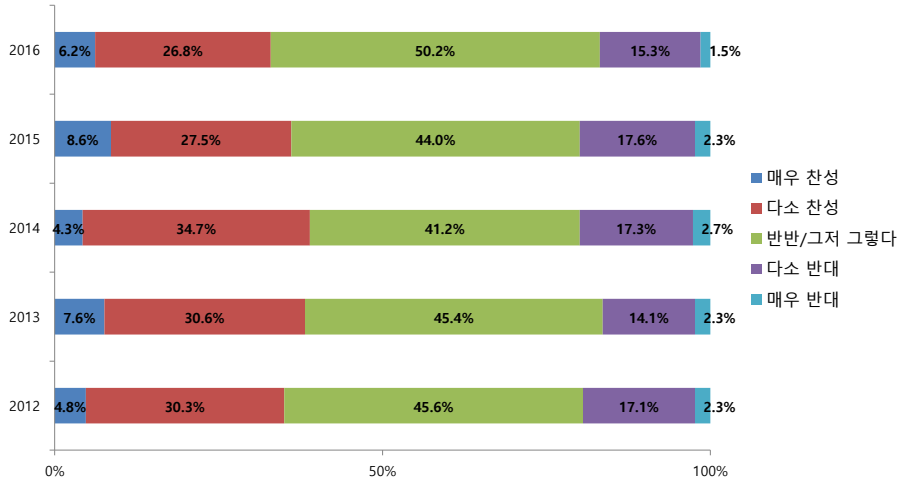
다문화 수용성과 탈북자에 대한 태도

- 고향을 떠나 새로운 사회에 정착한다는 측면에서 탈북자는 이주민
- 다양한 문화, 외국인을 공동체 안으로 포용하는 태도, 즉 다문화 수용성은 탈북자에 대한 태도와 연관됨.
- 2016년 조사에서는 다양한 문화의 수용에 찬성하는 견해가 2014, 2015년보다 더 감소하였음.
- 그러나 다양한 민족을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은 소폭 줄어들었음.
- 다문화 수용성의 감소 추세가 탈북자의 수용 및 정책 지원에 대한 태도와도 연관성이 있는지 분석이 필요함.

“어느 국가든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좋다” (다문화 공존) (2012~2016)



“여러 민족을 국민으로 받아들이면 국가 결속력 해치게 된다” (2016)



다문화 수용성과 탈북자 수용에 대한 태도

- 다문화 수용성, 다문화 사회와 관련된 두 항목 - 점수가 높을 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아 지도록 리코딩
- 평균 비교
- 탈북자를 남한사회로 받아들이는데 찬성하는 사람들은 탈북자 수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자에 비해 다문화 수용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조속한 통일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문화 수용성도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
- 다문화 수용성이 탈북자 수용, 조속한 통일 지지 등의 태도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추후 심층 분석이 필요함.

다문화 수용성 * 탈북자 수용 견해 (평균비교, 2016)

	다문화 공존	다민족 국가
원하는 사람 모두 받아들여야	3.72	2.85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3.57	2.73
더 이상 받아들여선 안됨	3.41	2.78
F value	40.326***	12.926***

다문화 수용성 * 통일에 대한 견해 (평균비교, 2016)

	다문화 공존	다민족 국가
가능한 한 빨리 통일해야	3.73	2.82
서두르기 보다는 여건 성숙을 기다려야	3.66	2.80
현재대로가 좋다	3.50	2.73
통일에 관심 없다	3.35	2.72
F value	30.931***	2.974*

결론 및 토론

- 분석 결과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 사회적 거리, 탈북자 수용, 탈북자 지원 정책에 대한 태도 등에서 이전보다 부정적인 태도가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최근의 대북정책 현실과 남북간 교류단절, 김정은 체제에 대한 여론의 악화, 보수 언론매체가 주도하는 반복 담론 등의 영향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임.
- 2015년 조사에서는 20대 젊은 층의 부정적 태도가 부각되었으나, 2016년 조사에서는 20대와 30대의 태도가 수렴되는 한편 60대 이상 고령층의 탈북자 거리감이 확대되는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 탈북자를 보는 인식이 연령, 교육수준, 소득 등에 따라 고정되기보다는 계속 변화하는 양상을 보임. 부정적 태도의 강화 경향과 더불어 이러한 '유동성'의 요소들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탈북자에 포용적 태도, 조속한 통일에 대한 기대, 북한 지원에 대한 지지 등이 다문화 수용성과 연관성을 보인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즉, 북한-통일-탈북자 문제는 한반도에 특수한 '민족적' 쟁점인 동시에, 문화 다양성과 민족·종족적 소수자를 수용하고 통합하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보편적' 과제와도 맞닿아 있다는 점이 나타남. 이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분석이 축적될 필요가 있음.